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 주최 국내학술회의

한국인의 평화사상

2017. 10. 12  오후 1:30~6: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정 및 내용

인사말 :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부. 13:40~ 15:20

사회 : 이찬수 (서울대)

- 발표1** **최시형의 평화사상**
김용휘 (한양대) / 토론 : 성해영 (서울대)
- 발표2** **박완서의 평화사상**
방민호 (서울대) / 토론 : 임정연 (안양대)
- 발표3** **윤이상의 평화사상**
이경분 (서울대) / 토론 : 이희경 (연세대)

2부. 15:40~ 18:00

사회 :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 발표1** **김대중의 평화사상**
김학재 (서울대) / 토론 : 김근식 (경남대)
- 발표2** **박정희의 평화사상**
조동준 (서울대) / 토론 : 전재호 (서강대)
- 발표3** **문익환의 평화사상**
김형수 (『문익환 평전』 저자) / 토론 : 최형묵 (한신대)
- 발표4** **리영희의 평화사상**
서보혁 (서울대) / 토론 : 이대근 (경향신문)

목 차

1부.

최시형의 평화사상

- 발표문_ 김용휘 (한양대) 09
토론문_ 성해영 (서울대) 23

박완서의 평화사상

- 발표문_ 방민호 (서울대) 27
토론문_ 임정연 (안양대) 45

윤이상의 평화사상

- 발표문_ 이경분 (서울대) 49
토론문_ 이희경 (연세대) 67

2부.

김대중의 평화사상

- 발표문_ 김학재 (서울대) 73
토론문_ 김근식 (경남대) 97

박정희의 평화사상

- 발표문_ 조동준 (서울대) 101
토론문_ 전재호 (서강대) 127

문익환의 평화사상

- 발표문_ 김형수 (『문익환 평전』 저자) 131
토론문_ 최형묵 (한신대) 149

리영희의 평화사상

- 발표문_ 서보혁 (서울대) 153
토론문_ 이대근 (경향신문) 177

한국인의 평화사상

1부

최시형의 평화사상

발표문_ 김용휘 (한양대)

토론문_ 성해영 (서울대)

박완서의 평화사상

발표문_ 방민호 (서울대)

토론문_ 임정연 (안양대)

윤이상의 평화사상

발표문_ 이경분 (서울대)

토론문_ 이희경 (연세대)

해월 최시형의 평화 사상

김용희 (한양대)

1. 머리말, 전쟁위기의 한반도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로 촉발된 북미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많다. 사실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전체를 따져 보면 세계 경제는 1% 하락하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군수산업과 석유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니 지금의 위기로도 군수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험을 감행할 것인지는 어떤 요인을 더 중시하는가에 달렸다.

문제는 지금 한반도 문제, 우리의 목숨이 달렸을 수도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의 칼자루를 미국 정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의 태도, 추가 도발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이는 결정적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 추가 도발을 안 하더라도 전쟁을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도 있고, 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벼랑끝 전술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고 있다는 데 김정은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전쟁 위기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안보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처럼 한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고 압박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물론 정부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채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안보전

략이 과연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우리의 생명줄을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맡겨놓는 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 동학의 수운이라면, 해월이라면 어땠을까? 19세기 조선의 상황도 지금과 별반 다르진 않았다. 이 글은 애초에 보국안민의 우리 학문으로 출발한 동학의 평화사상을 해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사상이 오늘날 한반도 위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보국안민의 학

수운(水雲 崔濟愚, 1824~1864)의 동학은 애초에 구도 동기 자체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는 오랜 세도정치의 폐해 속에서 조정은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지방은 수령들의 학정으로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었다. 게다가 서양 제국들의 아시아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종주국으로 여겨왔던 중국마저 손수무책으로 당하자 다음 차례는 조선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던 때였다. 그래서 수운은 “우리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하시라도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¹⁾ 라고 탄식하였다.

경상감사의 장계에 따르면 수운은 처음에는 직접 칼을 들고 서양의 침략에 대비할 뜻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수운은 검무를 추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경대전에는 어디에도 검무에 대한 강조는 없다. 보국안민의 계책을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에서 찾던 짧은 시기가 있었을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정리된 동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더 이상 칼로 방비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고, 대신 주문과 영부라는 다소 신비적인 처방을 보국안민의 대책으로 내놓는다. 이는 수운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수운은 당시의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만 돌리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종교창시자들처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마음에서 찾았다. 수운은 옛 사람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하늘과 분리되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各自爲心)에 빠졌다고 보았다.²⁾ 하늘과 단절되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위기의 근본원인이

1) 최제우, 『동경대전』, 『포덕문』

2) 같은 글

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각자위심이 탐욕을 낳고 교만과 사치를 낳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착취와 억압, 차별과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세도가의 권세나 수령들의 폭정이나 그 근본원인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운이 경신년(1860) 4월에 하늘을 다시 만난 감격과 더불어서 얻은 해답은 직접적으로 서양 제국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든지 굶주리는 백성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하늘과 유리되어 황폐해진 마음을 생명의 근원적 샘에 다시 잇고 치유함으로써 본성을, 신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기의 마음에 갇든 하늘을 먼저 발견하라는 것이 수운의 핵심 가르침이었고, 이는 나중에 시천주(侍天主)라는 하나의 철학적 명제로 정립되었다. 여기서 주문과 영부는 이러한 이기심을 하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수련의 방편으로서 주어졌던 것이었다. 그래서 주문은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라 했고, 영부는 한울의 기운을 형상화 한 것으로, ‘가슴 속에 감춰둔 불사의 약’이라고 하였다. 주문과 영부를 통해 한울 마음을 회복하고, 한울의 기운과 합치되는 공부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라고 했던 것이다.

수운은 이러한 수련의 원리는 ‘수심정기’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수심정기는 내 안의 한울 마음을 회복하여 그 마음을 오롯이 지켜내고, 나의 기운을 한울 기운과 조율함으로써 기운을 바르게 하는 동학의 공부법이다. 그리고 그 방편이 주문과 영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심정기가 되면 저절로 마음과 기운이 봄날의 기운처럼 화해지는 것을 ‘심화기화’라고 하였다. 말 그대로 몸의 기운이 편안하고 마음 속 깊이 평화가 깃든 상태를 말한다. 해월은 심화기화가 되면 몸의 병도 저절로 낫는다고 하였다. ‘심화기화’가 치유의 원리라고 본 것이다.

한편, 수운은 당시의 시대를 ‘다시개벽’의 시대라고 보았다. 개벽은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운은 “개벽후 오만년에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라고 하였고 ‘십이제국 괴질 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하여 5만년 전 하늘과 땅이 열려 인간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와 같은 문명적 차원의 커다란 전환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보았다. 신일철은 개벽사상을 시운이 다한 왕조사회의 멸망을 예언하고, 서민들이 군자가 되어 새로 건설할 ‘군자공동체’로서의 지상천국을 대망한 ‘왕조해체기에 나타난 혁명적 변혁사상’이라고 평가하였다.³⁾ 따라서 수운의 개벽사상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인간의 절대평등과 평화공존을 염원한 현세적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수운은 ‘불연기연’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을 통해 갈등과 분쟁 해소의 방법론

3)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 사회비평사, 1995, 61쪽

을 내놓기도 하였다. 불연기연은 ‘아니다·그렇다’의 역설의 논리이며, 서로 상반되고 대립된 것을 일치시키는 ‘반대일치의 논리’이다.⁴⁾ 수운은 불연기연의 논리를 통해 드러난 차원의 이면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어서 겉으로는 모순, 반대되는 현상도 근원에서는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수운의 사상은 직접적으로 평화를 논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천주의 사상이나 수심정기의 수련법이나 다시개벽의 역사관, 그리고 불연기연의 논리는 모든 존재들이 그 자체로 거룩하며,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한울 기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지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월의 생애와 문제의식

1) 해월의 생애

수운의 뒤를 이은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4~1898)은 평민 출신으로서 수운의 가르침을 민중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동학을 평민의 철학이자 민중의 종교로 또한 생명과 평화의 사상으로 정립했다. 그런가 하면 민중의 고난으로 응축된 분노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890년대의 상황 속에서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를 정면에 내걸고 민중혁명의 깃발을 올리기도 하였다. 결국 그는 민란의 주모자로 잡혀서 처형되었다.

해월의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초명은 경상(慶翔),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다. 아버지는 종수(宗秀)이며, 어머니는 월성 배씨(月城裴氏)이다. 5세 때 어머니를,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조지소(造紙所)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19세에 밀양 손씨(密陽孫氏)와 결혼한 뒤 처가가 있는 흥해에서 살다가, 28세 때 경주 승광면 마복동(현 포항 신광면)으로 이사하여 마을의 집강(執綱) 일을 맡아 잘 처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33세 때 검곡(劍谷)으로 이사했다.

수운이 동학을 포교하기 시작한 1861년(철종 12) 6월 동학에 입도했다. 한달에 3, 4차례씩 수운을 찾아가 가르침을 들었다. 1862년 3월 수운으로부터 포교에 힘쓰라는 명을 받고

4) 이돈화, 『동학지인생관』, (천도교중앙총부, 1974년) 19쪽.

영해·영덕·상주·홍해·예천·청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863년 7월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었고, 8월 도통(道統)을 전수받았다. 그해 12월 수운이 체포되자 관헌들의 눈을 피해 옥바라지를 하다가 수운의 명교(命敎)를 받고 태백산·안동·평해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1864년(고종 1) 3월 수운이 처형되자 다음해 1월 평해에서 울진으로 거주를 옮겨 수운의 부인과 아들을 보살폈다. 같은 해 6월 영양으로 이사한 후 수도에 힘써 1년에 4차례씩 49일 기도를 하였다.

1866년 10월 수운의 탄신일에 모여든 교도들과 함께 계를 조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년에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흩어진 교도들을 재결속시키고 신앙을 다져나갔다. 1871년 수운의 기일인 3월 10일에 영해부에서 이필제(李弼濟)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난에 많은 동학교도들이 참가하여 이후 다시 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도피생활을 계속하면서 동학을 재건하고자 노력했다. 1875년 도(道)는 용시용활(用時用活)하는 데 있으니 때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하여 이름을 때를 따라 순응한다는 뜻의 시형(時亨)으로 바꾸었다.

1878년 접소(接所)를 열고 교도들에게 접제(接制)의 통문(通文)을 돌려 수운의 뜻에 따라 도를 펼 것을 알렸다. 1880년 5월 인제군 김현수(金顯洙)의 집에 경전간행소를 세우고 <동경대전>을 간행했고, 1881년에는 단양 샘골 여규덕(呂圭德)의 집에 경전간행소를 마련하여 <용담유사>를 간행했다. 1883년에는 목천군 김은경(金殷卿)의 집에 간행소를 세우고 <동경대전> 1,000여 부를 간행·보급했다. 1884년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의 육임제(六任制)를 정하여 교단을 정비했으며 이후 교세를 충청도와 전라도에까지 확장했다.

1892년 7월 호남의 접주 서인주(徐仁周)·서병학(徐丙鶴)이 찾아와 교조신원운동을 펼 것을 주장하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충청도관찰사에게 소장을 내고, 많은 교도들도 교조신원운동을 주장하자 이에 동의하여, 11월 삼례역(參禮驛)에 신도들을 모 집, 교조신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신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12월에는 정부에 상소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자 1893년 2월 서울로 상경하여 광화문 앞에서 복합 상소를 올리도록 했다. 귀가하여 생업에 종사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을 듣고 해산했으나 이후 탄압이 더 심해지자 그해 3월 약 2~3만여 명의 신도들이 보은에 집결하여 교조신원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세우면서 약 20일간 민회를 하였다.

1894년 1월 전봉준(全奉準)이 주도한 고부봉기 소식을 접하고 '이 또한 시운이니 금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도부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때이른 거사임을 힐책했다. 하지만 3월 20일경 전면 기포하고, 그에 호응하여 여러 지방에서 접주와 교도들이 농민군을 조직하여 봉기하자 4월 초에 통문을 내려 청산으로 소집령을

내리기도 하였다.⁵⁾ 이때 모인 동학교도들은 4월 8일 회덕을 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4월 9일 진잠으로 향했으나 4월 10일 청주 진남영병과 옥천 병정의 공격을 받고 격파당하였다. 4월 18일에는 괴산, 연풍 등지에서 다시 농민군들이 봉기해 토호들의 재산을 빼앗고 구타하기도 하였다. 해월은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온건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동학농민군에게 「금석지전」이란 통문을 발표하여 일체의 탈취와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해월은 당시 수령들의 학정과 특히 동학도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대해 마땅히 일어나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받아 와서 남북점이 대립했다든지 심지어는 남점을 치려고 했는지 하는 잘못된 견해가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여 서울의 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자 9월 18일 총기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11월 10일경 우금치 전투에서 통한의 패배를 당하였고, 이후 임실에서 손병희의 북점군과 함께 11월말 다시 북상하여 장수 무주를 거쳐 황간, 영동까지 올라갔으나, 보은 북실에서 다시 공격을 당해 수백 명이 몰살당하고 12월 24일 충주 외서촌 되자니에서 최후 전투를 치르고 해산하게 되었다. 이후 피신생활을 하면서 교세를 수습하고자 힘을 기울였고 1897년 12월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했다. 1898년 3월 원주 송골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월 반란의 주모자로 교수형을 당했다.

2) 시대인식과 문제의식

해월은 당시 시대를 선천과 후천의 운수가 갈아드는 개벽의 운수로 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핀 수운의 시운론적 역사관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를 5만년 만에 맞는 엄청난 전환의 시기로 인식하고, 이러한 엄청난 변동의 시기이므로 모든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이 세상의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선천과 후천의 운이 서로 엇갈리어 이치와 기운이 서로 싸우는지라, 만물이 다 싸우니 어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는가.⁶⁾

5) 박맹수, 「동학농민혁명기 해월 최시형의 활동」,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모시는사람들, 2011, 281-285쪽.

6)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

해월은 당시의 시대를 ‘불안’이라는 심리적 기조로 포착하는 한편, 이러한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인간들의 싸움이 없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그는 이 전환기를 거쳐 “새 한울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과도기적 혼란, 즉 낡은 정치는 물러갔지만 새 정치가 아직 펴지 못하여 큰 난리가 예상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심개벽이니 장래 물질발명이 그 극에 달하고 여러가지 하는 일이 전례없이 발달을 이룰 것이니, 이때에 있어서 도심은 더욱 쇠약하고 인심은 더욱 위태할 것이며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⁷⁾

당시를 이렇게 큰 전환기로 생각하는 그는 이 난리를 거쳐 새로운 도와 덕이 나와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문명이 건설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새로운 도와 덕은 당연히 동학의 도와 덕일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문제의식은 스승이 내놓은 도를 깨달아 그것을 천하에 퍼는 일(布德天下)이었다. 다만 그는 순서에서 우리나라 운수를 먼저 좋게 하는 보국안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널리 창생을 건지는 광제창생을 함으로써 후천 오만년 내려갈 지상낙원을 만드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단지 왕정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관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세적 유토피아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해월은 스승의 가르침을 평민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민중의 삶 속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해월은 스승의 ‘시천주’ 가르침을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당시 핍박받던 민중, 특히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하늘님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또한 천지를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천지부모의 사유를 내놓았으며, 자연만물까지도 공경하는 경물(敬物)에까지 나아가야 도덕의 극치가 된다고 함으로써 동학을 생명사상으로 정립했다. 해월은 공경을 일상에서 생활화해 동학적 인간상을 정립하고 동학적 인격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규성은 “해월 최시형은 최제우의 제자가 되어 무극대도와 만물에 대한 종교적 경외심을 마음속 깊이 경험했다. 최제우는 우주와 인간의 공격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원한 관계라는 모든 부정적 관계를 조화로 이끄는 화해와 평화의 덕을 한몸에 집약하고 있었다.”⁸⁾라고 평가했다. 동학을 비로소 참다운 민중의 종교로 재탄생시킨 것은 해월의 공이며 그의 사상은 계

7)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기타』

8) 이규성, 『최시형의 철학』, 이대출판부, 2011, 10쪽.

급해방을 넘어 남녀해방, 어린이해방을 촉구하였으며, 경물의 생태적 해방에까지 이르러 모든 생명들이 한울로 존중받는 평화공존의 세상을 꿈꾸었다고 할 수 있다.

3. 해월의 평화와 개혁의 길

1) 도와 덕이 사람 살리는 기틀이다

해월의 사상은 동학사상의 특징은 평민의 사상이라는 점에 있으며, 모든 생명에 대한 ‘공경과 살림’을 중시하는 생명사상이자 평화사상이라는 데 있다.

해월이 직접 평화를 언급하는 구절은 두 구절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

남계천이 문기를 「세 가지 재앙은 어떻게 면합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삼재 가운데 전란을 피하는 일이 가장 쉬우니, 적병이 습격하여 와서 인명을 살해할 때에 의기 남아로 하여금 적군의 앞에 나아가 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평화를 공작하면 가히 면할 것이요, 흉년은 처음 평년부터 절용하여 칠년간의 양식을 저장하여 둘 것이니라. 천리가 아직까지는 칠년 흉년은 없었느니라. 가히 흉년은 면할 것이니, 이것은 사람 사람이 단결하고 협력하면 가능할 것이요, 질병은 사람이 다 수심정기 하여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능히 면하리라.」

남계천이 삼재(三災)를 면하는 방법을 묻는 대답에서 나온다. 어떻게 보면 다소 나이브한 답변으로 볼 수 있지만 요점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치루기보다는 외교적인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언급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손병희 문기를 「전란을 당하면 각국이 서로 병기를 가지고 승부를 결할 것이니, 이 때를 당하여 우리 도인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 어떤 좋은 생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전쟁은 다만 병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은 없느니라. 병전을 능가하는 것은 책전이니, 계획이 지극히 큰 것이니라. 서양의 무기는 세상 사람이 견주어 대적할 자 없다고 하나 무기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요, 도와 덕은 사람 살리는 기틀을 말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때를 당하여 수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함이 옳으니라.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큰 평화가 있는 것이

니, 전쟁이란 평화의 근본이니라. 사상은 동방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느니라. 구름이 서산에 걷히면 이튿날이 맑고 밝으니라.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썩었다고 버릴 것이 없나니, 한 사람을 한번 버리면 큰일에 해로우니라. 일을 하는데 있어 사람은 다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이 있으니, 적 재적소를 가려 정하면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오도지운)

이 구절에서는 부득이하게 전란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런데 해월은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책전을 통해 해결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기틀은 도와 덕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수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큰 전쟁 뒤의 큰 평화라는 것은 그가 지금을 큰 혼란기로 보고 있으며 이후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개혁적 역사관에 입각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는 인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 다소 의아스러운데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사람을 가려서 시비를 하고 분당을 함으로써 생기는 갈등과 분란을 경계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전란과 같은 큰일을 당했을 때, 또한 전란 이후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일수록 탕평인사와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이후 손병희의 「삼전론」(1904년)으로 정립된다. 삼전론은 도전, 재전, 언전을 의미한다.

위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도와 덕이 사람 살리는 기틀이다.”라는 구절이다. 도와 덕이 평화의 기틀이다. 동학의 도는 천도(天道)를 말한다. 즉 우주의 운행원리이자 생명의 원리이다. 수운은 이를 ‘무위이화(無爲而化)’라고 풀이한 바 있다. 해월은 이 무위이화를 “사람이 만물과 더불어 천도와 천리에 순응하는 우주만유의 참된 모습”⁹⁾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만물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말한다. 그런데 서양의 제국주의 문명은 천도와 천리를 어기고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적 길로 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서 도와 덕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룩하는 길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덕(德)은 그 무위이화의 천도를 깨달아 그 삶의 방식을 나의 인격과 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수운과 해월이 의미한 ‘포덕천하’의 의미이다.

2) 마음의 평화와 기운의 평정

대부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동학 역시 종교이므로 세상의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

9)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기타」

에 앞서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수운은 ‘심화기화(心和氣和)’라는 말로 표현했다. 해월 역시 ‘심화기화’가 몸의 치유는 물론 세상의 치유의 근본이 된다고 보았다.

南辰圓滿脫劫灰 남쪽별이 둥글게 차고 겁회를 벗어나니
 東海深深萬里清 동해가 깊고 깊어 만리에 맑았어라.
 千山萬峰一柱綠 천산 만봉은 한 기둥처럼 푸르고
 千江萬水一河清 천강 만수는 한 하수처럼 맑으니라.
 心和氣和一身和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니 온 몸이 화하고
 春回花開萬年春 봄이 돌아오고 꽃이 피니 만년의 봄이로다.
 青天白日正氣心 청천백일에 기운과 마음을 바르게 하니
 四海朋友都一身 사해의 벗과 벗이 모두 한 몸이로다.¹⁰⁾

이 시는 태백산에서 49일 공부를 마치고 읊은 일종의 오도송이다. 평민으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쫓기는 몸이 되었지만, 해월은 늘 그 와중에서도 수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마침내 마음이 활짝 열렸다. 이 때 열린 마음의 세계는 봄의 기운으로 가득한 평화의 세계였다. 이 시는 마음이 화해지고 기운이 화해지니 온 몸이 화해진다고 했고, 심화기화가 되어야 세상의 봄이 오고 문명의 꽃이 피어서 만년을 내려갈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사해의 모든 벗들이 한몸처럼 어우러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수운은 동귀일체(同歸一體)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러한 심화기화는 수심정기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과 기운이 한울의 기운(至氣)과 잘 조응된 상태이며, 내 몸과 마음의 테두리가 해체되어 한울의 지극한 기운과 합치된 상태이다. 해월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사람의 성령은 한울의 일월과 같으니, 해가 중천에 이르면 만국이 자연히 밝고, 달이 중천에 이르면 천강이 자연히 빛나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¹¹⁾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해월은 성인의 절개는 겨울 산마루에 외로운 소나무와 같아서 홀로 봄빛을 띤다”(聖節如冬嶺孤松 獨帶春光)고 하였다. 마음의 깊이는 평화가 흘러넘치면 몸에 온화한 봄기운으로 드러나고 그 힘이 주변을 밝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된다.

10)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강시」

11)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수심정기」

3) 사해동포주의

해월의 평화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의 사해동포주의이다. 해월은 삼경(三敬)을 강조하면서 경천이란 공중의 한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며,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동포임과 나아가 모든 만물이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울을 공경함은 결단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한울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한울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위의 구절을 보면 해월에게 한울은 공중의 하늘이나 인격적 절대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월에게 한울은 마음인 동시에 천지이다. 이는 수운의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를 좀더 세속화하여 소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해월의 경천은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임과 동시에 천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천지를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부모처럼 공경한다는 것이다. 천지가 나의 부모라면 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은 나의 형제자매가 된다. 그래서 인오동포, 물오동포라는 사유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천지부모는 생명사상이면서도 사해동포주의적인 평화사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유가 천도교에 와서 ‘인내천주의’, ‘범인간적 민족주의’, ‘세계일가주의’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동학·천도교를 단순히 민족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동학은 보국안민이라는 당면한 민족적 과제를 간과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염원하며 세계일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4) 공경과 살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월의 사상은 만유와의 우주적 연대성에 의거한 화해와 공경의 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 삼경(三敬)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살림’의 실천으로 드러났다. 수운이 시천(侍天), 모심을 강조했다면, 해월은 양천(養天), 살림을 강

조했다. 해월은 모심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양천주(養天主)의 기름과 살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²⁾ 따라서 그의 모든 실천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살림은 죽임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살림이며, “인간이 자기와 이웃과 자연 안에 내재해 있는 우주 생명을 키움으로써 ‘자아’와 ‘공동체’와 ‘생태계’의 공진화를 도모하는 것”¹³⁾이다.

이 살림은 때로는 죽임의 폭력, 기존 봉건 세력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도 그러한 살림운동의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갑오 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사람을 원망하고 한울을 원망하나 이후부터는 한울이 귀화하는 것을 보이어 원성이 없어지고 도리어 찬성하리라.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 일이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니라

이 뒤에 또 갑오년과 비슷한 일이 있으리니 외국 병마가 우리 강토 안에 몰려들어 싸우고 빼앗고 하리라. 이 때를 당하여 잘 처변하면 현도가 쉬우나, 만일 잘 처변치 못하면 도리어 근심을 만나리라.¹⁴⁾

해월은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반봉건, 반제국의 민중 혁명일뿐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외친 개혁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조선말기 사회의 대내외적 모순에 대한 민(民)의 생존적 울부짖음이었으며 불의하고 무능한 권력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이었으며 외세에 굴종하는 정부와 벼슬아치에 대해 목숨으로 민족적 자존을 지킨 항거였다. 또한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현실의 모순과 불평등을 개혁하자는 자발적 정치운동이자 모든 사람들이 한울님으로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 개혁운동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해월의 사상은 ‘공경과 살림’의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후에 3.1운동으로 1920년대 어린이운동을 비롯한 문화운동,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3.1운동은 독립선언서에서도 표방했듯이 비폭력 평화운동이자 ‘도의적 신문명’을 열망하는 개혁운동이었다. 1920년대 문화운동과 해방공간에서의 통일운동 역시 해월의 살림 사상과 천도교의 인내천에 바탕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히 넘어서고자 했던 신문명 운동의 일환이었다.

12)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양천주」, 367쪽.

13) 모심과살림연구소, 앞의 책, 76쪽.

14)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오도지운」

4. 현대적 의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해월의 평화사상은 현세적 유토피아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해월의 사상은 종교사상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깊은 평화가 가져오는 힘과 인오동포·물오동포의 사해동포주의적 평화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해월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치루기보다는 외교적인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쟁이 일어나도 직접적인 병전보다는 책전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를 개혁의 운수로 보는 그는 큰 전란이 한번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수도에 더욱 힘써서 진정한 도덕 문명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평화사상은 한마디로 공경과 살림의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천지를 한낱 물리적 자연으로만 보지 말고 부모님처럼 섬기라고 하였고, 그렇기에 거기서 난 모든 사람과 만물이 하나의 형제자매라고 설파했다. 이러한 만유와의 우주적 연대성에 의거한 화해와 공경, 그리고 살림의 정신이 그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폭력과 전쟁이 생명의 연대성에 대한 자각 없이 상대방을 꺾어내고 수단화할 때 일어난다고 볼 때 해월의 공경과 살림의 철학은 비록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해월의 사상은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적 담판과 책전을 강조하였고, 도와 덕이 사람을 살리는 기틀이라고 한 해월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한미안보조약이라는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무기로 삼아 보다 담대하게 외교적 담판을 통해 전쟁을 막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6자회담 복귀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화해의 장을 우리 정부 주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현실 논리보다 담대한 이상을 가슴에 품고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큰 전략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도 수도를 통한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깊은 마음의 평화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토론〉
「해월 최시형의 평화 사상」에 대한 논평
: “현세적 유토피아의 ‘역설(paradox)’”

성해영 (서울대)

종교적 깨달음과 보국안민(輔國安民)

김용휘 교수의 논문 「해월 최시형의 평화 사상」은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의 사상을 계승한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4~1898)의 종교적 평화 사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 교수는 “해월 최시형은 평민 출신으로서 수운의 가르침을 민중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동학을 평민의 철학이자 민중의 종교로 또한 생명과 평화의 사상으로 정립”(3p)한 인물로 정의한다.

논문 필자에 따르면 해월은 수운과 마찬가지로 당시 인류가 “선천과 후천의 운수가 같아 드는 개벽의 운수”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엄청난 전환의 시기”이자 “변동의 시기”이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파악하며, 단순한 왕정의 종식이 아닌 더 큰 차원에서 역사적 발전을 꿈꾼 해월이었지만, 그의 사상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세적 유토피아 사상의 한계’를 갖는다고 논문 필자는 지적한다. (5p)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필자는 해월이 득도(得道)를 통해 동학을 창도한 수운의 가르침을 “평민의 언어로 재해석”해 구체적인 삶의 실천 덕목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해월이 수운의 ‘시천주’ 가르침을 ‘사인여천’의 가르침으로 변화시켜, 여성과 어린이들도 한울님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천지부모(天地父母)의 사유”와 함께 자연 만물을 공경하는 ‘경물(敬物)’의 덕목이 “도덕의 극치”로 기능해야한다는, 시대를 앞선 생명 사상을 펼쳤다는 것이다. (6p)

나아가 논문 필자는 해월의 종교적 평화 사상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한다. ‘도와 덕에서 찾는 사람 살리는 기틀’, ‘마음의 평화와 기운의 평정’, ‘사해동포주의’, 그리고 ‘공경

과 살림'이 그것이다. 한편 해월의 이런 가르침들은 수운과 해월의 종교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후천 개혁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선천은 물질개혁이요 후천은 인심개혁이니 장래 물질발명이 그 극에 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전례 없이 발달을 이룰 것이니, 이때에 있어서 도심은 더욱 쇠약하고 인심은 더욱 위태할 것이며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¹⁾

요컨대 수운과 해월은 인류가 물질적 발달을 거쳐 정신적 성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접어들 것을 19세기에 이미 예견했던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행동 방식이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자리잡아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개인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아차리는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에 근거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취할 때 혼란으로 가득한 현실이 순리와 천도에 부응한 곳으로 전변(轉變)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운과 해월의 주장은 비교종교학의 개념 중 하나인 '현세 지향적 신비주의(inner-wordly mysticism)'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세 지향적 신비주의(Inner-worldly mysticism)의 역설

수운의 가르침을 민중화한 해월의 평화 사상은 개인의 종교적 수행과 이로 인한 깨달음 혹은 득도의 체험이 현실 변화의 힘이 될 것을 강조한다. 그 점에서 해월의 주장은 개인이 수행을 통해 궁극적 실재 혹은 참된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에 입각해 행동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적 세계관과 상통한다.²⁾

동시에 수운과 해월의 사상은 자타의 분리를 포함해 일체의 이원성을 소거하는 신비주의가 통상 초월적 차원에 경도되기 십상인데 반해, 철저히 현세적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명상(contemplation)과 행동(action)'의 일치를 강조한다.³⁾ 즉, 해월은 개인의 수행에 의한 신비주의적 통찰을 철저히 현실 변화의 근거

1)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기타」

2) 신비주의란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체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에 기초해 궁극적 실재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해영,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유용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3) 누가복음(10:38-42)에 묘사된 마리아와 마르타의 사례는 관상(觀想) 수행과 사회 참여적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긴장을 상징한다. 또 불교의

로 삼았다. 그 점에서 성속(聖俗)의 두 차원을 종교적 평화 사상을 통해 통합시키려 시도한다. 이런 사실은 논문 필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불연기연(不然其然)’이라는 이분법적 통합의 명제로 기술되고 있다.

한편 수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월의 현세 지향적 신비주의는 논문의 주장처럼 “현세적인 유토피아”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비실재성을 강조하며 초월을 희구하는 신비주의가 도리어 현실의 질곡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혁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세 지향적 신비주의는 근원적인 역설을 내포한다. 이런 역설은 해월의 ‘현세적 유토피아’ 사상에서도 여실히 목도된다. 그러나 이 역설은 한편으로 해월 사상의 부정함으로도 간주될 수 있지만, 역동적인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동학의 독특성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현세적 유토피아의 빛과 그림자

개인의 수양과 깨달음에 근거해 전개되는 해월의 현세적 유토피아 사상이 갖는 강력한 빛은 동시에 짙은 어두움으로도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첫째, 개인의 신비주의적 체험에서 현실 변혁의 원동력을 모색하는 시도는 시공의 맥락을 초월한 차원에서 현실 변화의 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강조하는 종교가 현실의 질곡을 초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강력한 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종교적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utopia)를 찾는 허망한 노력이 되기도 쉽다. 실제로 수운과 해월이 언급한 개혁의 세계는 당대의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사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다. 게다가 그들이 꿈꾸었던 평등한 세상은 그 당시에 개인/집단/국가 간 불평등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종교적 이상이 현실의 질곡을 전변시키는 유효한 동력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는 모든 종교적 이상주의가 답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논문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둘째, 위 물음과 연관시켜 평화와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종교적 세계관은 이를 훼손하는 폭력에 맞서 폭력적 방식을 택할 때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출세간적 경향과 도교의 자연주의적 윤리관을 사회적 차원이 간과되어 있다고 유교 전통이 비판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의 논쟁이다.

논문 필자의 지적처럼 해월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폭력적 상황에서 종교적 이상과 현실적 요청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에 맞서 폭력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폭력이 종교적 가르침이 구현하길 원하는 이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에게 「금석지전」이란 통문을 발표하여 일체의 탈취와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해월은 당시 수령들의 학정과 특히 동학도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대해 마땅히 일어나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다.(4p)

요컨대 폭력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을 동학과 이후의 천도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논평자의 두 물음에 명확한 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종교사에서 수많은 사례로 확인된다. 이상과 현실의 해소하기 어려운 긴장을 포함해 개인적/집단적 공격성과 폭력의 동기와 의미가 단숨에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수운과 해월이 굳건하게 설파한 후천개벽이 상징하듯이 인류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접어들었다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평화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와 가능성이 출현하지는 않았을까? 단순한 희망이나 순진한 이상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공교육의 확산 등 일찍이 목도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 변화가 평화 담론의 장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논평자 역시 논문 필자의 다음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운과 해월의 개벽 사상이 지금 이 시기에 미처 발휘하지 못했던 설득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무기로 삼아 보다 담대하게 외교적 담판을 통해 전쟁을 막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6자회담 복귀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화해의 장을 우리 정부 주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10p)

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과 6·25 전쟁의 성찰

방민호 (서울대)

1. 세대론의 맥락에서 본 박완서의 6·25 전쟁 문학

박완서(1931~2011) 문학은 6·25 전쟁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그려낸 작가다.¹⁾ 그녀가 40세 되던 해 등단작인 『나목』(1970)부터 그렇고, 이 글의 주제를 이루는 『목마른 계절』(1978)과 또 다른 문제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3) 모두 6·25 전쟁에 관련된 것이다.

박완서의 6·25 전쟁 문학은 적어도 두 갈래의 전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처럼 전쟁의 사회사적 경과 과정이나 여파를 넓고 깊게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쟁에 대한 회상을 서사화하는 것이다. 『나목』에서 출발한 박완서 소설은 이 두 개의 방향을 모두 내장하면서 서로 뒤엎히는 양상을 보이지만 『목마른 계절』을 거치면서 나타난 자전적 계열의 소설들, 「엄마의 말뚝」 연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은 후자의 경향을 대표하는 문제작들이다. 여기서 필자의 가설은 박완서 문학이 『나목』에서 『목마른 계절』로 나아간 이후 두 개의 방향으로 갈래를 쳐나갔다는 것이다.

6·25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정치학에서만 아니라 한국문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장용학(1921~1999)은 『원형의 전설』(『사상계』, 1962.3~11)에서 전쟁을 원형, 곧 완전한 사상에 다다르기 이전, 불완전한 두 이데올로기의 투쟁으로 이해했으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두 근대사상의 대립을 폐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근대성 또는 근대사상을 보편 개념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이념의 한계를 살피고 그 너머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는 한국문학을

1) 이 글에서 필자는 의식적으로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이념 초월적인 수준에 올려놓으려 했다 할 수 있다. 장용학, 이병주(1921~1992), 손창섭(1922~2010), 박경리(1926~2008) 등 1920년대의 작가들은 6·25 전쟁을 실존주의의 맥락에서 인간 개체의 생존을 억압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식했고 그 이념 전체에 맞서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성찰하려 한 작가들이었다. 이들은 문학사적으로 “학병세대”(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7)로 명명되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불확실하게 전후작가들이라 통칭되기도 하며, 혹은 1920년대 전반기 출생 작가 그룹으로 분류된다. 세대론적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식민지 시대의 한복판에서 출생하여 성장 및 학업 과정을 일제 말기까지 치러낸 사람들이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각각 지나사변과 대동아전쟁으로 부르며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대신 일본 국민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도록 강요한 일본 내셔널리즘의 영향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다. 그들은 해방과 동시에 냉전체제, 분단, 6·25 전쟁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세계사적 경험에 직면해야 했고, 해방 전과 해방 후 또는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이라는, 두 개의 시대 또는 두 개의 전쟁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사람들이었다.

박경리와 박인환은 이 세대의 가장 젊은 축이었다. 박경리는 『시장과 전장』(1964)에서 지영이라는 젊은 여성을 내세워 불모의 전쟁과 실존적 삶의 의지를 대립시켰다. 전쟁은 그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근본적 견지에서 보면 지극히 허무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 초극적, 초월적 시각은 비록 6·25 전쟁 직전에 씌어진 문장이지만 동세대의 시인 박인환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나는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에 이반된 언어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²⁾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도, 우익뿐만 아니라 좌익도 고대 그리스의 자유민으로서의 ‘시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로부터 벗어난 언어작용만을 일삼고 있다는 통찰은 일제말기 태평양전쟁을 겪고 해방공간과 6·25 전쟁을 통과해야 했던 이 세대의 이념 이데올로기 ‘부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6·25 전쟁에 대해 1940년 전후 출생 작가들은 이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이 세대의 작가들은 한글세대 또는 4·19세대 작가라고도 불리는데, 이 명명법은 그들의 세대론적 위상을 잘 드러낸다. 1920년대 전반기 출생자들과 달리 6·25 전쟁은 ‘연속된’ 두 개의 전쟁 중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유소년기 체험으로 나타난다. 이청준(1939~2008), 천승세(1939~), 한승원(1939~), 전상국(1940~), 이문구(1941~2003), 현기영(1941~), 김승옥(1941~), 조세희(1942~), 박태순(1942~), 김원일(1942~), 윤흥길

2) 박인환, 「장미의 온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산호장, 1949, 68쪽.

(1942~), 조정래(1943~), 황석영(1943~) 등 이 세대의 중요 작가들은 이청준에 있어 ‘전깃불 앞의 방백’(이청준, 「소문의 벽」,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잔인한 도시」 등)이나 이문구, 김원일, 조정래 등에 있어서의 ‘빨갱이’ 아버지와 같이 근원적인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있어 6·25 전쟁 체험은 그들의 작가적 활동의 근간을 이루지만 이 전쟁은 그들이 아닌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벌인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유소년기 체험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을 예컨대 제3세계론 같은 담론들의 영향과 수용 속에서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냉전 체제의 비극으로 비판적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의 원체험을 담론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들의 회귀는 곧 담론적 재구성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황석영의 『손님』에서처럼 그들은 6·25전쟁을 세계사 대 민족사의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다루며 이 속에서 은밀하게 또는 우회적으로 좌 또는 우를 향한 선택적 지향에 기우는 양상을 드러낸다.

박완서는 세대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세대 사이에 끼인 존재로 나타난다. 그녀는 박완서, 한말숙(1931~), 이호철(1932~2016), 최인훈(1936~) 등으로 연결되는 1930년대 전반기 출생 작가 그룹의 앞부분에 놓여 있다. 연보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의 황해북도에 해당하는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출생, 일찍 부친을 여의고 서울 숙명여고, 개성 호수돈여고를 다니던 중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 후 그녀는 숙명여고로 복귀 졸업한 후, 한국 나이로 21세가 되는 1950년 6월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하지만 6·25 전쟁으로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1953년 4월에 결혼하면서 1970년 등단하기까지 역사에 ‘묻힌’ 삶을 살았다.

그녀의 학업 과정은 이호철과 최인훈이 원산에서 성장, 해방을 맞은 후 원산고등학교 재학 중에 6·25 전쟁으로 월남, 신변상 큰 변화를 겪어야 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이호철은 단신 월남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채 독학으로 문학에 나아갔고 일가족이 함께 월남한 최인훈은 목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지만 군 입대와 작가 등단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박완서, 이호철, 최인훈 등의 성장기는 해방에서 6·25 전쟁으로 나아가는 해방공간에 걸쳐 있으며 지적,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념적 대결 양상을 정면으로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그들의 세대적 경험은 최인훈의 문제작 『화두』(1994)에 그 자신의 원체험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최인훈은 중학교 시절 소년반을 지도하던 담임 선생과 고등학교 조명희 단편소설 「낙동강」을 가르쳐 준 국어 선생의 모습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양면적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 원체험의 위력은 『광장』(1961)에서 포로가 된 주인공 이명준이 제3국행을 선택하고 『회색인』(1963~1964)의 주인공 독고준이 ‘양가주망’ 아닌 ‘데가주망’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인훈을 이 세대의 대표자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이와 같은 그의 주인공은, 6·25 전쟁을 알레고리적으로 추상화, 이념화 하여 초극할 수도 없고(장용학),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전쟁의 이념적 성격을 역사적으로 서사화 할 수도 없는(조정래, 황석영) 그들 세대의 고민을 응축해 보여준다.

최인훈, 이호철, 박완서의 세대의 학업 및 성장과정에 이데올로기 대립으로서의 분단 및 6·25 전쟁 체험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들은 그것을 리얼리스틱한 수법으로 ‘헤쳐나감으로써만’ 이념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의 체험에 냉전적, 이념적 대립과 반목, 상쟁이 직접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6·25 전쟁 문제를 일종의 모럴 감각 없이는 취급할 수 없다. 김남천은 일반적 진리에 대하여 “일신상의 진리”를, ‘개인’에 대하여 “자기”를 대립시키면서, 주체로서의 자기를 ‘통과한’ 도덕적 판단, 즉 모럴에 근거한 논리만이 진정한 문학적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³⁾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대의 작가들은 6·25 전쟁 문제를 “일신상의 진리”의 문제, 차원에서 인식한 ‘김남천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6·25 전쟁 담론이 근대성론(장용학)이나 제3세계론(조정래, 황석영)과 달리 자기의 문제로 나타남을, 따라서 일반론을 떠난 자기 탐구의 일부로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 글은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에 나타난 6·25 전쟁 문제를 이와 같은 ‘모럴 감각’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심포지엄의 대주제라 할 ‘평화 사상’이라는 문제를 ‘박완서의’라는 관형어로 한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서울 수복 후 잔류파 ‘부역자’ 처리와 6·25 전쟁의 성찰

6·25 전쟁과 관련하여 그 기록 또는 증언은 적어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유형은 이병기의 『가람일기』(신구문화사, 1975)나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창비사, 2009)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기 유형이며, 그 일부로 김영혁의 『6·25 난중일기』(도서출판 선인, 2015)나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찬웅의 『6·25 일기』(지식산업사, 1990)등을 꼽을 수 있다. 제2유형은 백철의 『진리와 현실』(박영사, 1975)이나 유진오 등에 의해 씌어진 『고난의 90일』(수선사, 1950) 같은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회고록 또는 수기 형식의 저술은 훨씬 더 많이 조사될 수 있다.⁴⁾ 제3의 유형은 박완서나 김동리 등을 위시한 여러 작가

3) 김남천, 「도덕의 문학적 파악—과학·문학과 모럴 개념」, 『조선일보』, 1938.3.8~3.12, 참조.

4) 예컨대, 양주동 백철, 최정희, 송지영, 장덕조, 박계주, 손소희, 김용호, 오제도 등에 의해 씌어진 『적화 삼삭 구인집』(국제보도연맹, 1951)이나 오제도가

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전적 소설들이다. 이 세 개의 유형은 각기 다른 양식적 문법에 의해 씌어진 것으로 6·25 전쟁에 관한 증언적 서술로서 상이한 의미와 역할을 보여준다.

이러한 6·25 전쟁에 관한 증언적 문학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6·25 전쟁 개전 초기에 인민군에 의해 서울이 점령되었던 기간에 관한 ‘기록’이다. 문학사에서 이 문제는 도강파와 잔류파의 문제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이에 관한 연구가 산전된다. 이 문제를 작가 연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의 중요한 논문은 박죽심의 「최정희 문학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이며, 「손소희의 초기 소설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 26, 2008), 서동수의 「한국전쟁기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우리말글』 52, 2011)과 「모윤숙의 피난 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한국문예비평연구』 33, 2010), 김미향의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국어문학』 59, 2015), 김정은의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강호정의 「6·25 전쟁 도강파와 잔류파의 문학적 생존 방식」(『서정시학』 26권 3호, 2016), 김영경의 「적 치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어문연구』 45, 2017) 등도 이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논문들이다.⁵⁾ 이 논문들 가운데 박완서의 소설들을 잔류파의 논리와 정서, 감각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목마른 계절』에 나타난 ‘진’의 태도의 변화 과정이다. 이 소설은 ‘진’의 변모 과정에 대한 하나의 경위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도강파와 잔류파에 대한 분류를 따라 말한다면, 잔류파 가운데에서도 부역자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실로 『목마른 계절』은 6·25 전쟁 중 잔류파 부역자의 심리와 사유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문학 작품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잔류파 부역자 문제는 서울 수복 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이자 이후에도 두고두고 지식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한’ 끈질긴 ‘기억’의 하나였다. 이를 앞에서 언급한 6·25 전쟁 중 ‘적치’ 90일의 경험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유형의 증언 양식 속에서 각기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목마른 계절』은 물론 제3의 자전적 소설의 형식에 속하는 작품으로 이해된다.

편한 『자유를 위하여』(문예서림, 1951) 등.

5) 서동수는 잔류파, 도강파 문제를 다시 잔류파, 지하잠적파, 도강파로 삼분하며(『한국전쟁기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 김미향은 잔류파와 도강파로 먼저 분류하고 잔류파를 다시 잠적파와 부역자로 재분류한다(『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

(가) 김성칠 일기, 『역사 앞에서』 중에서

그러나 아니꼽다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아무런 일이 없건만 교직원은 날마다 하루 한 번씩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계시가 나붙어서 전에는 없던 출근부까지 만들어서 교통도 임의롭지 못한 이즈음 날마다 몇 십리씩 다리품을 팔아야 하게 마련이고, 그나 그뿐인가, 생각난 듯이 새로운 무슨 동태보고서니 무슨 경력조사서니 하여 “오늘 안으로 써내야 한다. 써내지 않는 자는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협박 문구를 벼락식으로 써붙이기가 일쑤이니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서라도, 그 아니꼬운 꼴 보러 학교에까지 터덜거리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집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도 아니 되면 산에 들어가 중이라도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도 그럴 수 없는 노릇이……그럭저럭하다 심사에나 떨어지고 직업에서 튕겨나가거나 한다면 마을에서라도 적색분자(赤色分子)나 혹은 부역자(附逆者)가 아닌가 하는 치의(致疑)를 받기가 겁경일 것이고 그러다 자칫하면 수사기관의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 인간 가치야 떨어지거나 말거나 꼭 참고 배기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때로는 이런 게야말로 ‘인간의 평가절하’가 아닐까 하여 자조(自嘲)하여 보기도 한다. 이런 굴욕을 참는 버릇이 길러지면 늘그막엔 대체 무엇이 될까 하고 스스로 위구(危懼)의 염을 품어보는 때도 있다. 이처럼 사표(師表)로서의 프라이드를 짓밟아버리고 나중에 무슨 낮으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하고 사뭇 송구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낮에 총 메고 술취한 군인이 집에 찾아와서 주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지금은 어딜 갔느냐 하고 으르대다 갔단 말을 들으면 역시 모든 것을 참고 배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참고>

교직원 경력조사서 (3통)

신 경력조사서 (1통)

공무원 동태 조사서 (5통)

<공무원 동태 조사서>

부·국·과명(部局課名), 직위, 직명(職名), 연령, 주소, 성명

조사 사항

1. 자치위원회 관계: 가입 연월일/담당 사무/출근 일수
2. 괴뢰 기관에의 협력 사항: 채용 연월일/지위/담당 업무/출근 일수(월별)

3. 정당 단체의 가입 상태: 당명 또는 단체명/가입 연월일/소개자 또는 권유자 성명
4. 자수서 제출 상황: 제출 연월일/제출 기관/소개자 또는 권유자 성명
5. 기타⁶⁾

(나) 백철의 회고록, 『속·진리와 현실』 중에서

그때의 일은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 서울에 잔류해 있던 문화 지식인들의 부역 여부에 대한 「군경 합동수사반」이란 것이 설치되어 모두 자수 형식으로 출두를 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나 역시 며칠 동안 거기 나가서 심사를 받았다. 그때 경찰 측의 책임자는 吳在道 검사였다. 吳檢事는 본시 사변 전의 보도연맹을 만든 사람으로서 문단인들과 친면이 있는 관계도 있었지만 특히 보도연맹원으로 포섭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 같은 것이 있었던지 조사에서도 심한 말을 하지 않고 보도연맹원으로서 용하게 살아남아 있었다고 무사하게 살아남은 것을 좋아했다. 그때 吳 검사는 분명히 내게 이런 말을 하였다. 보도연맹원보다도 도리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날뛴 사실이 많이 있다고 분개하다시피 했다. 내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문단인으로선 崔貞熙 여사가 나와서 같이 만났다. 이렇게 해서 하영든 앞뒤로 6·25의 홍역을 치르고 나니 신변은 겨우 무사하게 되었다는 보증을 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다시 문단의 관계는 그렇게 사무적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당시 문단의 유행어로 「도강파」나 「비도강파」니 하는 말들이 쓰여지고, 도강파가 세력을 잡고서 비도강파와의 신분관계를 갈라놓고 그 부역에 대한 등급을 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비도강파...라고 하면 문단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⁷⁾

(가)의 기록은 글쓰기 양식의 속성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성찰을 위해 쓰는 글인 일기의 일부다. 이 일기를 남긴 김성철(1913~1951)은 역사학자로서 전쟁 중에 불의의 사고를 요절하였지만 인민군 점령기와 그 이후 서울대 문리대의 ‘부역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귀중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

6·25 전쟁 개전 초기의 서울 함락과 수복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집단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문리대다. 특히 국문과 교수들은 ‘적치’ 90일 동안 전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미증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바, 김성철의 기록은 이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 ‘증언’은 일차적으로는 이 일기를 접하게 될 동시대의 독자 집단을 상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자 자신의 사유와 감정이 더욱 직접

6)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비사, 2009, 249~251쪽.

7) 백철, 『속·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441쪽.

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또한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당시에 문리대에서 이루어진 심사 내용의 ‘서목’까지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성철의 기록과 그 밖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국문과 교수에서 밀려나 있던 이명선이 학교로 돌아와 북한 교육성에 의해 인민군에 의해 접수된 서울대학교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⁸⁾ 이병기는 제자였던 이명선이 짜놓은 계획에 따라 6월 29일 인민군 수중에 들어간 문리대 임시 자치 위원회 좌장으로 추대되었고 30일에는 임시 자치 위원회 상임위원에 피선된다.⁹⁾ 또한 조운제는 이명선에 의해 주도된 교수 심사에서 제1차 숙청대상이 되어 대학을 떠나게 된다.¹⁰⁾ 9·28 수복이 되자 상황은 전혀 반전되어 이번에는 국문과 교수 방중현이 학교의 임시 책임자가 되어 돌아와 서울에 잔류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른 사람들이 이희승과 이병기 등 같은 과의 교수들이다. 김성철은 자신이 방중현을 만나 이희승 구제를 주장한 일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다.

더욱이 다른 사람 아닌 방선생이 책임자로 앉아서 한 과에서 가장 가까이 피시던 이희승 선생 한 분을 구하시지 못하신다면 천하 후세에 무어라 변명하시렵니까. 같은 경우에 계신 분으로 가람 선생은 문맹(文盟) 관계로 전부터 괜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고, 박종홍 선생은 나는 잘 알지만 방선생은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미심하여 일부러 말씀을 피하는 바입니다. 이희승 선생만은 방선생이 책임지시고 좋도록 해결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¹¹⁾

일련의 심사 결과 이병기는 조운제, 성낙훈 등과 함께 파면을 당하고 이병도, 이희승은 6개월 정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¹²⁾ 김성철의 일기는 전쟁 개전 초기 서울대 문리대에서 전개된 극심한 이념 간 적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잔류해 있었으면서도 인민군 치하에서 밀려나야 했던 그 자신의 독특한 입각점 위에서 사태를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깝게 묘사해 내고자 한다.

(나)의 기록은 그 자신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던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체류해 있던 그 자신의 상황을 회고록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사

8) 김성철, 앞의 책, 1950년 7월 10일자 일기, 97쪽.

9) 위의 책, 91쪽 및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156쪽, 참조.

10) 김성철, 앞의 책, 1950년 10월 9일자 일기, 243쪽, 참조.

11) 위의 책, 1950년 10월 19일자 일기, 254~255쪽.

12) 정병준, 『김성철의 삶과 한국전쟁』, 『역사 앞에서』, 창비사, 2009, 459쪽, 참조.

상검사로 이름 높았던 오제도¹³⁾를 매우 유화적인 태도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이 대목 바로 앞에서 백철은 자신이 겪은 사건 하나를 언급한다. 서울이 수복된 다음날인 29일, 시내에 나가려고 파출소 앞을 지나가다 젊은 경찰관에게 붙들리게 된다. 이 경찰관은 그를 “안성인가에서 악질 신문기자로 활동한 부역자”¹⁴⁾라며 “이런 비상시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즉각 총살을 해도 책임이 없다”¹⁵⁾고 한다. 그는 파출소 뒤 임시 구류 시설에 갇혀 있다 성북경찰서까지 끌려가 이틀 동안 구속되어 있다 자신을 알아 본 수사과장에 의해 겨우 풀려나게 된다. 이 사건은 서울 수복 당시 그가 겪은 공포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앞에서는 서울 수복 당시 “소위 부역자를 탐색해 내어 마구 총살해 버리는 장면도 벌어졌다”¹⁶⁾며 신에 평론가 이인수가 영어를 잘 아는 자로서 방송국에 나가 포로 통역을 했다고 해서 끝내 총살을 당하고 만 일화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면 그 자신을 서울에 잔류한 보도연맹원으로 대하는 사상검사를 결코 편안하게 보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오제도는 『적화 삼삭 구인집』(국제보도연맹, 1951)에서 이에 실린 글 가운데는 깊은 회한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좀 더 적극적인 글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박죽심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정희, 손소희였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¹⁷⁾ 최정희는 손소희, 노천명 등과 함께 인민군의 서울 점령중 문학가동맹에 나아간 잔류파 여성 작가였으며, 이 가운데 노천명은 20년 실형을 언도받고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¹⁸⁾ 여기서 언급되는 오제도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1일 창설, 6월 5일 명동 시공관에서 결성식을 가졌으며 약 3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이 조직은 명목상 전향자 단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광범위하게 강제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²⁰⁾ 개전 초기에 적계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불법 학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¹⁾ 백철은 『진리와 현실』에서 자신이 점령 중 임화의 『문학가 동맹』에 나가 그 신분증을 얻어 동네에는 그것을 제시하여 현장 동원을 피하고

13) 여기서 백철은 “오제도”(吳在道라 말하고 있지만 오제도(吳制道)의 오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14) 백철, 앞의 책, 440쪽.

15) 위의 책, 같은 쪽.

16) 위의 책, 439쪽.

17)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8쪽, 참조.

18) 위의 논문, 같은 쪽 참조.

19)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2004, 61쪽, 참조.

20) 위의 논문, 66쪽, 참조.

21)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54, 2004, 95쪽, 참조.

문학가동맹에는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협력하는 것을 피한 일화를 제시한다.²²⁾ 이는 회고록 속에서 잔류파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공포’로부터 적극적으로 ‘변명’, ‘방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 자전적 소설로서 『목마른 계절』에 나타난 서울 ‘잔류’의 기록

이제 논의를 잔류파 증언의 증언의 세 번째 유형 쪽으로 옮겨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 쪽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은 그것대로 하나의 심층적인 탐구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다층적이고 또 지속적이다. 자전적 소설이라는 개념이 지시하듯이 이 양식은 분명 소설 텍스트 내부의 인물과 그 외부로서의 작가를 비교, 대조하게 한다. 이 두 ‘항목’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자전적 소설의 ‘등급’이 판정된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들은 서로가 서로로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로보로스’ 뱀처럼 원환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것들은 이 작품들을 낳은 박완서라는 작가의 삶과 그것을 살아낸 그녀의 영혼의 ‘무한성’을 지시하는 것처럼, 작가를 빼어 닮은 인물에서 어렴풋이 닮은 듯한 인물까지 다층적, 다각적인 형상화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상호 보증적이며 서로로부터 서로를 그와 같은 연쇄고리로부터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목마른 계절』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의 일부를 이룬다. 이 소설을 자전적 소설로 읽을 수 있게 하는 형식상의 표지는 이 소설의 연대기적 구성이다. 이 작품은 모두 열한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 구성은 매우 단순하게 보일 정도인데, 특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등 월별 제목만으로 장 제목을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 소설이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부터 1951년 5월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 여대생 ‘하진’이 겪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작중 여주인공의 자서전 내용을 통하여 이 ‘진’이 작가 박완서의 분신일 수 있음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22) 백철, 앞의 책, 424~426쪽.

나는 인삼으로 유명한 개성의 근교 개풍군의 호젓한 한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온통 햇빛 넘치는 푸른 들에 삼포의 갈색 지붕이 드문드문 섞여 그 푸르름이 더욱 신선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한 편이었지만 그곳에서 지낸 어린 시절의 행복, 따스고 소박한 인간관계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때의 추억은 거의 동강난 채이지만 나는 동강난 조각들로부터 얼마든지 긴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²³⁾

이와 같은 ‘진’의 자서전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가 곧 박완서 자신일 수 있음을 상하게 한다. 물론 소설에 도입된 자서전적 서술 양식은 독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읽게끔 유도하는 작가의 서술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은 그와 같은 전형적 사례의 일부다. 그러나 이러한 작중 자서전 내용 말고도 작중 인물 ‘진’과 작가 박완서의 상사 관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어 나타난다.

첫째, 소설에서 그녀는 1950년 봄에 B고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과 ‘향아’, “그녀들은 분명 4년제 여고에 입학하였는데, 해방과 더불어 변경된 학제로 부당히도 2년씩이나 더 웅색한 제복과 완고한 교칙 밑에 억류당했던 것이다.”²⁴⁾ 이 맥락에서 B고녀의 민청 지하조직이 발각되어 무더기로 정학 처분을 받는 중에 ‘진’도 끼어 있었다는 설정은 박완서의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²⁵⁾

둘째, 소설 속 ‘진’은 1950년 6월에 ‘S대’ 철학과에 다니고 있고 이것은 당시 서울대 국문과에 다니고 있었던 박완서의 전기적 사실에 겹쳐진다. 이 ‘S대’는 “월래” “좌익 세력이 센 데”로 “비록 지하로 숨어들어갔을망정” “골수분자들이 조종하는 조직이 아직도 건재”한 곳이다.²⁶⁾

셋째, 소설에 나타나는 ‘진’의 가족의 구성 문제다. 그녀는 어머니와 올케 혜순과 함께 살고 있고 오빠는 서울 근교 능곡의 농업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주말에 집에 다니러 온다. 오빠 ‘열’은 ‘진’과 마찬가지로 좌익 사상에 경도되어 있고 특히 상부 조직의 지하 운동자였으며 현재는 전향자(또는 도피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소설적 설정은 결국 『목마른 계절』을 자전적 소설의 범주 속에서 독해할 수 있게 한다. 작중 ‘진’은 단순히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작가 박완서 자신에 관계되는 인물로 제시된 것이며, 박완서는 이 ‘진’을 통하여 그 자신에 관련된 어떤 ‘진실’을 암시하고자 했다

23)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110쪽.

24) 위의 책, 15쪽.

25) 위의 책, 23쪽.

26) 위의 책, 30쪽.

27) 위의 책, 35~36쪽.

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작중에서 처음 6·25 전쟁 개전 소식을 접한 ‘진’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상념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 전쟁이 살육과 파괴만이 목적이 아닐진댄 반드시 썩고 묵은 질서의 붕괴와 찬란한 새로운 질서의 교체가 뒤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지! 어찌면? 그럴 수도, 아니, 확실히 그렇게 될지도!²⁸⁾

이는 서울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때의 감상을 그린 다음의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어 표현된다.

세상이 바뀐 첫날이자 비 개인 여름날은 사방이 온통 빛에 넘치고 있었다. 티끌이 말끔히 가라앉은 투명한 공간을 통해 모든 전망은 밝고 선명했다.

진은 문득 좀 전에 본, 대학병원 뒤뜰에 방치된 국군의 시체들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다. 그곳은 너무도 밝고 너무도 행인들의 시선과 가까웠다. 살육과 파괴가 따르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으랴. 전쟁의 명분을 얼굴로 치면, 살육과 파괴는 내장이다. 내장은 누구나 갖고 있으면서 그 노출에 혐오를 느끼는 게 누구나의 생리다. 아름다운 얼굴에 아름다운 내장이 따를 리도 없다. 결국 문제는 내장이 아니라 초면에, 얼굴도 내밀기 전에 내장부터 내보이는 그 무신경과 잔혹성이다. 그녀는 다시 그녀가 지금 화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당혹하고 만다. 잠깐 소녀적인 감상이었다고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

(혁명이 아닌가? 그리고 난 보통 행인들과 다르다. 적어도 혁명을 예견했고, 투쟁력도 만만찮다. 나는 오늘 환호하고, 감동하고 할 의무가 있다.)²⁹⁾

이 소설은 좌익적 세계관을 품고 전쟁의 폭력과 살상을 정당화 하던 여대생 ‘진’이 오빠의 죽음이라는 참극을 경유한 끝에 전쟁의 허위를 깨닫는 것으로 나아간다. ‘진’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우리 세대의 죽음엔 무언가 주석을 달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³⁰⁾다는 울케의 말에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이 대화는 전쟁에 대한 박완서의 접근법이나 가치 평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28) 위의 책, 42~43쪽.

29) 위의 책, 55~56쪽.

30) 위의 책, 431쪽.

“그렇지만 이 동족 간의 전쟁의 잔학상은 그대로 알려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특히 오빠의 죽음을 닮은 술한 젊음의 개죽음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한번으로 저 세상으로 간 목숨, 반동이라는 고발로 산 채로 파묻힌 죽음, 재판 없는 즉결 처분, 혈육 간의 총질, 친족 간의 고발, 친구 간의 배신이 만들어낸 무더기의 죽음들, 동족 간의 이념의 싸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고스란히 오래 기억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용담이나 훈장도 허구 많은데.”

“그야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동안 무용담, 훈장이 판을 치겠죠. 또 싸움터에 꽃핀 휴머니즘 이야기라든가 전쟁 중에 치부한 이야기 같은 것까지도.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란 자칫하다간 사람마다에 잠재한 호전성이랄까 영웅심이랄까 그런 걸 자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해볼 만한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할지도 모르죠. ‘전쟁이란 해볼 만한 거다’ 얼마나 철박서니 없는 위험한 생각이겠어요. 전쟁을 겪은 우린 그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오빠의 죽음의 경우 같은 참혹의 기억, 학살의 통계, 어머니의 경우 같은 후유증, 이런 것만이 전쟁을 미리 막아보려는 노력과 인내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저쪽에선 ‘수령이나 사회주의 낙원을 위해서라면’ 일전도 불사할 결의를 보여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치졸한 애국애족에서 깨어나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나 하고.”³¹⁾

어떤 이데올로기와 명분도 전쟁의 죄악을 합리화 할 수 없다는 ‘진’의 귀결점은 혁명을 위한 희생이라는 합리화 논리를 보였던 소설 초반부의 형상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소설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시누이와 올케의 대화에서 나타나듯 ‘진’의 오빠 ‘열’의 참담한 죽음의 경험이다. 이 죽음은 『나무』, 『엄마의 말뚝』 연작,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박완서의 잘 알려진 6·25 전쟁 체험의 일부다.³²⁾

다른 하나는,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6·25 개전 후 약 90일 간에 걸친 인민군의 서울 점령 기간 중 ‘진’의 대학 생활 경험 내용이다. 작중에서 ‘진’이 다닌 대학은 ‘S대’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모델로 삼은 것임을 여러 정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 소설을 6·25전쟁 개전 초기 인민군의 서울 점

31) 위의 책, 431~432쪽.

32) 박완서의 소설을 ‘반복’과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분석한 김정은은 『목마른 계절』(『한발기』)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을 잔류파 문학인의 의식 맥락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김정은,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5쪽 및 논문의 3-1, 3-2장 40~58쪽, 참조.

령 기간 중 서울대학교 문리대 상황에 대한 ‘보고’ 내지 ‘증언’으로 기능토록 하는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가람 이병기의 『가람일기』(신구문화사, 1976) 및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창비사, 2009) 등을 위시한 몇몇 저술밖에는 없다. 소설 속에서 ‘S대’ 문리대를 둘러싼 상황은 갖 이 대학에 입학한 ‘진’의 시선에 포착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7월 들어 S대 건물 대부분은 인민군에게 점거되었고 본관에서 꽤 떨어진 함석지붕을 가진 창고 같은 건물이 민청 문리대 민청위원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진’은 다시 학교에 나갔지만 강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수들의 얼굴도 볼 수 없으며 학원은 완전히 학생들 차지가 되어 있다. 민청위원장과 문화선전부장이 교양 강의를 하고 선전물을 게재한 신문이 교재 역할을 한다. 교양 시간에는 신문 공부 외에도 ‘당사 연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진’은 친구인 ‘순덕’과 함께 학생들의 등교 공작과 그 밖의 선전선동사업을 하게 된다. 8월이 되자 서울은 폭격을 받기 시작한다. 조희에서 민청 당 세포위원장인 최치열은 비행기 모금운동에 관한 수령의 호소문을 읽는다. ‘진’과 순덕은 할당받은 하루치 책임량을 채우지 못해 자기비판을 강요당한다. 그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라는 말을 상기시키며 ‘진’을 질책한다. 전쟁에 대한 ‘진’의 환멸이 커져가는 가운데 9월에 들어서자 폭격이 격심해지고 전세는 결정적으로 뒤바뀌고 마침내 민청은 당분간 해산을 결정한다. ‘진’과 순덕은 민청의 서류들을 처분하는 역할을 떠맡는데, 이는 이른바 반동학생 명단 같은 것과 ‘진’이 쓴 것과 같은 자서전 문치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때 ‘진’은 자신이 인민군 치하에서 “당원 후보”³³⁾였다는 점을 의식한다. “자유에 대한 예감보다 한층 명료한 어떤 시련에의 예감으로 진이는 몸을 떠난다.”³⁴⁾ 마침내 9·28 서울 수복 속에서 ‘진’은 “물에 뜬 기름처럼 균중으로부터 소외된 스스로를 느낀다.”³⁵⁾ 자신은 인민군에 “협력”³⁶⁾한 부역자였다.

『목마른 계절』의 「10월」 장은 수복 후 ‘S대’에서 전개된 좌익 색출 작업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진’은 “고발과 복수”³⁷⁾가 횡행하는 가운데 당원까지 될 뻔한 “부역 학생으로 받아야 할 벌”³⁸⁾을 두려워하다 마침내 “학생 심사”³⁹⁾에 나아간다. 동송동의 어느 교수 관사에서 벌어진 심사에서 ‘진’은 뜻밖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 놓여나지만 「11월·12월」의 장에

33) 위의 책, 191쪽.
 34) 위의 책, 193쪽.
 35) 위의 책, 209쪽.
 36) 위의 책, 215쪽.
 37) 위의 책, 223쪽.
 38) 위의 책, 226쪽.
 39) 위의 책, 226쪽.

서 볼 수 있듯이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데는 실패한다. 2차 심사의 기회는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그 결과는 소설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둘러싼 심리적 정황은 훨씬 나중에 쓰여진 일인칭 고백체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 1992)에 이르러 12장 「찬란한 예감」에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가)

그들은 마치 나를 짐승이나 벌레처럼 바라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 주었다. 벌레처럼 기었다. 정말로 그들에겐 징그러운 벌레를 가지고도 오락거리를 삼을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단순성이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빨갱이를 너무도 혐오했기 때문에 빨갱이의 몸을 가지고 희롱할 생각은 안 했다. 나는 내가 너무 귀족적으로 자란 걸 다 원망했다. 잘 먹고 잘 입고 떠받들여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수모에 길들여질 기회 없이 커 왔다는 뜻이다.

나는 밤마다 벌레가 됐던 시간들을 내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며 몸부림쳤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들이 나를 벌레로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그야말로 정말 벌레가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공포감 때문에 어떡하든지 망각을 물리쳐야 한다는 정신이 들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여러 군데서 개별적으로 당한 일들이 한 묶음으로 단순화 돼 남아 있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추상적으로밖에 생각해 낼 수가 없다. 그건 몸으로 벌레처럼 기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폭력에 굴복 당했다는 증거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겨먹은 게 보통 사람이 안 미치고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의 한계인 것을.⁴⁰⁾

(나)

산 넘어 산이었다. 대학을 다시 다니게 될 것 같지도 않았거니와 공산 치하에서 학교에 나간 것은 명백한 부역이기 때문에 나는 처벌이 무서워 학교 앞엔 얼씬도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대학마다 학도호국단 감찰부에서 학생을 심사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가혹행위도 한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심사가 유행이었고 심사과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두려웠지만 시민증이 없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떤 수모나 폭력도 견딜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학교에 나갔다.

이번엔 유엔군이 문리대를 쓰고 있어서 대학 업무는 동승동 교수 관사에서 한다고 했다. 등교해서 등록서류를 작성하는 걸 옆에서 보고 벌써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수군댈 만큼 나는 이미 부역한 학생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런 형편이니 그날로 등록증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며칠 걸려 최종적으로

40)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254~255쪽.

로 감찰부장이 심문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학생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천신만고 끝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시하니 시민증도 쉽게 나왔다. 지금까지도 그때 문리대에서 받은 심사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건 시민증을 받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역의 혐의와 인간대접의 양립은 두 고두고 고마웠고,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만은 잃지 않게 도와주었다. 내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겠지만 부역자 숙청이 한창일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어서 사회가 온통 흥흥한 공포분위기였다.⁴¹⁾

이상에서 나타나는 서울 수복 후의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는 지극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양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한편으로 이른바 “빨갱이 죽이기” 정세 속에서 전전긍긍함과 동시에 에 이에 대한 또 다른 환멸을 맛본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이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체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안도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심리적 정황은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반영한 서술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제가 완화된 시기에 발표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이와 같은 잔류파 부역자의 심리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된다.

이렇듯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에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일단은 부역의 혐의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마련이었다. 비록 그들이야말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순수한 양민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정상은 참작되지 않았다. 부역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강 다리를 건너 피난을 갔다 왔다는 게 제일이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반공주의자 내에서도 도강파라는 특권 계급이 생겨났다.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피어 놓고 떠난 사람들 같지 않게 안하무인이었다. 어쩌면 자기 잘못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선수를 치느라고 그렇게 위세를 부리는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고서야 친일파의 정상은 그렇게도 잘 참작해 주던, 그야말로 성은이 하해와 같던 정부가 부역에는 그다지도 지엄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⁴²⁾

이와 같은 작중 인물 ‘나’의 심리에는 이른바 ‘도강파’를 향한 비난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식은 체제 선택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41) 위의 책, 259~260쪽.

42)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253쪽.

으로 판단된다. 자전적 소설로서 『목마른 계절』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모두에 걸쳐 일관된 것은 6·25 전쟁 중 점령된 서울의 잔류 경험을 숙고함으로써 좌나 우, 어느 한쪽이 아닌 제3의 논리에 다다르고자 하는 시도며 이것은 『목마른 계절』에서 붉은 빛과 흰 빛이 아닌 제3의 빛깔을 찾으려는 ‘진’의 고뇌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보도전을 봤대서가 아니라 요즈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은 남녀의 성별도 용모의 미추도 직업의 귀천도 아니요, 다만 빨갱이나 흰둥이나였다. 죄목 중 으뜸가는 것이 빨갱이였고 그 밖의 죄는 어떤 파렴치 죄건 사람들은 관용할 수 있었다.

천태만상의 진열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크게 내쉴 수도 없는 죄송함을 주위의 군중에게 느낀다.

이렇게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죄의식을 뚜렷이 느끼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죄명을 빨갱이라고 붙이기만을 망설이고 있었다. 진이는 ‘저 년이 빨갱이다’라는 고함이 곧 들려올 듯한 환각에 질겁을 하며 흥분한 군중 속에서 겨우 빠져 나와 혼자가 된다. 진땀이 흐른 등골에 비로소 오한 같은 걸 의식한다.

빨갱이와 흰둥이의 죽고 죽이는 일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색은 없는 것일까?

שלפית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가을 하늘같이 푸른 색깔은 없는 것일까? 설사 그런 제3의 색이 있다면 다손 치더라도 혼자서 그런 색깔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외로워서.⁴³⁾

이를 가리켜 박완서 식의 잔류파의 모럴 감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속한 세대, 즉 1930년대 전반기 출생 작가들, 최인훈까지 포함하는 이호철, 박완서의 6·25 전쟁을 수리 또는 처리하는 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진’의 고독과 죄의식은 최인훈의 『회색인』과 『서유기』에 묘사된 월남민의 고독과 부끄러움에 통한다. 이 ‘원죄 의식’ 속에서 제3의 논리를 향한 작가적 시도가 비롯될 수 있었던 것이리라. 전쟁은 어떤 명분과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것, 체제 논리를 앞세우는 어떤 폭력과 광기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박완서 식의 평화 사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43) 『목마른 계절』, 239~240쪽.

〈토론〉

방민호 〈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과
6·25 전쟁의 성찰〉에 대한 토론문

임정연 (안양대)

방민호 선생님의 이 글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박완서의 6·25 체험을 ‘평화 사상’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복기한 의미있는 시도입니다. 재론하지 않더라도 6·25 전쟁은 박완서 문학의 기원이자 그의 문학세계를 가동시키는 지속적인 동력이었음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결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완서의 전쟁체험과 평화 사상을 잔류파의 논리와 정서라는 측면에서 연동해 논하는 방민호 선생님의 접근법은 친숙한 텍스트가 빚어낸 새로운 독해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해서 이 토론문은 선생님께서 시간적 여건상 혹은 논리적 용량과 볼륨이 너무 커서 발표문에 미처 담아내지 못하신 부분이나 향후 구상하시는 논의 방향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놓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서사 양식으로서 『목마른 계절』의 활용법

박완서의 평화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 『목마른 계절』이라는 텍스트와 “잔류파의 논리와 정서, 감각”(4쪽)이라는 접근법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물론 선생님의 독법대로 접근할 때 이 텍스트는 분명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고, 특히 적지 90일의 경험이 서울대 문리대라는 특정 공간 안에 응축되어 밀도 있게 부조되는 장면들은 이 소설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적 서사로서 『목마른 계절』은 적어도 일기와 회고록과 같은 유형의 증언 양식과 다른 층위의 증언 방식을 선택했으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전체 내러티브를 더 적극

적으로 활용하면 어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류파 부역자로서의 체험은 전쟁 초반과 9.28수복 이후, 즉 텍스트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만 이것이 박완서의 평화 사상을 파악하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없고,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듯 이 소설이 여타 자전적 소설과 구별되는 점은 “1·4 후퇴 후 텅 빈 서울에 남아서 겪은 일은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피난을 간 1951년 1월과 2월의 공동화된 서울 모습을 ‘증언’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소설의 후반부 역시 역사적 사료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상으로 1·4 후퇴 직후, ‘가짜 피난’과 오빠의 죽음을 다룬 텍스트 후반부에서 논제와 관련해 특기할만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제 3의 색’에 대한 입체적 해석의 가능성

소설 속에서 ‘제 3의 색’으로 압축되는 박완서의 전쟁 체험과 평화 사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석해볼 여지는 없는지요?

이 글의 논리에 따라 보면 박완서에게 전쟁과 평화는 이념이 아닌 모럴의 문제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체험에 바탕한 “자기 탐구의 일부”(3쪽)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박완서의’, 박완서만의 ‘평화 사상’을 추론해볼 수 있는 이유이고, 이를 세대론적 맥락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추론의 결과가 단지 “전쟁은 어떤 명분과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것, 체제 논리를 앞세우는 어떤 폭력과 광기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13쪽)으로 정리되고 만다면, 일반적인 반전(反戰) 논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박완서의 평화사상을 좌와 우 어느쪽도 아닌 제3의 논리, 빨강색과 흰색도 아닌 제3의 빛깔을 찾는 데 한정짓는 것은 다소 패배적이고 소극적인 귀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과 자기 탐구의 과정에서 빚어진 역동적인 논리를 ‘제 3의 색’이라는 추상적 관념 안에 가두어버리는 모양새가 된 듯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마른 계절』에 나타난 박완서의 평화사상을 입론적 성격으로 수용하고, 박완서의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를 좀더 입체적으로 조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청하며, 관련된 후속 연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평화 사상과 현실인식의 관련성

『목마른 계절』의 모럴 감각이 잔류파 부역자의 ‘고독’과 ‘죄의식’이라는 정서적 프리즘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때, ‘죄의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독’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를 박완서 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현실인식과 결부시켜 해석해볼 수는 없는지요?

『목마른 계절』 속에서 하진이 갈구하는 행복과 평화는 당위인 동시에 모든 불안, 긴장,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 즉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제3의 색’이 있더라도 “외로워서” “혼자서 그런 색깔 일 수는 없을 것 같다”(13쪽)는 구절은 웬지 박완서 문학의 심리적 기제를 이루는 ‘억울함’의 정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억울함’이라는 반응 역시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한다면, 더군다나 이 같은 주체의 자기 확신이 삶에 대한 강박적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서를 박완서의 현실인식과 연결시켜 볼 법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완서의 현실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훼손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정적 현실로부터 ‘일상’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적 욕망과 일상성에 매몰된 삶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성립하는 윤리감각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상에 대한 윤리감각과 김남천의 모럴 개념에 준거한 박완서의 평화 사상 사이의 관련성을 여쭙고 싶습니다.

윤이상의 음악과 평화사상

이경분 (서울대 일본연구소)

1. 들어가며

윤이상은 백남준과 함께 20세기와 21세기 문화예술사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독보적인 한국인이다. 백남준이 민족적 문제와 상관없이 '세계인'으로 살았던 것과 달리, 윤이상은 남북문제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작품으로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도 관여하였던 민족주의자였다. 그로 인해 외국에서나 한국에서 일관되게 예술가로서 수용되었던 백남준과 다르게, 윤이상은 외국에서는 위대한 작곡가로서 명성이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인물로 부각되어 그의 음악은 제대로 소개되기 전에 배척되어왔다. 윤이상이 사망(1995)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의 음악은 한국 청중에게 여전히 낯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의 음악가, 또는 북한의 음악가라고 말하기 힘든 윤이상이 평생 염원하는 민족적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었다. 유럽에서 1959년 작곡가로 데뷔하였을 때만해도 윤이상은 오로지 서양음악과 대결하여 작곡가로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고, 〈바라〉, 〈가사〉, 〈가락〉, 〈노래〉, 〈류통의 꿈〉, 〈예약〉 등과 같은 비정치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나치에 저항했다가 살해당한 하우스호퍼의 시를 주제로 한 칸타타 〈사선에서〉(1975),¹⁾ 광주의 폭력을 세상에 알리는 〈광주여 영원히〉(1981),²⁾ 통일을 염원하면서 한국 청중을 위해 쓴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1987),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교향곡 5번(1987), 민주화 운동을 위해 분신자살한 한국청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화염 속의 천사〉(1995) 등 민족의 평화통일과 인류애 및 세계의 평화를 표방하는 작품들을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고, 그의 작품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가?

1) 원제는 "An der Schwelle. Sonette von Albrecht Haushoffer für Bariton, Frauenchor, Orgel und andere Instrumente" 이다.

2) 원제는 "Exemplum in memoriam Kwangju" 이다.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본 발표는 먼저 윤이상이 세계적 음악가가 된 배경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 후, 평화사상이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서술하고자 한다.

2. 윤이상 음악의 세계적 위상과 그 배경

유럽에서 윤이상은 동양의 음이미지를 서양의 작곡기법으로 표현해낸 최초의 아시아 작곡가로 칭송된다. 그 이전에도 아마다 고사쿠(山田耕筰)와 같은 서구 유학과 일본음악가들이 20세기초반 서양 작곡기법으로 ‘일본적’ 또는 ‘동양적’ 음악을 만들어보고자 시도해왔으나, 윤이상 이전에는 누구도 유럽음악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³⁾

이유는 전통적 멜로디의 인용이나 동양적 음색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향악의 문법, 즉 서양의 화성, 서양의 작곡기법, 서양악기 연주기법이라는 토대를 완전히 바꾸어 (일본적, 아시아적) 새로운 음향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음악적, 미학적 본질의 변화에는 무력한 채, 소재주의 차원이나 분위기 차원에서 동양적인 것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⁴⁾

하지만 윤이상의 음악은 이러한 소재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의 음악은 전통 선율을 ‘날 것’으로 인용하거나 변주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음 하나 하나가 살아있다는 음에 대한 한국인의 미학을 반영하고, 음과 양이라는 만물의 근본적 움직임은 음악의 추진력으로 삼으면서도 유럽음악계가 감탄할 정도로 풍부하고 새로운 음향적 이미지를 창조해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러한 본질적 차원의 성과는 한국청중이 선뜻 그의 음악을 ‘한국적’이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1960년대 윤이상은 ‘아시아인으로서의 꽤 실력 있는 작곡가’ 정도가 아니라, 유럽 엘리트 음악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첫 아시아출신의 작곡가가 되었고, 1980년대에는 서구현대음악의 대표적 거장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윤이상이 이러한 차원에 도달하게 된

3) 윤이상보다 먼저 파리에 유학한 마유즈미 도시로(黛敏郎)도 (니르바나)(1958)를 작곡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윤이상과 달리 작곡에 전념하지 않고, 1970년대 일본우익의 나팔수가 되었다. (이경분, “음악과 정치: 마유즈미 도시로와 일본우익”, pp. 59-91. 참고).

4) 윤이상도 일본작곡가들이 많은 시도를 한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1988a: p. 76) 이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서 작곡재료는 현대적이지만, 형식에서는 낡은 서양적 형식의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즉, 일본작곡가들이 첨단 서양현대음악의 원리를 자기화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니시무라/윤이상, 『尹伊桑의 音樂世界』(최성만, 홍은미 편역), 한길사 1991, p. 151.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냉혹한 서구 엘리트 예술계에서 무명의 한국작곡가였던 윤이상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출발점은 “생사를 걸고 터득한” 서양음악의 기법적 수준 덕분이었다.⁵⁾ 뿐 만 아니라, 윤이상이 40대에 유학한 만학도였고, 정식학교보다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여 줄곧 작품을 써왔던 것도 유리했다.⁶⁾ 현대음악은 스승에게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으로 오기 전에 일본어로 번역된 요셉 루퍼(Josef Rufer)의 책 『12음 음악』(Die Komposition mit zwölf Tönen)을 독학하였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40대의 윤이상은 베를린 유학 2년만에 〈7악기를 위한 음악〉(1959)으로 첫 데뷔를 할 수 있었다.⁷⁾ 이후 1966년 초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예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곡가가 되었는데,⁸⁾ 시기적으로도 행운이 따랐던 것이다.⁹⁾

이것이 무슨 말인지, 유럽의 20세기 음악사에 대해 조금 설명하면,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베토벤, 쇼팽 시절에 지배했던 3화음이라는 서양고전음악의 전통이 무너졌던 때였다. 시작과 끝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I-IV-V(다장조-바장조-사장조)와 같은 조성음악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더 이상 반영하기 힘든 ‘거짓’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초반 진실된 음악을 추구하려는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같은 일부 엘리트 음악가들은 무조 및 12음 음악이라는 ‘듣기 힘든’ 음악을 실험하였다. 하지만 이런 음악을 만든 쇤베르크가 유대인이었으므로, 나치시기 ‘퇴폐 음악’으로 낙인찍힌 채 거의 잊혀졌다.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히틀러시대에 금지되었던 12음 음악과 같은 세리얼(seriell) 음악이 아방가르드적 현대음악계의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실험단계에 있었던 서구음악계는 혼란의 상태였고, 새 시대에 적합한 음악적 진실을 추구하자는 의도와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엄격한 규칙을 가진 세리얼 음악의 음향적 결과물은 메마르고 빈곤한 수준이었다. 이 때 리게티, 펜데레츠키와 같은 작곡가들은 세리얼 기법에서 탈피하여 음향적 설득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음향작곡’이라는 창작으로 보여주었다.¹⁰⁾ 바로 이 시기 윤이상이 <

5) 루이제린저, 『상처입은 용』(홍중도 옮김), 1988, p. 219. 윤이상의 음악이 낮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강한 관심을 받고 성공을 거둔 것은 윤이상 음악의 질적 수준에 기인한다. 한스 외슈: 「도(道)의 정신에서 나온 음악 - 〈낙양(洛陽)〉에 관한 고찰」, 『尹伊桑의 音樂世界』, p. 331.

6) 윤이상은 오사키와 도쿄에서 공부했으나, 경제적 빈곤으로 제대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는지는 1차 문헌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7) 윤이상이 도쿄와 파리과 베를린의 유명한 선생님들에게 각각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법적 세련미는 부족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독창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윤이상, “드뷔시와 나”, 『尹伊桑의 音樂世界』, p. 66.

8) 파리에서 1년, 베를린에서 2년 수학한 기간은 새로 배우는 시간이라기 보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과 일본에서 독학했던 내용을 점검하고 교정, 보완하는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시에 자신이 “고국에서 가지고 온 음향전통과 음악사상 속에 융해”시켰다. 요셉 호이슬러, “유럽음악과 한국적 전통”, 『尹伊桑의 音樂世界』, p. 271.

9) 윤이상도 시기적 행운에 대해 스스로 고백한다. (윤이상, “나의 음악에 대하여”, 1993, 5.)

10) 리게티, 펜데레츠키 등의 음향작곡법이 윤이상에게 자신의 길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윤이상/볼프강 빈클러/라이너 작트레벤, “조국의 전통에

예악>을 발표하는데, 유럽현대음악계는 이 음악을 ‘음향작곡의 훌륭한 예’로서 열광하였다.¹¹⁾

만약 윤이상이 아마다 고사쿠처럼 20세기초반, 아직 아방가르드적 현대음악이 대세가 되지 못했던 시기에 유학을 갔다면, 그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고,¹²⁾ 1950년대 후반 리게티나 펜데레츠키와 같은 음향작곡을 시도한 작곡가들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예악>이 주목받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한 두곡으로 세계적 대가가 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창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음악사에서 잊혀지기 마련이다.¹³⁾ 무엇보다도 윤이상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음악이 일상에 풍부하게 녹아있었던 통영에서 보수적인 유교학자 집안의 가난한 아들로 자란 덕도 있었다.¹⁴⁾ 식민지시기를 통틀어 한반도 어디서든 여전히 전통음악이 청각을 지배하는 환경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입된 대중음악, 서양음악 등이 가장 먼저 유행되고, 전파되었던 경성과 달리, 통영은 근대화의 속도가 훨씬 늦었고, 그만큼 전통음악의 파괴도 늦게 진행되었다.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밤바다 어부들의 남도창, 유랑극단과 기생연회, 통영 야외극 오광대, 굿 등 통영의 일상은 풍부한 전통음악으로 꽉 차 있었다. 유럽엘리트 음악가들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갔던 윤이상이지만 스스로 서구문화의 ‘영원한 타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아시아문화를 재발견했을 때,¹⁵⁾ 통영에서의 풍부한 음향적 경험은 그의 작곡생애(40여년) 내내 수준 높은 창작품을 길어낼 수 있는 보고(寶庫)가 되었다.¹⁶⁾

여기에 또 한 가지 윤이상을 고통의 밑바닥까지 깊이 경험하게 한 정치적 사건도 윤이상의 창작세계가 독보적인 것이 되는데 기여했다. <예악>으로 서구음악계가 필요로 하는 음악가로 인정받은 윤이상이 미학적, 기법적 문제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음악이론을 세우는 데 골몰하고 있었을 1967년이였다. 한국 중앙정보원은 그를 서독에서 남한으로 납치하여 북한간첩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하는 이른 바 ‘동백림간첩단

서 샘솟아오르는 나의 음악’, 『尹伊桑의 音樂世界』, p. 215.

11) 윤이상의 <예악>은 유럽인에게 처음에는 음향작곡의 산물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헤테로포니적 초선궁정음악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유럽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볼프강 부르데 1985, 1, 27).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창작과 비평사, 1998, pp. 222-223 재인용.

12) 선적이고, 수평적인 아시아음악과 화성이라는 수직적 요소를 중시하는 서양고전음악은 서로 너무나 다른 원칙에 서 있었으므로, 19세기말, 20세기 초 한반도에 왔던 서구 선교사들은 화성과 조성의 없는 조선음악을 소음으로 여겼다. 하지만,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가 작곡한 현대음악 (14가지 비의 묘사(14 Arten, den Regen zu beschreiben))를 듣고 “중국의 목화” 같은 음악이라 칭송하며 “유럽음악이 위대한 작품을 통해 300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중국인은 이제야 음악이군이라 말할 것이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Bertolt Brecht, Journal (1942, 4, 24). 이경분, “20세기 음악가와 문화가: 쇤베르크와 브레히트의 만남”, 낭만음악 54, 2002, 59-60 재인용.

13) 윤이상보다 먼저 1958년 교향곡 (니르바나(涅槃交響曲))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마우즈미 도시로가 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4) 윤이상이 독일어로 자신의 음악을 이론화하는 철학적 언어적 능력도 유럽에서 작곡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이었다. 소설을 3편 쓴 적이 있을 정도로 문학적 표현능력을 겸비한 것은 자신의 창작원리를 ‘주요음기법’으로 설명하는 데도 기여했다.

15) 이경분, “망명음악가 윤이상”, 동양정치사상사 10권1호, 2011, pp. 200-203.

16) 요셉 호이슬러는 윤이상의 작품에서 느끼는 매력은 동양과 서양의 화합이며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쓰는 ‘형상화의 힘’이라 주장한다. 요셉 호이슬러, “유럽음악과 한국적 전통”, 『尹伊桑의 音樂世界』, p. 275.

사건'을 터트렸다. 이후 윤이상은 <첼로협주곡>이나 <광주여 영원히>에서 보듯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곡가가 되었다. 뿐 만 아니라, 한국에서 추방되어 망명자 신세였으므로, 귀국하지 못하고 평생 서구현대음악계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살 수 있었던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유리한 요소였다. '동백림사건'이 어떤 식으로 그의 삶과 음악에 강렬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자.

3. 윤이상 평화사상의 시대적 배경: 동백림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

동백림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67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7차에 걸쳐 총194명의 각 계각층의 지식 엘리트와 해외유학생 등을 '북괴대남적화공작단'으로 규정하여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정희식 불온생산체제"의 한 예에 속한다.¹⁷⁾ 언론에서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¹⁸⁾ 아이러니하게도 '간첩 없는 간첩단 사건'이 되고 말았다.¹⁹⁾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이상, 이응로를 포함한 34명이²⁰⁾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 내지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에서는 간첩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²¹⁾

하지만 한국으로 납치된 직후, 윤이상은 (이응로와 함께) 중앙정보부가 동백림사건의 혐의 대상자 중 A급 인물로 분류한 소위 '간첩단의 두목'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1967년 7월 12일 중앙정보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윤이상은 1959년 1월 이래 동독주재 북괴대사 박일영과 접선, 소련을 거쳐 평양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벌여왔으며, 최정길, 최창진을 포섭하여 간첩활동을 하게 했다"고 한다.²²⁾ 물론 윤이상은 북으로 간 친구 최상환의 소식을 듣기 위한 목적과 고구려 고분벽화를 직접 보고자 하는 의도로 동백림의 북한대사관과 접촉

17) 임유경,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2, 2014, p. 152.

18)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역사연구 제22호, 2012, p. 145.

19) 임유경,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화정치", p. 176.

20) 전명혁은 1967년 11월 9일 동백림사건 피고인을 33(구속 27, 불구속 7인)으로 서술하지만 오류로 보인다.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p. 151.

21) 박정희 정부는 1969년 8월, 1970년 8월 및 12월 광복절 특사, 연말특사로 동백림 사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하였다. 임유경,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화정치", p. 176.

22)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p. 146. 동백림사건의 발단은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 실종사건이 보도되자, 북한으로 납치된 것이라 확신하고 불안해진 임석진교수가 박정희를 만나 유럽유학생들의 대북 접촉상황을 직접 '제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수지는 이 사건이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시민데모를 무마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그 동안의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상)』, p. 264), 오히려 차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pp. 147-148. 임유경,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화정치", p. 173.

하였고 1963년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²³⁾

하지만 이 자체가 ‘반국가행위’, ‘간첩행위’로 둔갑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²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1960년대 남한 유학생들이 서베를린보다 저렴한 식료품이나 서적을 구매하기 위해 동베를린을 왕래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당시 북한은 (지금과 달리) 남한에 비해 잘 살았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남한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에 친근감을 느끼고 식사초대에 응하거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²⁵⁾ 더욱이 북한 대사관과의 접촉에 대해 남한기관의 감시나 통제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므로, 동베를린을 방문했던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다.²⁶⁾

윤이상은 1967년 6월 17일 중앙정보원의 유인으로 강제 연행되어 서울로 납치된 후 고문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저명한 예술인들의 구명운동과 독일정부의 압력 덕분에 그를 비롯한 동백림사건 연루자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석방되었다.²⁷⁾ 죽을 고비를 넘기고, 1969년 2월 극적으로 풀려난 윤이상은 한국에서 추방되어 독일에 망명하였고, 이후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작곡가가 되었다. 이런 변화의 내적 동기가 바로 동백림사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독일로 되돌아간 직후 바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 창작적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1970년대 중반에 발표한 칸타타 <사선에서>와 <첼로협주곡>에서 부터이다.²⁸⁾

그런데 왜 하필 1970년대 중반이었을까? 독일로 망명한 윤이상은 처음에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침묵했다. 윤이상은 독일로 출국하기 전 정보부 부장 김형욱에게 납치사실과 고문 및 재판에 관한 세부사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했다.

23) 임유경,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화정치”, p. 156.

24)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과장이었던 이용태는 수사의 어려움은 혐의자들이 동백림에 갔다 온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것을 꼽으며, 수사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핵심인물 윤이상의 자살 시도였다고 회고한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회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 (1999. 9. 1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ISUudZN6zws> (검색일, 2017. 9.)

25) 당시 북한의 경제는 고도성장을 하는 시기였고, 가난한 남한은 독일로 광부 간호사를 67년까지 약 4,200명을 수출하고 있었다. 남한의 철강생산량은 북한의 20%, 전기는 30%,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60%였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회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

26) 이수자도 납치되었는데, 당시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슨 죄인지 잘 몰랐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만난 북한 사람은 사상적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엄청난 경험을 한 후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고백한다. 또 공산주의자, 급진적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살고 있었던 유럽에서 윤이상은 사회주의 사고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이었지만,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 pp. 277-278.

27) 독일 변호사 하인리히 하노버씨는 동백림사건에 서독 정보기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 pp. 351-355. 하지만 이 주장은 ‘독일정부의 압력’으로 윤이상이 석방될 수 있었다는 주장과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독일정보기관과 한국정보기관만의 공동작업이었을 뿐, 독일정부는 개입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고, 둘째, 독일정부는 사회당과 기독교당의 연립정부였으므로, 일부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 셋째, 독일정부가 처음부터 개입되었지만, 1968년이후 태도를 바꾸었을 가능성이다. 윤이상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한 사람은 독일 외무장 빌리브란트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전세계적 유명예술가들의 서명운동을 주도한 윤이상의 친구 프로이덴베르크(Freudenberg) 교수의 활약도 컸다.

28) 윤이상 스스로 동베를린 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으며 첼로 협주곡(1975/76)을 썼다고 고백한다. 윤이상, “작곡가 자신의 해설”, 『尹伊穡의 音樂世界』, 472-473.

풀려나긴 했으나 생명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²⁹⁾ 하지만, 1973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이 독일에까지 알려지면서,³⁰⁾ 박정희정권의 악랄한 수법을 경험했던 윤이상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군사독재타도와 김대중 구출을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³¹⁾

〈사진1〉 김대중 구출을 위한 음악회 개최 기자회견 (1974 도쿄)



*출처: 『伊伊桑의 音樂世界』

그 첫 행동이 1974년 8월 15일 일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가지고(사진1), 남한으로 납치되어 고문당한 경험을 처음으로 폭로한 것인데, 박정희정부의 끔직한 인권침해를 알려서 일본여론에 김대중 구출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³²⁾ 이런 활동이 알려지자 윤이상은 1976년 일본에서 (10여년처럼) 남한의 국가정보원에 의해 다시 납치될 위험을 겪게 되는데, 스스로 1976년을 ‘충격의 해’라고 토로한다. 도쿄에서 있었던 ‘윤이상 콘서트’에는 윤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경찰이 우에노 문화회관을 뺑뺑이 경호하는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³³⁾

종합해서 보면, 동백림사건이후 윤이상의 정치적 의식은 언제나 작품으로 표출될 잠재성

29)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 pp. 349-350.

30) 독일 신문 FAZ (1973. 8. 9.)에 실린 ‘김대중 도쿄서 납치’라는 기사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던 윤이상은 서울에서 계획되었던 오페라 〈심청〉 공연 참석차 일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포기한다.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 43.

31) 1974년 9월 5일 도쿄 시부야 공회당에서의 윤이상 연주회에서는 로양, 유동, 차원, 예악이 연주되었다.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p. 47-48.

32) 일본정부가 김대중납치사건에 관여했음에도 일본여론은 당국을 비판으로 압박하여 김대중 구출을 위해 기여했다. 김영미,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 연대”, 한국 근현대사 연구 5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pp. 214-251 참고.

33) 루이제 린저, 『상처입은 용』, p. 269. 윤이상의 제자 호소카와 도시오도 이 연주회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기억한다.

이 있었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음악으로 독재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김대중 납치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윤이상은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에 관여했고, 1977년에는 한민련(한국 민주 민족 통일 해외연합)의 유럽본부 의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했다.³⁴⁾

4. 작품으로 말하는 윤이상의 평화사상

민주화에의 염원과 평화통일이라는 강렬한 동기는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되었는가?

윤이상은 살아생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대음악의 대가로서 독일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여러 언어로 많은 강연과 인터뷰를 남겼다. 언어적으로 드러난 음악가의 철학 또는 사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음악가의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관건이다.³⁵⁾ 따라서 윤이상의 평화통일 사상도 작품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는 불의에 저항하였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인류애를 표현하기 위해 그의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그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의 윤이상 작품세계를 살펴보면, 평화사상을 전달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악곡일 경우 장르적 제목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내용을 담은 ‘인간적’ 제목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1980년 광주사태에 충격을 받아 작곡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를 들 수 있다. 1980년 한국내에서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광주사람 외에는 알기 힘들었지만, 독일 기자 유르겐 힌츠페터(Juergen Hinzpeter)를 비롯한 외신기자 등 외국인이 찍은 사진들과 영상 및 증언이 독일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보도되었다.³⁶⁾ 비인간적 만행의 참담한 광경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힌 윤이상은 처참한 심정으로 <광주여 영원히>를 작곡했다. 이 작품을 쓰는 도중 고통으로 작업을 중단하기도 하여 완성하기까지 반년의 시간이 걸렸다.³⁷⁾

1981년 5월 8일, <광주여 영원히>가 쾰른에서 초연되었을 때, 광주에서의 만행을 듣고

34) 1990년12월에는 베를린에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의장에 추대되어 1994년까지 의장직을 수행했다.

35) 문체적 글을 많이 발표한 리하르트 바그너의 경우, 그의 글과 사상이 (히틀러와의 연관성 때문에 부정적 의미에서라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가진 힘과 설득력 때문이다.

36) 2017년 8월 개봉되어 주목받았던 장훈 감독의 <택시운전수>에 그 배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37) 한스 베르너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尹伊桑의 音樂世界』, p. 424.

“1년이 지나도 가슴 속의 커다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무력한 분노로 사람들은 여전히 치를 떨고 있었다”는 베를린 예술대학의 교수 디터 슈네벨(Dieter Schnebel)의 말처럼,³⁸⁾ 1980년 광주 학살은 청중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따라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초연되었던 <광주여 영원히>는 광주 시민항쟁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음향적 고발로 여겨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분노를 감지”하게 하고 “마치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듯한 울분”³⁹⁾이 가득한 이 작품에서 윤이상은 단순히 광주 희생자만을 슬퍼하고 위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원어 제목 <Exemplum in memoriam Kwangju>이 암시하듯, 광주를 ‘보편적 차원’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자를 기억하는 기념비로서, 하나의 모범, 즉 표본(Exemplum)으로 상징화하고자 했다. 실제로, 예술작품이 정치적 사건에 밀접하게 관여하면 할수록 그 생명력은 짧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제목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음악적 장르로 보면, 3부 구성의 <광주여 영원히>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 표현해내고자 한 교향시이다.⁴⁰⁾ 1부에서는 광주시민의 항쟁과 군인들의 만행, 2부에서는 경악과 죽은 자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트럼펫의 날카로운 소리로 시작하는 3부는 남한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지속적 투쟁을 호소하는 내용이다.⁴¹⁾ “작곡된 충격”으로 칭해지는 이 작품이 표현하는 강렬하고도 격렬한 분출, 즉 “격정의 직접성”을 들으면, “스스로 당하고 직접 겪은 것과 같은 충격”이 음향으로 옮겨져 청중을 전율하게 한다.⁴²⁾

퀼른에서의 세계초연 후, 1981년 5월 20일 도쿄에서 다카하시 유지 지휘로 일본 초연되었고, 1984년 10월1일 캐나다 현대음악제에서 뒤뜨와의 지휘로 캐나다에서 초연되었다.⁴³⁾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광주의 학살진상이 더 잘 보도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광주여 영원히>를 들었던 외국청중에게 ‘광주’라는 제목이 주는 작품 의도는 어려움 없이 전달될 수 있었다. 즉, <광주여 영원히>는 한국의 독재정권이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생생한 ‘음

38) 슈파러 등의 해설 『尹伊桑의 音樂世界』, p. 510.

39) 한스 베르너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p. 424.

40) 디 벨트(Die Welt)의 저널리스트 폰 튀트비츠는 <광주여 영원히>를 피카소의 <게르니카>나 베토벤의 <웰링톤의 승리>와 같은 예술작품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한다. 한스 페터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p.

41) 3부를 ‘정의의 행진’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한스 페터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p. 454.

42) 윤이상의 작품세계, 509, 511. 작곡가가 충격적 보고를 접한 후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음향화했다는 점에서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와 비교 가능하다. 제2차대전이 끝난 후 가족과 친지가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소식을 접했던 쇤베르크는 1943년 바르샤바 게토에서 있었던 유대인의 항거가 나치들에 의해 처참하게 진압되는 과정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미국에 건너온 실제 인물의 경험담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나치 치하의 표현 불가능한 고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음악 뿐 아니라 내러티브(영어, 독일어, 히브리어)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인간 감성에 직접적으로 호소했다. 이경분, “이놀드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와 망명음악”, 낭만음악 통권 45호, 1999 참고.

43)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p. 89-90. 한스 베르너 하이스터는 <광주여 영원히>는 청중을 사로잡고 “숨막히게 하는 마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스 베르너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p. 427.

악적 보고서’로서,⁴⁴⁾ 광주가 저항을 상징하는 ‘평화의 도시’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즉, 시기적으로 한국의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때의 <광주여 영원히>는 제목만으로도 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적’인 제목이 모두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넬리 작스(Nelly Sachs)의 시 제목 <어둠에서 노래하다 Im Dunkeln singen>를 부제로 한 윤이상의 교향곡 4번의 경우는 (부)제목만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추상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2악장을 아시아의 불우한 여성들에게 바친다는 헌정의 말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⁵⁾

둘째,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평화의 메시지 발신을 위해, 윤이상은 시적 제목 뿐 아니라, 텍스트를 음악화하여 칸타타와 같은 성악곡을 이용했다.⁴⁶⁾ 그 첫 시도로서 베를린에서 반나치 행적으로 처형당한 알브레히트 하우스호퍼(Albrecht Haushofer)의 시집 『모아비트 소네트 Moabiter Sonette』를 바탕으로 칸타타 <사선에서 An der Schwelle>를 작곡했다.⁴⁷⁾ 하우스호퍼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시에서 윤이상은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인류에게 전하는 예술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인간정신의 위대한 힘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나치의 핍박을 피해 스웨덴으로 망명했던 넬리 작스의 시를 음악화한 <밤이여 나뉘어라>⁴⁸⁾도 죄 없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나치의 폭력을 폭로하고 기억하고 고통을 나누고자 했다. 나치핍박에 저항한 사람과 나치의 폭력의 희생자를 잊지 않는 것은 곧 정의를 세우는 행위라는 메시지이다.

반면, 한국청중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제로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남한 시인 경련, 문병란, 백기완, 문익환, 고은, 양성우, 박봉우, 김남주, 박두진의 시에서 발췌한 한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곡했다.⁴⁹⁾

45분 정도의 연주시간을 가지는 이 작품은 모두 4악장으로 되어 있고, 1악장은 “역사”, 2악장은 “현실1”, 3악장은 “현실2”, 4악장은 “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나의 땅 나의

44) 한스 베르너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p. 425.

45) 1983년 일본작곡가들과 도쿄에서 대규모 반전반핵 음악제 위촉작인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의 2악장 “나비와 원자폭탄의 대화(Dialog Schmetterling und Atombombe)”(1983)도 비슷한 경우이다.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 191.

46) 윤이상의 작품세계에서 성악곡은 그리 많지 않다. 유럽 유학 전 한국에서 작곡한 가곡을 제외하면, 유럽에서 탄생한 성악곡은 주로 칸타타와 합창곡이다. 성악곡은 총 15곡 정도이다.

47) “이 삶을 끝내줄 수단들을/ 나는 내눈과 손으로 똑똑히 보두었다./ 단 한방이면-/ 제 아무리 단단한 감방의 벽도/ 내 영혼을 가두어 둘 수 없으리라.”로 시작하는 독일어 가사와 한글 번역은 한스 페터 하이스터, 『尹伊曠의 音樂世界』, pp. 528-531, 533-535 참고.

48) <밤이여 나뉘어라>는 여러 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윤이상은 “굳게 닫혀진 문”을 음악화했다. 가사는 “굳게 닫혀진 문 / 그 뒤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죽음은 열려있고 / 비밀은 그 뒤에 살아있다...밤이여 나뉘어라/너의 빛나는 두 날개는 경악으로 떨고 있다/ 나는 이제 떠나려고 한다/네게 피버린내 나는 밤을/들려주게 될 것이기에”로 되어 있다.

49) 유럽에서 작곡한 곡 중 ‘처음’한국어 가사에 곡을 부친 것으로 의미가 있고, <광주여 영원히>와 함께 조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송두율, “윤이상의 예술세계와 민족관”, 『尹伊曠의 音樂世界』, p. 87.

민족이여!>)가 한국에서 초연되기를 바랬던 윤이상의 기대는 무너지고, 결국 북한에서 1987년 10월 5일 초연되었다. 이 작품의 1악장에서 합창과 솔리스트의 유니슨 “겨레는 하나이다”는 4악장 끝에서 (당시 남한에서는 금기시되었던)“통일이여~”의 외침으로 이어진다. 한반도의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작품의 핵심메시지는 ‘말하는 듯한 창법(Sprechgesang)’으로 되어 있어 내용전달이 탁월하다.

셋째, 윤이상은 기악장르인 ‘교향곡’에도 ‘인간적’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목소리를 넣었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한 음악가는 베토벤이다. 그의 9번 교향곡에 쉐러의 <환희의 송가>를 성악곡으로 넣어 인류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4악장에만 성악곡을 삽입한 베토벤의 9번 교향곡과 달리 윤이상의 심포니 5번(1987)은 각 악장마다 (벨리 작스의 시를 바탕으로 한) 바리톤을 위한 성악곡을 삽입하여 인류애를 호소하고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⁵⁰⁾ 각 악장은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1악장은 ‘기억’, 제2악장은 ‘우리 구원된 자들’, 제3악장 ‘호소’, 제4악장은 ‘그대 방관자들’, 제5악장은 ‘평화’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 일명 ‘평화교향곡’이라 칭해진다.⁵¹⁾ “과거의 극복 없이, 애도의 작업 없이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⁵²⁾

넷째, 무엇보다도 윤이상이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시도한 독특한 방법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기악곡’ <화염 속의 천사>와 ‘성악곡’ <에필로그>를 ‘한 쌍’으로 연주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분신자살한 청년들을 “화염 속의 천사”라고 칭한 이 작품은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버린 청년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반면, <에필로그>는 소프라노와 합창은 뜻을 알기 힘든 “사우아예 사예로”로 시작하여 “소라아 가야야”로 끝나는데, 여기서 인간의 목소리는 언어적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초월하는 악기로서 사용되었다. 초상집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곡소리’와 같은 <에필로그>는 윤이상이 일생에서 3번 경험했다고 하는 “음악을 초월하는 음악(음향)”을 상상하게 한다. 윤이상이 말하는 ‘음악을 초월하는 음악’은 인위적으로 배워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힌 음악, 대자연 속의 음악, ‘배운 노래가 아닌 뼈를 저미는 듯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노래’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⁵³⁾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의 결합은 위대한 청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영혼

50) 독일어 가사와 한글번역은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562-571.

51) 베를린 시 750주년 기념위촉 작품으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초연되었다. 송두율, “윤이상의 예술세계와 민족관”, p. 86.

52) 교향곡 5번과 짝을 이루는 작품이 같은 해에 발표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라는 주장도 있다. 최애경, “미래를 향한 기억: 윤이상 음악에서 한국 문화의 위치와 의미”, 음악학, 32권 (2017), p. 86.

53)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p. 183-185.

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다 감성적으로 전달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⁵⁴⁾

지금까지 윤이상이 작품으로 사회정치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할 때 사용한 방법을 통틀어 요약한다면, 기악이든 성악이든 추상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인간적인 음악(인간성이 담긴 음악언어)’을 추구하였고,⁵⁵⁾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⁵⁶⁾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며, ‘듣기 힘든’ 음악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위해 윤이상의 음악언어는 “간소화되고, 직설적”이 되었으며, 협화음적이 되었다. 그리고 제목이나 헌정사 등 음악외적인 스토리를 작품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추상적인 음악세계와 구체적인 인간세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의도한 것이었다.

5. 윤이상의 평화사상: ‘음악의 힘’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평화’⁵⁷⁾

이러한 윤이상의 창작 배경에는 음악이 ‘인간의 감성에 가장 호소력이 큰 예술’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고 음악작품의 창작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21세기 현재 남북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보면, 여전히 신선하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즉,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남북화해에 적극 이용하였던 윤이상이 제시한 대담한 아이디어는 1988년 10월 휴전선에서 민족합동의 평화 음악축전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북한과 남한 정부에 제안하고 기획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⁵⁸⁾ 그러나 이 음악제를 구상한 배경은 삼팔선을 민족 분단 뿐 아니라

54) 기악곡에서 상징적인 특정 선율을 인용하여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1944)이 유명한 예에 속한다. 이 곡의 4악장(“죽음의 춤”)에서 유대인의 춤 선율을 인용하는데,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나치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로테스크한 범죄를 고발하는 메시지는 감성적으로 각인된다. 윤이상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아침이슬〉이나 〈님의 행진곡〉 같은 대중적 노래선율은 작품에 인용하지 않았지만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에서 민요풍의 멜로디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55) 윤이상/볼프강 빙클러/라이너 작트레벤, “조국의 전통에서 생수아오르는 나의 음악”, p. ?

56) 윤이상 작품의 ‘스토리성’에 대한 언급은 니시무라 아키라, “무한한 우주의 한 끝에서”, 『尹伊桑의 音樂世界』, p. 158. 대표적 예는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이중협주곡〉인데, 협주곡이라는 순수 기악장르이지만, 견우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비애와 고통”을 주제로 작곡되었다고 한다. 음악적 용어로 말하면 순수 기악장르의 ‘절대음악’과 스토리가 있는 ‘표제음악’이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부제가 없는 기악곡 〈무궁동〉도 민주화를 위해 “실망과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한국 청년들”을 주제로 작곡했다고 윤이상은 창작동기를 밝힌다. 하지만 모든 표제음악이 그렇듯이 청취를 할 때 반드시 스토리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57) 기독교적 예규메니컬(일치주의) 운동에서도 ‘정의로운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쟁과 같은 폭력이 없는 차원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가 있는 평화를 목표로 한다(Konrad Raiser, Ulrich Schmitthener (Hrsg.), *Gerechter Friede. Ein Ökumenischer Aufruf zum Gerechten Frieden. Begleitdokument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Münster, 2012). 윤이상과 이 운동과의 관련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58) 1987년 9월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부에 38도선상에서 평화음악축전을 열 것을 제의했고, 1988년 7월 1일 남북 양 정부에 정식으로 민족합동 음악축전을 제안하였으나 남한정부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여기고, 민족화해와 통일이 곧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삼팔선은 아니지만, 2년 후인 1990년 10월에는 평양에서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성사되었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를 단장으로 한 남한의 국악음악가들이 육로로 삼팔선을 넘어 평양에서 ‘남북한 공동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33명의 북한 음악가들이 남한으로 넘어와 서울에서 송년음악회를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이 획기적인 사건의 중심에 윤이상이 있었다.

이러한 구상과 실행에의 추진력으로서 윤이상이 신뢰했던 것은 ‘음악의 힘’이었다.⁵⁹⁾ 즉, 음악이 “정치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결정적 돌파구를 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음악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윤이상은 (위의 4장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평화메시지를 발신하는 음악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서술한 윤이상의 시도와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이상의 평화 개념에 ‘정의’가 전제되어있다는 점이다. 한편에는, 〈사선에서〉나 〈밤이여 나뉘어라〉에서처럼 과거의 역사이지만 나치의 만행을 잊지 않고, 희생자를 기억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 작품들은 윤이상이 희생자의 편에 서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광주여 영원히〉, 〈화염 속의 천사〉처럼 (윤이상의 당대) 현재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독재정부의 만행을 음악으로 고발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에서 ‘빼앗긴 자가 뺨김을 당하고 누르는 자가 놀림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때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자주 인용되지만, 윤이상은 자신의 음악이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음악은 특권자들의 성찬의 식탁 위의 금잔에 담긴 향내 나는 미주(美酒)의 역할만을 할 수가 없다. 음악은 때로는 깨어진 독배기 속에 선혈을 담아 폭군의 코앞에다 쳐들고 그 선혈로 하여금 화염으로 연소시키는 강한 정열을 뿜어야 한다...나의 음악은 ...사회적으로는 나의 조국의 불행한 운명과 민족, 민권질서의 파괴, 국가권력의 횡포에 자극을 받아 음악이 가져야 할 격조와 순도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적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⁶⁰⁾

윤이상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음악이 특권자의 장식품이 아니라 고통받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윤이상에게 ‘정의’는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인

59)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 140.

60) 윤이상, “나의 조국, 나의 음악”, 『음악동아』, 1984/3, pp. 35-36.

도적 정신”⁶¹⁾이었다. 즉,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조국에서 태어난 예술가”로서 윤이상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생각에는 한반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교향곡 4번에서처럼) “제3세계의 수난 받는 민중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고통이 있는 곳, 불의가 있는 곳에 자신의 음악으로 위로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자 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는 “인간과 인류에의 신뢰”를 포함한다.⁶²⁾ 윤이상이 말하는 인류에의 신뢰는 도교와도 관련이 있는데, 노년의 윤이상은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도교자체가 ‘영원한 평화’를 의미하고, 도교에 근거한 자신의 음악세계자체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암시한다.⁶³⁾

6. 끝맺으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윤이상의 기여

윤이상은 1970년대 중반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민주화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시작한 후, 세계적 명성이 확고한 때인 1980년대에는 교향곡을 작곡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인간적인 음악’을 시도했다. 이러한 그의 미학적 변화는 현대음악계의 비판을 받았다. 서구현대음악에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은 과거에의 회기를 의미하며, 과거에서 탈피하여 개척한 모든 새로운 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⁶⁴⁾ 1980년대 그의 음악이 ‘보수화’되었다는 비판이 평소 그의 작품을 사랑하던 친구들로부터 쏟아졌다.⁶⁵⁾

하지만 동백림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을 경험했던 윤이상은 음악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음악적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5번 교향곡에서는 조성적 음향을 사용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했다.⁶⁶⁾

61) 김연호, “나의 삶, 나의 음악, 나의 민족”, 『尹伊桑의 音樂世界』, p. 97.

62) 인용은 모두 김연호, “나의 삶, 나의 음악, 나의 민족”, p. 97.

63) Barrie Gavin & Ursula Klein, Isang Yun in memoriam: November–Elegie, 1996 SFB, <https://www.youtube.com/watch?v=5CZlu6ztpdc&t=714s> (21: 25' 부터, 검색일 2017.9.25.)

64) 볼프강 부르데는 튀빙겐대학 명예박사를 수여받은 〈윤이상을 위한 축사〉에서 헨체(Hans Werner Henze)의 교향곡 7번과 윤이상의 교향곡 1번을 현대 음악의 중요한 공헌이라 칭찬하는데, 현대음악계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p. 224.

65) 윤이상의 친구 홀리거, 또는 제자 호소카와 도시오 등은 윤이상의 1970년대까지의 음악을 높이 인정한다. 호소카와는 윤이상의 후기 작품에 너무 정치적 메시지가 강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66) 노년의 윤이상은 자신의 음악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소화, 직설적으로 작곡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에 묶여있지 않고, 도그마적 요구에도 자유로웠다. Günther Freudenberg, Gedanken zum Tod Yun Isangs, (www.asienhaus.de/public/archiv/yunisang.htm 검색일 2017.9.)

또한,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나치스를 연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진보예술가들이 알레기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그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날을 염원하며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같은 ‘민족주의적’ 작품도 작곡했다. 윤이상에게 유럽에서의 민족주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있지만,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는 외세에 저항하기 위한 ‘희생자’의 방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작품으로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유럽의 현대음악사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의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윤이상의 준비였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베토벤과 같은 외국작곡가의 작품이 아니라, 한국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그는 통일 되면 남북이 공동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현대음악연주와 관련해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북한의 연주가와 연주단체를 훈련시켜 놓았다. 1986년 바르샤바의 현대음악축제에 참가한 북한 교향악단은 높은 연주수준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매년 평양에서 개최하는 윤이상음악제도 30여년 지속해오고 있다. 남한에서는 2000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가 시작되면서 통영국제앙상블도 조직되어 현재 남북한이 공동으로 윤이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적 수준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통일될 때 휴머니즘과 인류화합을 상징하는 베토벤 9번이 연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축하연주회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연주되었듯이, 9번 교향곡은 전세계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정치가들이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이상의 음악이 음악애호가 뿐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제대로 수용되어야 윤이상의 통일을 위한 준비가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윤이상의 ‘이름’이 아니라, ‘음악’이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적 풍토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미,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 연대”,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5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pp. 214–251.
-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역사연구 제22호, 2012, pp. 139–168.
- 와카미야 요시부미, 『화해와 내셔널리즘』(김충식 옮김), 나남 2007.
- 우에노 아키라, “윤이상 작품의 밤”,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166–169.
- 윤신향,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한길사 2005.
- 윤이상, “정중동: 나의 음악예술의 바탕”(1985), 『尹伊桑의 音樂世界』(최성만 홍은미 편역), 한길사 1991, pp. 41–52.
- 윤이상/김연호, “나의 삶, 나의 음악, 나의 민족”,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91–108.
- 윤이상/볼프강 슈파러: 『나의 길, 나의 이상, 나의 음악』(정교철/양인정 옮김), 도서출판 HICE 1994.
- 윤이상/루이제 린저, 『윤이상. 상처입은 용』(홍종도 옮김), 한울, 1988.
- 윤이상/볼프강 Bing클러/라이너 작트레벤, “조국의 전통에서 샘솟아오르는 나의 음악”,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209–228.
- 윤이상/니시무라 아키라: “무한한 우주의 한 끝에서”,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146–163.
- 윤이상/정철재: “한국문화의 소외현상과 이의 극복에 대하여”,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135–145.
- 윤이상/송두울, 윤이상의 예술세계와 민족관,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83–90.
- 이경분, “일본에서의 윤이상 – “동아시아 작곡가”로서 윤이상”, 『음악과 문화』 24권, 세계음악학회, 2011, pp. 71–98.
- 이경분, “망명음악가 윤이상”, 『동양정치사상사』10권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pp. 195–215.
- 이경분, “음악과 정치: 마유즈미 도시로와 일본우익”, 『음악학』31호, 2016, pp. 59–91.
- 이경분, 20세기 음악가와 문학가: 쇤베르크와 브레히트의 만남, 낭만음악 54, 2002, pp. 47–70.
-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 창작과 비평사, 1998.
-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창작과 비평사, 1998.
- 임유경,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2, 2014, pp. 147–186.
- 요셉 호이슬러, “유럽음악과 한국적 전통”,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270–275.
- 한스 베르너 하이스터, 집단성과 구체성. 광주여 영원히에 대하여,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423–459.
- 한스 외슈: “도(道)의 정신에서 나온 음악 – 〈낙양(洛陽)〉에 관한 고찰”, 『尹伊桑의 音樂世界』, pp. 319–346.
- 최애경, “미래를 향한 기억: 윤이상 음악에서 한국 문화의 위치와 의미”, 『음악학』 32권, 2017, pp. 75–101.
- 최애경,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우주적 음향흐름’ – 윤이상의 『에필로그』(1994)”, 『음악학』13권, 2006, pp. 79–119.
- 최성만·홍은미 편역, 『尹伊桑의 音樂世界』, 한길사 1991.
- Konrad Raiser, Ulrich Schmitthenner (Hrsg.), Gerechter Friede. Ein Ökumenischer Aufruf zum Gerechten Frieden. Begleitdokument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Mit Anhang, Münster, 2012.

〈인터넷자료〉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회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 (1999. 9. 1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ISUudZN6zws> (검색일, 2017. 9.)

Barrie Gavin & Ursula Klein, Isang Yun in memoriam: November–Elegie, 1996 SFB, <https://www.youtube.com/watch?v=5CZfu6ztpdc&t=714s> (21: 25'부터. 검색일 2017.9.25.)

Günther Freudenberg, Gedanken zum Tod Yun Isangs, (www.asienhaus.de/public/archiv/yunisang.htm) 검색일 2017.9.

〈토론〉

이경분 “윤이상의 음악과 평화사상”에 대한 질의문

이희경 (연세대)

작곡가 윤이상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평생의 과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100년 전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그의 세대가 공유했던 의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굴레 속에서 일찍 스러졌던 동년배 작곡가 김순남이나 시인 윤동주과 달리, 살아남은 윤이상은 분단 체제에 온 몸으로 저항하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세계음악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예술가였지만, 평생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했고, 사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으며, 여전히 ‘친북인사’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학자 최유준의 지적처럼, “윤이상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찬 한국의 현대사이자 냉전의 세계사 그 자체”이며, 그런 점에서 “‘윤이상’이라는 이름은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향한 미학적·정치적 공감의 교두보”(경향신문 2017년 2월 22일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화사상’을 논하는 이 자리에 작곡가 윤이상이 소환된 것은 이런 그의 삶의 궤적에서 비롯된 일일 테지요.

윤이상의 예술세계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중요한 키워드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에서 ‘평화사상’을 도출해내는 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 어떤 사상을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철학적·미학적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분 선생님의 발표문은 그 어려운 작업을 감행한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윤이상의 작품들을 ‘정치적/비정치적’이라는 이분법적 수사로 나누는 것에 대해 회의적임을 밝혀둡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텍스트의 유무나 표제의 존재에서 그 작품의 의미를 찾는 것은 작곡가가 기운 생동하는 음들의 세계 속에 빚어놓은 수많은 요소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음악의 내적 논리에 집중한 작품과 뚜렷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작품을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관현악곡 〈예악〉(1966)이나 〈무악〉(1978)이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1981)나 〈화염 속

의 천사》(1994)보다 메시지가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칸타타 〈사선에서〉(1975)나 〈밤이여 나뉘어라〉(1980)를 탄생 배경이나 사용된 텍스트로만 이해할 경우 음악이 전하는 무수한 감정적 층위들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음악적 논의가 지닌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을 전제한 채, 발표문을 읽고 떠오른 단상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윤이상의 ‘평화사상’을 논해야 하는 이 난감한 과제 앞에서 우선 윤이상이 작품으로 사회정치적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네 가지 방식—‘인간적’(?) 제목, 성악곡, 가사 있는 교향곡, 초월적 음향을 통한 감성적인 접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악이든 성악이든 추상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인간적인 음악’을 추구”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시도”했기에, 윤이상의 음악언어가 “간소화되고 직설적이며 협화음적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4장 마지막 단락). 윤이상의 음악이 말년으로 올수록 이전 시대에 비해 귀에 익은 선을 진행이나 음향들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것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년의 양식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굳어지기 없이 간결한 형태의 음악을 선보이곤 하니깐요. 또한 윤이상이 뚜렷한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한 방식도 제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음악적’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텍스트를 가져다 칸타타를 쓰고, 특정 사건이나 현실에서 촉발된 감정을 교향시에 생생하게 담아내며, 베토벤 이후 계몽과 인류애의 표상으로 여기지는 교향곡을 빌어 휴머니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전통적인 장르를 자신의 창작적 요구에 맞게 심분 활용한 것 아니었을까요?

또한 발표자께서는 윤이상의 평화사상을 ‘음악의 힘’을 믿는 ‘정의로운 평화’로 개념화합니다. 그 용어가 어디에서 왔건, 윤이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5장 마지막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자신의 음악을 설명하면서 줄곧 표방해온 도교와 맞닿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이상의 평화사상을 논해야 한다면, 그의 음악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수많은 언술들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실천적 모습들도 재조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만이 아니라 제3세계 핍박받는 민중에 대한 연대나 반핵운동에 대한 윤이상의 입장도 정리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윤이상의 평화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고유한 내용을 지닌 것일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가 남북한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한 시도들은 억압과 저항이 존재하는 곳, 반목과 불화로 점철된 역사의 현장에서 행해져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카탈루냐 출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프랑코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의 난민촌에

머물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였고, 유대계 바이올리니스트 에후디 메뉴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을 위해 자신의 세계적 명성을 적극 활용했으며, 아일랜드 록밴드 U2 역시 비극적인 아일랜드 ‘피의 일요일’ 사건을 노래에 실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악이 지닌 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토대로 감동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연출한 평화는 지속되지 못했지요. 음악은 현실 정치에서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음악가들은 끊임없이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음악의 힘을 믿는 음악가이니까요. 윤이상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식민지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반평생을 타지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분단된 고국을 안타까이 여기며 살아온 예술가였기에, 누구보다 예민한 감성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문제에 반응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통해 인간 존재를 깊이 성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써낸 120여 편의 음악작품은 바로 그런 한 예술가의 삶의 흔적일 테고요.

윤이상이라는 음악가의 평화사상을 논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메시지가 두드러져 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그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도, 제게는 낯선 일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윤이상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작 그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음악회장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의 일상적 공간에서도, 윤이상의 음악이 일반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윤이상의 ‘이름’이 아니라, ‘음악’이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적 풍토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발표자의 마지막 문장처럼, 저는 우리 사회가 윤이상의 ‘음악’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평화와 통일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꿈꾸었던 세계는 그의 음악 속에 오롯이 담겨 있고 그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아 공명할 수 있을 때 평화에 대한 그의 메시지도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평화사상

2부

김대중의 평화사상

발표문_ 김학재 (서울대)

토론문_ 김근식 (경남대)

박정희의 평화사상

발표문_ 조동준 (서울대)

토론문_ 전재호 (서강대)

문익환의 평화사상

발표문_ 김형수 (『문익환 평전』 저자)

토론문_ 최형묵 (한신대)

리영희의 평화사상

발표문_ 서보혁 (서울대)

토론문_ 이대근 (경향신문)

김대중의 평화사상

: 민주주의 · 현실주의 · 창의적 낙관주의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1. 들어가는 말: 평화사상가로서의 김대중

김대중(1924~2009)은 제 15대 대통령(1998~2003)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통일 · 평화 문제에 관해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평생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여타 철학자나 사상가들과 달리 현실 정치인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관점을 형성했고, 대통령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이를 실현하려 했다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김대중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1)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고, 2) 동시대에서 가장 국제화된 감각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큰 인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배움의 기회이고, 큰 교훈과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큰 상실감도 든다. 반복될 수 없는 인물이고 경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의 통일 · 평화론이 가진 중요성, 그리고 한국 현실 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대통령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평가만이 아니라 깊이 있고, 다차원적인 학문적 연구가 절실하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는 한 사회가 그 인물이 처했던 역사적 환경과 경험,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 중요한 결정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과 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을 지혜의 공동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¹⁾

하지만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주로 ‘김대중 정권’의 특정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1) 학문이 발달한 국가들에서 주요 인물들에 대해 학문적 권위를 가진 평전들이 다양하게 출간되는 것은, 쉽게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배우고 남기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의 구조적 한계들(정태환, 2009), 대북정책으로서 햇볕정책의 특성과 장단점(김근식 2000, 최완규 2003, 박선원 2002, 이시형 2004, 이경호 2007, 허태희 외 2010)에 대한 당대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대부분이다. 김대중 정권과 통일 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홍석률 2008, 박태균 2002)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삼웅 2009). 이는 오랜 냉전과 군사 권위주의 시기를 거쳐 민주화된 한국 현대사와, 소위 87년 체제로 불리는 단임 대통령제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정치적 양극화polarization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지만, 그럴수록 체계적인 학문적 분석과 기록, 평가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김대중이 평생에 걸쳐 정립하고 현실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통일·평화론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 그 〈핵심 가치〉들의 특성에 주목해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김대중의 통일론은 크게 열린 민족주의Open Nationalism에 기반한 ‘자주’, 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eace의 관점에서의 ‘평화’, 전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cy를 지향하는 ‘민주’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자주란 통일을 포함해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강대국의 결정에 맡기거나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 자결의 정신에 입각해 해결하자는 것이지만, 반외세 자주화로 치닫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경계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상태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 평화개념에 입각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비핵화,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등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제 3세계 민족들도 선진국과 같은 자유와 번영, 정의를 누리고, 더 나아가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뜻한다²⁾. 이 글은 이 세가지 기본 가치들과 일부 중복되지만,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그의 평화사상이 기반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그의 통일·평화론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된 민주주의이다. 그에게 민주주의Democracy는 다른 모든 사상과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할 근본 규범Grund Norm이었다. 둘째는 그의 통일·평화론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현실화시키는데 필요했던 현실주의Realism이다. 그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란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달라서 오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만 달성 가능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그만의 통일·평화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했던 창의적 낙관주의Creative Optimism이다. 김대중은 기존의 통일, 평화론과 달리 남북연합이라는 차별적인 단계와 제도를 창의적으로 설계했고, 어떤 비관과 어려움에 직면해도 가

2)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p. 23, 33

능성의 미래를 믿는 낙관주의를 체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민주주의, 현실주의, 창의적 낙관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아래에서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다행히 김대중의 사유와 실천에 대해 비교적 방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의 물질적, 정신적 영향력은 다양한 담론과 제도, 인적 네트워크와 기억의 형태로 남겨져 있다. 이 글은 주로 지금까지 간행된 자서전과 저서들, 김대중 도서관이 펴낸 전집 등의 자료집을 활용했다.

2. Democracy 민주주의와 평화 : '선민주 후통일에서 글로벌 데모크라시로'

1924년에 태어난 김대중은 일제 식민치하와 태평양전쟁,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냉전, 군부 권위주의와 민주화, 세계화와 탈냉전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거시적 변동을 모두 경험했다. 박정희가 주로 식민지배, 독립 국가건설과 냉전대립이라는 시대를 반영한 인물이었다면, 김대중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파도'를 탄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국내 정치 경험, 국제적 경험, 그리고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경험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오랫동안 정치 정당생활political party을 했고, 특히 야당opposition party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쌓았다. 이미 30대 초반부터 다양한 잡지와 언론에 기고 하며 정치적 목소리³⁾를 내온 그는, 1950년대 장면, 신익희, 조병옥, 백남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신파계 인물로 정치에 입문하였다. 1956년, 33세의 나이로 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민주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고⁴⁾, 4.19 직후 젊은 정치인들이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선전부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젊은 정치인 김대중은 그때부터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세상에 알려지고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에서 출마하기 시작한 이후⁵⁾, 세 번 낙선했고 마침내 1961년 5월 인제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바로 5.16 쿠데타가 발생하여 의원직을

3)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2011), 『김대중 연보 (1924~2009) 1』, 시대의 창, pp.28-29

4) 『김대중 연보 1』 (2011, pp.30-40)

5) 김대중 (2011), 『김대중 자서전 1, 2』, 삼인, p. 89.

수행하지 못했다. 1960년대 정치인 김대중은 목포에서 연달아 당선되면서 보수 야당의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념을 만들고, 야당으로서 이념 체계와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김대중은 비교적 선명하게 군사정권에 반대한 야당 지도자였다. 19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의 지역구이던 목포에 거물급 여당 인사를 전략공천하고 그를 낙선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때 까지도 김대중은 한일회담 반대운동 과정에서 매우 온건한 편에 속했다. 그가 군부 독재 세력에게 위협한 인물로 지목된 것은 1971년 대통령 선거때문이었다.⁶⁾

1971년은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의 생애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 국면이었다. 1969년 9월 14일 박정희 정부는 삼선개헌안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신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던 상황에서 1970년 (47세) 1월 27일 김대중은 <국제신보>에 '40대 기수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등 패기있는 40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대역투쟁을 전개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⁷⁾ 1971년 신민당의 당내경선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은 대선후보로서의 굼직한 정책들을 내놓고 대중적 인기를 끌며 박정희와 맞대결 하면서 예측을 불허하는 일대 접전을 벌였다.

그는 1970년 10월 16일 대통령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토예비군의 폐지, 대중 경제노선의 추진,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 전쟁 억제 보장,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 통일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교역 추진, 초중등학교의 육성회비 징수 폐지, 사치세 신설, 학벌주의 타파, 이종곡가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공약 하나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지만, 특히 향토예비군의 폐지와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론, 대중경제 노선은 국민들이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⁸⁾

4대국 안전보장론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론은 계속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오던 정부 여당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1971년 4월 27일 제 7대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어서 개최된 5월 총선에서 신민당이 패배하며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는 통일준비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같은 이유로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했다⁹⁾. 유신을 선포했을 당시 김대중은 치료차 일본에 체류

6) 홍석률 (2009),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역사적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37), p. 30.

7) 『김대중 연보 1』, pp. 221-233, 『김대중 자서전 1, 2』, p.199

8) 『김대중 자서전 1, 2』, p. 206

9) 『김대중 자서전 1, 2』, pp. 228-246

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김대중은 해외에 체류하며 반독재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박정권과 맞서 싸우려고 결심했다... 한국에서는 독재의 서슬에 누구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것이다. 또 그럴만한 민주 인사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나라 밖에서 자유롭게 내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론에 호소하자. 독재 정권의 해악을 세계에 알려 박정권과의 유착을 차단하자. 그러면 국내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싸우자. 민주 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조직도 결성하고, 생각과 뜻이 같은 교포들과도 함께 투쟁해 나가자.¹⁰⁾

당시 김대중은 일본 신문, 잡지, 텔레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상황을 알렸고, 일본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73년 7월 6일 교민들을 연결하여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창립했다.¹¹⁾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는 1973년 8월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일본 도쿄에서 납치당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한 그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그것이 일본과 미국의 정부, 정치인, 언론, 관료, 지식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결정적 계기였다.¹²⁾ 예컨대 당시 <세카이>를 중심으로 결합된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김대중 구명운동 뿐 아니라 한일 시민사회 연대를 추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¹³⁾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통령후보로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한 김대중은, 이후로 오랫동안 그 댓가를 치러야 했다. 대선후보가 된 김대중은 박정희를 비롯한 경쟁자들로부터 이후 십여년간 극도의 탄압을 받게 된다. 1973년 납치에서 풀려난 그는 이후 6년간 옥고를 치렀고, 55차례 가택연금을 당했다. 특히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을 통해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게 사형까지 선고하였다.¹⁴⁾

이런 큰 고난을 겪게 되기 전까지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업가 출신으로서 노동문제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

10) 『김대중 자서전 1, 2』, p.270.

11) 『김대중 연보 1』, pp. 286-307

12) 김대중 연보 1』, pp. 304-329.

13) 김영미 (2011),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14-251.; Lee, Misook, "The Japan-Korea Solidarity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From Solidarity to Reflexive Democracy," *The Asia-Pacific Journal*, Vol.12, Issue 38, No. 5, September 22, 2014.; 鄭根珠 韓國民主化支援運動と日韓關係: 『金大中内乱陰謀事件』と日本における救命運動を中心に (後藤乾一教授退職記念口: アジアのなかの日本 日本のなかのアジア), *アジア太平洋研究* (20), 359-371, 2013-02

14) 홍석률 2009: 31

었고, 젊은 세대 정당 정치인으로서 실력과 정책으로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연구소를 설립해 정책을 만드는 훈련을 해왔다.¹⁵⁾ 하지만, 유신체제가 도래한 이후 민주주의와 국제연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생명마저 잃을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 그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하며 근본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김대중이 보기에 통일이란 주제는 금기가 많았고,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부터 그는 “외부 자극이 있을 때만 발작처럼 일어나는 통일논의는 건전하지도 않고 그것이 통일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고 보았다.¹⁶⁾ 1971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당시 미국과 유럽을 방문중이던 그는 “민주화 요구가 억누를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자, 박정권은 영구 집권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북한을 끌어들여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냉전의 물줄기를 끌어와 독재를 획책하는 박정권이 참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1972년 유신 이후에 그는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빌미로 민주 정치를 짓밟고 있고, 통일 세력을 용공분자로 몰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우선시 하는 운동에 반대하는 ‘선민주, 후통일’ 원칙을 수립한다. “박정희 정권 교체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¹⁷⁾

통일보다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그의 입장은 수많은 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 강연, 질의 응답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발전되어갔다. 처음에 그의 민주주의 이해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것,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점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다른 정치 이념을 포괄하는 제도로써,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책무를 지는 신념으로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게로 확대되는 사상으로써 진화했다.

예컨대 1986년 9월 하버드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방문시 그는 강연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지금 망명까지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민주주의는 서구 사회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민주주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김대중은 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유산을 찾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첫째, 동학의 인내천 사상처럼 역사속에 민본정신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최근 한국의 100년의 역사를 보면 3.1운동, 60년의 4.19, 79년의 부마 항쟁, 80년의 광주항쟁까지 민주화

15) 그는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온 직후 한국노동문제 연구소에 상근하며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보적글들을 출판했고, 1964년에는 국제문제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해 한국 내외문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런 경험은 이후 대통령이 되어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이어진다. 『김대중 연보』, pp. 28, 29, 『김대중 자서전』, p. 90, 163;

16) 〈조선일보〉 주최 좌담회 발언 『김대중 연보』, p. 117

17) 『김대중 연보』, pp. 256-257, 307-311

운동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보수적인 전통으로 여겨지는 유교의 근본정신에도 민주주의 원칙이 있음을 설파했고, 넷째, 한국의 교육수준이 세계 정상급이어서 향후 민주적 시민성의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렸다¹⁸⁾

아시아에 민주주의의 뿌리와 전통이 깊다는 그의 견해는 당시 아시아적 가치와 발전모델을 논하며 민주주의는 서구의 가치이며, 아시아 국가는 나름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주장했던 싱가포르의 리완유 수상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었다¹⁹⁾.

이렇게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된 김대중의 국제적 민주주의 인식은, 한국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긍정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이해로 발전했고, 탈냉전 이후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더 확대되어 전지구적 민주주의, 생명철학으로 나아갔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로 패배한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해 영국의 여러 학자들을 만났다. 당시 그는 앤서니 기든스, 존 던 교수와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국민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차원을 달리하여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자유와 정의가 깃든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형제인 모든 생명붙이에게도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나무, 풀, 동물, 물고기, 날짐승, 공기, 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든스 교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코스모폴리탄 데모크라시²⁰⁾’라고 명명해야한다고 말했고, 김대중은 글로벌 데모크라시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²¹⁾

김대중이 생각하는 전지구적 민주주의는 일국적 측면을 넘어 국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책임성을 지는 일이었다. 각국가 내에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나아가 제3세계 민족들도 선진국과 같은 자유와 번영, 정의를 누리도록하자는 것이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체의 보전을 위해 생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때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포용성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 문민 주도의 정치, 문화적 전통, 과거제도의 개방성, 언론 자유 존중, 타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주의, 교육에 대한 열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교훈 등이 그 근거였다. 그가 보기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적 사상과 전통에 뿌리를 둔 새로운 민주주의, 전지구

18) 김대중 (2011), 『김대중 자서전 1, 2』 삼인. pp. 437~438.

19) 1994년 (Foreign Affairs) 11, 12월호

20)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는 기든스가 재직해던 런던 정경대학(LSE)를 중심으로 David Held, Richard Falk, Mary Kaldor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자유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대와 지구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이다. David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Polity Press, Cambridge, 1996; 이에 관한 다양한 리뷰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Daniele Archibugi (2004), *Cosmopolitan Democracy and its Critics: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0(3): 437-473.

21) 김대중 (2011), 『김대중 자서전 1, 2』 삼인. pp. 573

적 민주주의로 한단계 높은 경지로 올라설 때 비로서 이상이 실현될 것이었다.²²⁾

그는 탈냉전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중심에 둔 해석을 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냉전의 양대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91년 9월 17일 모스크바 대학 초청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날 공산 국가들이 몰락한 것은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독재적 사회주의가 패배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몰락한 나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나라들 역시 독재 자본주의에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같이 성공했습니다. 20세기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²³⁾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을 조화할 수 있다는 그의 관점은 지속되었다. 2008년 7월 3일, 계간 <역사비평>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그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는 자유를 주장하고 하나는 빵을 주장했는데, 그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가 있으면 빵이 있어야 하고, 빵이 있으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사회민주당이 등장한 것이고요, 사회민주당은 자유와 빵을 병행하거든요. 자유 없는 빵도 싫고, 빵없는 자유도 싫고,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이고, 미국의 리버럴한 사람들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²⁴⁾

민주주의를 통한 냉전의 극복, 아시아 민주주의의 근본과 가능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중국의 정치 개혁, 민주화 가능성도 포괄하고 있었다. 예컨대 2008년 4월 4일,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사회학과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중국이 과연 민주화로 나갈 것인지, 경제 개방으로 성장한 중국 중산층도 정치적 억압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장담할 순 없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중국이 민주화로 나아갈 것이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답한다. 그는 17세기 말 유럽에서 존 로크가 사회계약론을 주장할 때, 통치자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선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를 도로 회수할 수 있다는 인민주권주의를 주장했는데, 동양에서는 존 로크보다 2,000년이나 앞서서 맹자가 폭군 방벌론을 주장했음을 지적했다. 맹자는 방벌론에서 황제는 천자로 하늘의 아들인데, 하늘이 자신을 대신해 좋은 정치를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며,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인민이 하늘대

2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33-34.

23) 김대중 (2011). 『김대중 자서전 1, 2』, 삼인. pp. 540

24) 『김대중 전집 1』 제 10권, p. 426.

신 일어나 그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이처럼 김대중은 1971년 이라는 결정적 국면을 거쳐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적인 규범 Grund Norm으로 체득했고, 이를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통과 가능성을 보는 관점으로, 냉전 양대 이념을 조화시키는 제도로, 전지구적 책임성을 지는 보편적 가치로, 생명과 평화를 포함하는 생태사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야당의 신진 대통령 후보로서, 국제적 민주화운동 연대의 리더로서, 민주화 이후에도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국제적 소통을 통해 한국적, 아시아적 보편성과 가능성을 확인해간 이상주의자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거시적 안목과 Realism : 단계적 통일론

김대중은 현실 정치의 발전과 남북 관계의 전망에 대해 큰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지속해서 그가 강조해 온 바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동시에 가져야한다는 것이었다. 통일문제는 한국의 국내 정치의 문제와 달리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여러 강대국을 상대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하는 문제였다. 민주주의라는 규범을 수립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국내 정치의 문제와 달리, 국가간 관계는 늘 아나키적이고 경쟁과 적대가 일반화되어있었다. 냉전 대립이 극심하고 분단과 전쟁, 체제대립이 수십년간 지속된 남북관계야 말로 냉철한 현실주의적 판단이 없다면 조금도 진전시키기 어려운 분야였다.

김대중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30년에 걸쳐 숙성된 통일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통일론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그는 민주당에 입당한후 4.19 혁명을 거치며 1960년 12월 민주당이 앞으로 통일문제를 다룰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유당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이론적인 공세를 펼칠 것을 주창했다. 당시 그의 통일론은 자유당에 비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이지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중립 통일론이나 남북 교류론에 대해서는 인기영합주의라며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1960년대 초반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자 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바뀌기 시작했다. 국제적 조류가 바뀌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

2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5), 『김대중 전집 | 제 10권: 국가 원로와 국제 평화지도자의 길을 걷다 2 (2007년 4월~2009년 8월)』,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 323

이었다.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에 이르면 그는 통일문제에 대한 주장을 위협한 사상으로 간주하거나 회피해선 안되며, 강경일변도 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며, 통일을 위해 경제력 신장 등의 대책등 포괄적, 거국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⁶⁾

1964년 11월 <세대>지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활성화해야한다며 통일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²⁷⁾ 특히 1960년대 초반 베를린 위기와 쿠바미사일 위기 이후 서독을 중심으로 동독의 주권을 불인정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자 김대중은 1966년부터 한국 정부의 냉전적 입장 고수가 '국제적 조류'에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대중은 정부의 통일 정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고,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공산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하자며 실리 외교를 주창했다.²⁸⁾ 유엔 내부에서 점차 자유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세력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되었다.²⁹⁾

이는 1950년대 이후 북진 통일, 1960년대의 승공 통일론이 북한의 적화통일론과 대립하던 당시 정치 상황에서 박정권이 설정해놓은 통일론의 수위를 훨씬 넘는 발언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의 주장을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우두머리인 소련, 중공과 교류하자'는 것이라며 용공으로 비난했다.

김대중은 유난히 국제적 흐름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야당 주요 정치인으로서 그에겐 다양한 국제 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예컨대 1966년 2월 야당 정치인으로서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출정, 3개월.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런던, 뉴델리, 홍콩, 도쿄 방문했다. 5월 27일에 귀국한 그는 "정부는 지금 세계가 걸어가고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어요. 외국의 번영을 볼 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정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³⁰⁾ 그는 1969년 7월에 미국과 유럽을, 70년 2월에도 미국과 유럽 일대를 방문해 인터뷰와 면담, 강연을 했다.

국제적 데탕트 조류를 민감하게 지켜보던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 '남북간의 평화 교류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본격적으로 제창했다. 향토예비군 폐지나,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 교류론에 대한 폭발적인 대중적 지지를 경험한 김대중은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와 귀국 보고 강연회를 통해

26)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281. 정부차원의 통일 연구 기관인 통일원이 설립된 것이 이때부터였다.

27) 『김대중 연보 1』, pp. 61-64.; 『김대중 자서전 1, 2』, p. 166.

28)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 통일의 방략』, 한길사, 1993.

29) 『김대중 연보 1』, pp. 151-152.

30) 『김대중 연보 1』, p. 162.

보다 체계화된 형태의 ‘3단계 통일방안(평화공존 → 평화 교류 → 평화 통일)’을 국민 앞에 제시하였다. 당시 맥락에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 의지를 결여한 당시 정부를 비판하며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통한 평화 공존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남북간 기자 교류, 체육 문화 분야 교류를 비롯 사회 각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평화 통일을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당시 김대중의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지만³¹⁾, 이 시기는 정확히 서독에서 1969년 빌리브란트가 총리가 된후 동방정책Ostpolitik을 표방한 접근을 통한 변화, 교류 협력 정책이 서독과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1970. 8) 서독과 폴란드의 바르샤바 협정(1970. 12), 베를린 협정(1971. 9), 동서독 기본협약(1972. 12)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김대중은 1972년 7월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주장하였다. 당시 고조되어 있던 국제적 화해 무드를 일찍 간파하여 나온 진취적인 발상이었다.³²⁾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후 김대중은 오랜 기간 국제적 민주화 투쟁과 투옥, 가택연금 등을 거치며 ‘선민주, 후통일’원칙을 고수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이 붕괴한 후에도 전두환 정권기에 사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고난의 시기를 보낸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낙선 한 이후 국내외에서 숙고의 시간을 보내며 통일론을 보다 발전시키고 체계화 하게 된다.

1980년대에 김대중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며 한반도에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 제시한 통일방안에 보다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일의 제도적 접근을 모색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의 길을 열기 위해 연방제를 만든다’는 새로운 구상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완전통일로 가기에 과도적으로 연방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당시 김대중은 공화국 연방이 영연방Commonwealth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았으나, 느슨한 상징적 연방기구하에 평화 공존과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³³⁾

이렇게 통일 이전에 과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연방제에 대한 검토를 하며, 김대중의 통일론이 틀을 잡아갈 때,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 선언이 발표되었고 북방정책이 추진되었다. 한국은 구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했고, 1991년엔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김대중은 이 시기 국가연합단계에서 연방제로, 완전 통일로 이어지는 작업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3단계 통일론을

31)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278-279.

3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285.

33)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286-288.

완성하는데, 1991년 4월에 발표된 남북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은 기존에 '느슨한 연방단계'라고 표현한 것을 '남북연합단계'라고 명명하고 확립시켰다.³⁴⁾

1990년대 김대중의 통일론이 완결된 것은 1994년 1월 그가 염원해왔던 Think tank인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그의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하기 위해, 임동원, 사무총장. 운영위원으로 김남식, 김성훈, 라종일, 박종화, 백경남, 한상진, 재단 연구위원으로 박건영, 박병석, 이강래, 이석수, 이성봉, 최성, 하상식, 함인희, 황주홍 씨가 참여했고, 여러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1995년 8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출간했다.³⁵⁾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로 설정하고 있고, 통일을 3단계로 설정하여, 1단계 남북연합, 2단계로 남과 북의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3단계로 중앙집권 혹은 여러개의 지역자치정부를 포함하는 세분화된 미국, 독일식 연방제로 완전통일 되는 것을 지향했다.

그가 통일을 기존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이나, 북한 정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연방제)과 차별화 한 것은, 첫째, 남북연합단계를 먼저 구성하여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분단 상황과 통합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설정한 점이고, 이점에서 '공동체 통일방안'과 다르다. 둘째, 통일의 2단계, 3단계를 모두 남과 북, 각 지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연방제를 상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단계 없이 바로 연방제로 들어가는 북한의 통일안과 3단계에서는 하나의 완전한 중앙정부 체제로 통합되는 '공동체 통일방안'과 다르다.³⁶⁾

단계론적으로 통일론을 만들게 된 것에는 통일과정이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과정이란 것을 인식하고, 이 과정을 평화롭게 관리할 역량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현실주의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독일의 통일 후유증에 대한 그의 해석이 영향을 주었다. 김대중은 1990년대 초반 영국에 머물며 독일을 세 번 방문했는데, 정치적 분단이 청산되었지만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런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적어도 30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했다. "동독 사람들은 일종의 물질주의적 환상을 가졌다. 통일이 되면 서독의 풍요가 절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다. 통일의 대가는 혹독했다. 생각지 못한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생겨났다. 자생력 없는 동독 기업은 거의 문을 닫았고,

34)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280-289.

35) 『김대중 자서전 1, 2』, p. 600.

36) 보다 상세한 비교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48. 표 <1-1>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과 3단계 통일론 비교

동독 경제는 회복 불능의 파국을 맞게 되었다.”따라서 조급해서도, 흡수 통일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통일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었다. 분단 국가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남북간에는 전쟁을 치렀고,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증오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갑자기 통일을 한다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³⁷⁾

김대중은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를 늘 비교했다.“우리의 통일은 수백만 명의 남북 민족이 희생된 베트남식 무력통일 방법은 절대로 배제해야합니다. 또한 극단적 갈등을 면할 수 없는 독일식의 흡수통일도 배제해야합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의 대원칙으로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방향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³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1970년대 초반에 등장했을 때에는 호전적인 냉전 대립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 보다는 상호 인정에 기반한 평화 공존을 먼저 이루고, 그에 기반해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서독 동방정책의 방침rationale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1980년대 후반의 지연된 민주화를 거치며 그의 통일방안은 점차 정교해졌다. 이미 북방정책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오랫동안 ‘연방제’라는 개념으로 통일론을 선점해온 북한의 통일방안과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민주화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 통일이 현실화되자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더욱 커졌다. 독일을 방문한 그는 독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통일의 후유증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단계론적인 접근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구상을 정교화했다. 단계론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해결에 매우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보다 포용적인 입장에서 추진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창의적 낙관주의: 남북연합과 북핵 위기에 대한 논평

1995년 무렵에 완성된 그의 통일 방안은, 기존의 통일방안과 차별적인 창의적 요소가 있

37) 『김대중 자서전 1, 2』, pp.575-576.

38) 『김대중 전집 10권』, 4

었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연합(제1단계)를 특히 중시했던 것이다. 영어로는 The Korean Commonwealth라고 칭한 남북연합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의 영어 표기가Koryo Confederal System인 것을 염두에 두고, 독일식 연방제Federal system보다는 영국식의 느슨한 자유주의 국가간 연합을 참조함으로써 용공 시비를 피하고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호칭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냉전적 대립과 조응하는 한국의 양극화된 정치지형의 산물이지만, 여기서 이런 제도적 디자인 자체가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론의 1단계가 교류 협력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통합과 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유럽 통합의 모델로 여겨지는 시장, 안보 중심의 통합인 기능주의 이론 functionalism의 접근과 달리, 김대중의 통일론에는 오히려 남북 연합을 먼저 창설함으로써 이 제도를 통해서 평화 공존을 이루고, 평화 교류를 촉진하며, 통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자체를 평화롭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남북 연합이란 “남과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 분단 구조의 영구화를 지향하는 선린우호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의 소산이다.³⁹⁾

남북연합의 주된 임무는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3대 행동강령을 촉진하는 것인데, 먼저 평화 공존은 남북한을 상호 인정, 체제 공존을 도모, 정치적 신뢰 구축, 무력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 연합의 두 번째 임무는 평화교류인데, 이는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촉진시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며,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임무는 평화 통일인데,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어 연방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될 때,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이나 우세한 경제력을 이용한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통일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연합은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연방제 통일로 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 실행.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남북연합 정상회의, 대의기구로서 남북연합회의, 정책 집행기구로서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연합은 3대 행동강령을 구현하기 위해 6대 과제를 실천하기로 되

39)『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36.

어 있다. 첫째,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중상하지 않음은 물론 일체의 파괴 행동이나 내정 간섭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서 정치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여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군축과 검증과정이 포함된다. 셋째, 민족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여 민족 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과 민족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활성화. 넷째, 사회, 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하여 동질성 회복하고 이질성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 모색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을 저해하는 남과 북의 법규 정비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공동의 법규 제정 및 시행하는 것이다. 여섯째, 평화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문이다.

〈그림 2-1〉 남북 연합의 기구 (70)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남북연합정상회의가 있고, 또한 상설 대의기구로 남북연합회의가 있다. 회의는 남북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 남북 동수로 대표 구성한다.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이뤄진다. 이는 이질적인 사회 집단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종교, 인종, 언어, 문화적 이질성과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원리를 협의적 모델 Consociational model에서 찾고 있다⁴⁰⁾. 남북연합회의가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반통일적 법률을 개정 내지 폐지하며, 추후 연방 의회를 구성한다.

남북연합 ‘통일실천이성’의 필수조건이 되는 분단의 타성과 상황논리에 좌초되지 않는 ‘분단비판이성’에 기반한다는 철학적 논의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칸트식 비판이론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⁴¹⁾

남북연합하에서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군비 통제, 남북한 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세가지 큰 과제가 있다. 먼저 평화협정은, 부정적 평화의 기준에

40) Lijphart, Arend 1984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 One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ijphart, Arend,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41)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71-76.

서 단순히 전쟁 상태 종식 선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 평화의 개념에 기반해 비무장지대 처리 방안, 군사적 적대행위 방지 조치, 남북간의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 군사 정전위, 중립국감시위의 대체 방안, 국제적 평화보장 조치 등의 포괄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⁴²⁾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남과 북이 현 정전 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정전 협정 체결의 직접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여지지 선언을 한 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선의 방안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평화협정 체결하는 4자간 협정 방식이 있다. 이때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라는 원칙을 견지한다.⁴³⁾

남북연합 체제는 경제적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 교류 협력에는 다섯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민족경제 공동체’의 형성과 융성을 목적으로 진행, 교역 제한을 철폐하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며, 대외 공동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재정·통화·사회복지 등 경제 정책까지 조정하면서 경제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 교류·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기회 비용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통일 이후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적 융성을 도모한다.(151) 즉, 사양산업 일변도의 북한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 수출 주도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대북진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동태적 생산부문, 전자, 통신을 외국이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일본이 북일 수교 대가로 차관 및 원조 제공. 미국이 대자본 진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독일 등 유럽, 중국, 러시아, 대만도 대북 투자 진출 고려중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다. 경제 교류 협력은 경제의 원리에 의해 추진되고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대만은 1988년 이등휘 총통 집권 이후 민간 기업들이 중국 진출 활성화했는데, 이것이 긴장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이다. 상품의 다양화, 상품 주기 단축, 다품종 소량 생산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 넷째, 속도와 양을 유연하게 조절해가며 협력하고, 다섯째, 환경친화적 교류 협력을 한다.⁴⁴⁾

42) 김대중의 통일론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평화 프로세스와 교류협력, 통일 과정을 모두 병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81)

43)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81-101.

44)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151-175.

이런 경제 교류 협력 분야에는 북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 협력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방식으로는 첫째, 남한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고, 둘째, 북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남한이 지원하고 셋째, 북한의 송전, 배전, 배선 설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동, 시베리아, 극동, 만주지역에 제 3국이 공동진출 하고, 자원과 사회간접자본을 공동 개발하는 구상들도 포함되어 있다.⁴⁵⁾

남북 연합은, 남북관계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촉진하며, 통일 과정을 매개하는 복합적 과제를 수행할 가장 강력한 제도적 해법institutional solution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일시적인 회담이나, 임시적인 조치와 합의로는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안된 해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연이어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6자회담 들을 통해서도 이 방안이 현실화, 제도화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상기하면,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한 후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까지 5년간 자신의 핵심 과제인 통일 정책을 현실화 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후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어 2003년 1월까지 총 60차례의 회담이 열렸다. 장관급회담 등 정치 분야 13회, 군사회담 17회, 경제분야 21회, 적십자 등 사회분야 9회. 이를 통해 남북간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었다.⁴⁶⁾

대통령이 되기 까지 키워온 그의 통일론과 탈냉전, 화해와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대두하는 지역 통합의 시대에 현실화된 그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집권 자체가 원내에서 다수파가 아닌 정당이 집권한 분점 정부였고, 지역주의에 기반해 충청도와 연합한 지역연합 정부였으며,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라는 다양한 구조적 제약속에서 통일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런 구조적 제약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으로 표출되었고 이는 영남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균열구조가 더 고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⁷⁾

박정희 정권시기부터 출현한 지역주의와 군사 권위주의의 유산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제 민주주의라는 구조는 김대중의 통일론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분점정부 상황을 극복하기

4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175.

46) 통일부, 1998, 1999, 2002

47) 정태환 2008, 2009, 최완규 2003, 박선원 2002

위해 집권당을 중심으로 정계를 재편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던 것이 내부 갈등을 초래했고⁴⁸⁾, 그가 대중적 인기는 있었지만, 강력한 조직력과 포용적 리더십이 부족하여 다른 세력과의 연합 형성이나 후계자를 키워내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⁴⁹⁾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논의가 전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북간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급급하다 보니 평화정착의 문제를 제대로 의제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정체성,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⁵⁰⁾. 아울러 연방제와 국가연합에 대한 공동성명 제 2항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아닌 자신의 3단계 통일방안에 기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랫동안 이어진 남북 교류가 북한 내부의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망도 대두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낙관적인 전망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친미, 친북, 친중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끼리 협력하지 않고 싸우면 결국 에서는 우리는 야심을 가진 어느 나라에게 이용당합니다. 조선 왕조 말엽처럼 다시 한번 친일파가 생기고 친러파가 생기고 친중파가 생기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⁵¹⁾라며 장기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반도 내부의 컨센서스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이고, 일본과 중국도 한반도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인데, 이들을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갖게 만들어 간 경험에 대해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남북관계가 적대적이되고, 남북화해를 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중이 가까워지면 일본이 견제하는 제로섬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은 바로 통일·평화 정책의 원칙들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중요시하는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것을 공개하면서도 그것이 반중국, 반러시아, 반일본은 아니라는 것,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납득시켰다는 것이다.⁵²⁾

그는 특히 통일의 경제적 전망에 대한 장기적 희망을 계속 해서 강조했다. “우리 경제 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북한 지하자원이 약 2조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입니다.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동, 금, 석탄 등 깔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 내 자원을 들여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북한이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48) 이시형 2004

49) 박태균 2002, 71

50) 이경호 2007

51) 2007년 11월 27일 경남대북대학원 대학교 특별 강연 “한반도와 동북아 - 대전환의 시대” 『김대중 전집 | 제 10권』, p. 301.

52) 2008년 7월 3일, 계간 〈역사비평〉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 인터뷰 『김대중 전집 | 제 10권』, p.435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관광자원도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고교까지 의무교육에 군대에서 10년 교육 받았고, 그러면서 임금은 중국 1/3이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하면 돈이 생기고 그때 철도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갖추면 됩니다.”⁵³⁾

아울러 젊은이들이 이 통일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공유하길 희망했다. 통일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군대 안가도 되지 않나요? 지원병 제도 될 것 아닌가요? 평화 향유한다는 것 아닌가요? 북한도 우리 무대가 된다는 것, 세계 속에 웅비한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대국인데, 합쳐서 7천만 밖에 안되는 나라가 갈라져서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왜 못느끼나요?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강국입니다. 우리는 갈라져서 힘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 엄청난 강대국이 우리의 양쪽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둘이 힘을 합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이 하나이고 북한이 0.5 인데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0.5는 탕진하는 것입니다. 근대 우리가 합치면 1.5가 되고 2가 되는 것입니다.⁵⁴⁾

그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 주변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의 긍정적 결과가 공유되길 희망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경제력에 있어서나, 인구면에 있어서나 세계와의 무역량에 있어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날로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내다볼수록 동북아의 평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없이 발전은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이룩되면 중미일러의 4대국은 물론 몽골까지 동북아지역은 안정 속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 3성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⁵⁵⁾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좋아지는 등 변화가 진행중이며, 북한과 미국이 국교정상화하고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하고 개혁 개방 도와줄 때 북한이 진짜 변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탄두 몇 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핵무기로 주민 밥을 먹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⁵⁶⁾ 비핵화에 상응하는 개혁 개방 가

53) 2008년 5월 13일 <한겨레> 창간 20주년 특별 인터뷰 『김대중 전집』 제 10권, p. 391.

54) 2007년 11월 13일 <오마이 뉴스>와의 특별 대담. 『김대중 전집』 제 10권, p. 284.

55) 2008년 10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중국 인민외교학회와 라오닝성 정부의 공동주최로 선양에서 열린 <제 2회 동북아지역 발전과 협력 포럼>의 연설. 『김대중 전집』 제 10권, p.600

56) 『김대중 전집』 제 10권, p. 520.

능성을 확신했다. 북핵개발이 계속될수록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은 더 강화되었다. 핵이 자꾸 쌓이면 핵에 대한 군부의 집착도 있고 해서 핵 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갑니까?”라고 물으며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고 국교정상화해 국제사회에 나가게 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⁵⁷⁾

그가 타계하기 전인 2009년 6월 4일 <중앙일보>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이 아직도 대화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아직도가 아니라 영원하지요. 미국하고 관계개선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해나갈 힘이 없어요. 더구나 중국까지 화를 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하니까요”라며 결국엔 대화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임을 낙관했다.⁵⁸⁾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결국엔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낙관을 유지했다. 군사력, 제제는 모두 실패했고 결국엔 대화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핵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평화협상뿐 아니라 북미수교까지 다 됩니다.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미국이 처음엔 북한에 군사력 쓰려고 했는데, 지금 중동에 발이 묶여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일본이랑 경제제재 해봤는데 우리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니까 별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6년이 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깨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다 손해 볼만큼 보고, 할수 없으니 대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지금 나하고 클린턴이 만들어놓은 그 길로 다시 온것입니다.”⁵⁹⁾

이처럼 김대중은 북한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통일방안과 노태우 정부가 마련한 통일방안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의 핵심은 남북연합이었다. 또한 김대중은 다양한 비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가 수십년간 바닥에서부터 쌓아올린 낙관주의를 끝까지 공유하고자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법을 찾아내고, 유연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갖고 정책을 지속해야하는 영역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귀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57) 『김대중 전집』 제 10권, p. 755

58) 『김대중 전집』 제 10권, p. 753.

59) 『김대중 전집』 제 10권, p. 285.

5. 나오는 말: 교훈들

“내가 진실로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는 절망감에 제2차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우려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려면 북한의 강경파가 경제적 붕괴를 앞두고 남한을 침공할 구실을 주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 해법을 구하는 것이 난제 중의 난제였다.”⁶⁰⁾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갈등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관과 비관여로 인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외교보단 국내 정치를 중시하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적극적 관여보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을 해온 한국 정부,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권력 승계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 3대 세습의 혼란을 넘어서 병진노선을 완성하기 위해 전념하는 북한 모두에게 공유된 미래의 전망은 철저히 부재한 상태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어떤 전망이 필요할 것인가?

김대중은 20세기중반~21세기 초반의 시대상황에서 수십년에 걸쳐 1)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2) 현실주의적 통일론, 3) 구체적 제도와 낙관주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사상과 철학, 정책 자체가 시대의 국제적 흐름을 읽고, 민주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타고 형성되고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자기 완결적인 하나의 이론체계와 청사진을 구성했고, 평생에 걸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의 시대적 조건은 그 토대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두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엔 많은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냉전과 분단 자체가 오래 지속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조건은 현실적으로 변화시키기에 늘 역량의 한계를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무엇보다 박정희 시대의 국가건설과 발전주의의 유산인 지역주의와, 군사 권위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도입된 87년 체제인 단임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제약이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의 현실적 토대이자 근본적 제약조건이었다는 진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대중의 철학은 호남의 무조건적 지지와 영남의 무조건적 불신을 받았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는 그 자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인 셈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국내 민주주의 체제의 갈등 구조와 정치 역학에 대한 더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60) 『김대중 자서전 1, 2』, p.577.

철학을 더 개선하고 실현 가능한 최선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나아가 후속 세대로서는 변화한 조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다. 막연한 낙관적 시대인식에 기반해 교류와 협력을 전폭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소극적이고 상대주의적으로 대응만하는 것도 점점 더 심화되는 북핵위기로 인한 갈등과 균열을 감당하기엔 부족한게 변화된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도, 희망적인 선의도 북한 체제, 정권, 사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는 아니다. 무엇보다 위의 김대중의 인용문에서 우려했듯이, 지난 9년여간의 강대강 대립속과 3대 세습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치기로 북한 내부에서는 강경파만 확대되고 온건파의 입지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협상은 사라졌다. 실제로 기존 김일성(도발 10회, 협상 26회), 김정일 정권(도발 68회, 협상 175회)과 비교해 김정은 정권은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군사도발은 80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협상시도는 단 2회에 불과했다.⁶¹⁾ 김대중의 단계론적 현실주의를 더 단단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핵개발이 가속화되자 북한에 대한 관용적 시선도 사라졌다. 북한에 대한 고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한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였다는 지적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약자의 강박관념”이라고 답변했다. “싸워서 남는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다투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강해서 그러면 증오할 수 있지만, 약해서 그러면 달래서 끌고 가야합니다. 북한이 말을 험악하게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안한다고 저자세는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김대중의 낙관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장기적 믿음에 근거해 있고, 필자는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하지만 보다 실천 가능한 단기적 현실에 있어서는 보다 냉철한 판단들이 요구된다. 타자에 대한 관용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국제정치경제학적 환경이 도래하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도 회복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더 나아간 낙관주의를 보여주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험로에 선 후대들은 더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해야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 역사적 경험의 표상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평화론이 그린 청사진의 최대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의 철학과 실천에서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변화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평가에 기반해 더 나은 철학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61) Lisa Collins (2017), "25 Years of Negotiations and Provocations :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ttps://beyondparallel.csis.org/25-years-of-negotiations-provocations/>

〈참고문헌〉

- 김대중 (2011), 『김대중 자서전 1, 2』, 삼인.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2011), 『김대중연보 (1924~2009) I, II』, 시대의 창.
- 김대중 (2009), 〈옥중서신〉, 시대의 창.
- 김대중 (1996), 〈대중경제론〉, 청사.
-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울.
- 김대중 (2010), 〈김대중자서전 1, 2〉, 삼인.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2015), 〈김대중 저작목록집〉,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2015), 〈김대중 전집 1부〉, 연세대 출판문화원.
- 류상영 외 (2013),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류상영 외 (2013), 〈김대중과 한국야당사〉, 연세대 출판문화원.
- 류상영 외 (2013), 〈김대중과 한일관계사〉, 연세대 출판문화원.
- 가지무라 히데키, 김대중 (1980), 『무궁화와 영원히』, 동경.
- 정태환 (2009),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모순과 한계. 『한국학연구』, 31, 387-416.
- 김근식 (2000), “햇볕정책 2년: 평가와 전망”, 『통일시론』 제7권.
- 최완규 (2003),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분석”, 『동북아연구』 제8권.
- 정태환 (2008), “김대중정권의 성립과 위기: 지역주의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2집.
- 박선원 (2002),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 이시형 (2004),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서의 여당의 위상과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14(2), 139-168.
- 이경호 (2007),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7(1), 191-213.
- 김삼웅 (2009), 김대중의 정치철학과 사상 탐구, 인물과사상, 114-126.
- 정해구 (2009),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37),
- 홍석률 (2009),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역사적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37), 26-38.
- 허태희, 윤황 (2010),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2(2):1-37.
- 박태균 (2002), 실패한 통일의 신화들, 황해문화, 37: 59-72.
- 김영미 (2011),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14-251.
- 통일부 (2002),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서울: 통일부, 2002.
- 통일부 (2002), 『대북정책 추진 현황(종합 자료집)』, 서울: 통일부, 2002. 10.
- 통일부 (1999),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서울: 통일부.
- 통일부 (1998), 『해설자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토론〉
김대중의 평화사상 토론문

김근식 (경남대)

1. 김대중의 평화사상은 그의 정치인생 전반에서 도출하는 것인지? 그의 대북정책과 통일론에서 도출하는 것인지?

2. 통상적으로 김대중의 평화사상을 그의 통일평화론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서 도출하는 것이라면 필자의 세가지 핵심가치에 추가해서 몇가지 첨언하고자 함

3.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 국제정치학에서 언급하는 이른바 ‘민주평화론’을 김대중의 평화사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민주평화론에 따라 김대중은 한국의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북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변화를 유도해 민주화를 도출하려는 것이었음
- 북한의 체제변화가 항구적으로 남북간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이 민주평화론일 수 있음
- 더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평화정착이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접근법을 김대중은 생각하고 있었는바, 이는 민주평화론에 더하여 평화민주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음¹⁾

1) 김근식,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연구』, 18권 2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010년 가을.

4. 현실주의와 관련해서는

- 단계적 통일접근이라는 김대중의 생각 말고도
- 국제정치학에서 언급하는 이른바 ‘현실주의’ 접근을 김대중의 평화사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통상 김대중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계보에 속하는 이른바 ‘기능주의적’(functionalism)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경제교류와 사회문화적 접촉 등 상호 기능망의 확대와 확산효과로 인해 남북의 평화가 증진되고 장차 통합을 촉진한다는 기능주의 접근의 대표적 정책이 바로 ‘햇볕정책’(engagement policy)임
- 그러나 김대중의 대북정책은 사실 기능주의라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지향하면서도 그 근저에는 힘으로 정의되는 ‘현실주의’적 토대가 바탕하고 있음
- 무엇보다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한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햇볕 정책을 실시했고, 햇볕정책의 핵심인 경제협력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심화시켜 북이 남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힘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음. 즉 경제협을 통해 한국의 힘의 우위를 더욱 가시화하려는 것이었음²⁾
- 김대중이 제시한 대북 3원칙에 맨 앞에 ‘튼튼한 안보’ 무력도발 불용의 의지가 강력히 천명된 것 역시 현실주의의 토대 위에 자유주의적 지향을 시도한 것임

5. 창의적 낙관주의와 관련해서는

- 김대중의 정치역정에서 일관되게 낙관주의를 견지하고 있었음은 올바른 지적임
- 그러나 평화사상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낙관주의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정립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창의의 핵심으로 제시된 ‘남북연합’은 사실 김대중의 구상 말고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창의적으로 제시되기도 했음
- 통일방안의 창의적 핵심은 오히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핵심이 남북연합이었고 김대중 통일방안의 창의적 핵심은 오히려 ‘공화국연방제’(이후 공화국연합) 였다고 평가

2) 김태현, “남북한 관계의 이상과 현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입장에서 본 남북한 관계,”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2000.10.21. 외교안보연구원) 발표논문, 13쪽.

될 수 있음

-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나 공화국연방을 창의적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대중의 평화사상의 핵심으로는 그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서 역사적 창의성을 찾는 것이 합당해 보임
- 기능주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치와 시스템을 가진 유럽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남북의 이질화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기능주의 접근에 따른 ‘햇볕정책’을 성공시킨다면 국제정치학에서 기능주의 이론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롭게 이론을 정립하는 의미를 갖게 됨³⁾
- 오히려 기능주의 맥락에서 한반도적 적용가능성으로서의 햇볕정책 평가를 하는 것이 김대중의 창의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⁴⁾
- 햇볕정책의 한반도적 함의를 통해 김대중의 평화사상이 갖는 이론적 의미를 조명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6. 김대중의 평화사상과 함께 그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삶의 궤적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 김대중은 냉전시기 3단계 통일론과 교차승인론 등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를 미리 설계한 평화의 ‘선각자’ 였고
- 김대중은 탈냉전 시기 햇볕정책의 실시와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화해협력 증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낸 평화의 ‘실천가’ 였고
- 김대중은 퇴임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특히 2009년 서거 이후 북의 특사조문단의 방문을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 였음⁵⁾

3)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서울: 법문사, 2000), 93쪽.

4) 김근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북한연구학회보』, 15권 1호, 2011.

5) 김근식, “김대중의 비폭력,비반미 노선이 남긴 것: 민족사의 거인을 보내며,” 2009.8.21, 프레시안.

박정희의 평화사상

조동준 (서울대)

I. 들어가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박정희)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정희는 경제 성장, 청렴, 산림녹화, 근대화와 같은 긍정적 표상과 연결된다 (e.g., 김광모 2015; 김정렴 1997; 김보현 2006; 오원철 200). 박정희의 정책을 민주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파악하려는 평가도 있다 (김인규 2014). 반면, 박정희는 인권 유린, 독재, 환경 파괴 등 부정적 표상과 연결된다 (최희훈 2003, 315-316; 김지형 2013, 184-192; 강정인·하상복 2012, 198-207; 홍성률 2004, 55-66; 홍성태 2006, 112-113). 현대사에서 박정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상충적인 기억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균열선이다 (강원택 2005, 209-210; 김재홍 2012). 2016-2017년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 놓인 균열선은 박정희의 업적과 유산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와 중첩된다 (박상훈 2017).

평화와 관련된 쟁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상충적이다. 박정희를 평화와 연결시키는 평가가 있는 반면(e.g., 김성진 1994, 123-163; 김현철 2004), “피냄새가 가시지 않는 괴물같은 독재자”로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평가가 있다 (강상중·현무암 2012, 9).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주국방의 현상에 관한 합의가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 간 간극이 매우 넓다. 더 나아가,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안보 쟁점에서 아직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박정희에 관한 상충적 평가와 해석이 그의 정신세계에서 목적과 수단 간 불일치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박정희의 저술과 연설문을 검토하면, 민주, 평화, 자유 등 핵심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추

구하는 핵심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수단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그가 추구한 가치와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그가 사용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박정희가 남긴 4권의 저작과 다양한 연설문을 활용하여, 박정희의 평화관을 시대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박정희의 초기 저작에서는 평화에 대한 체계적 생각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발견된다. 반면, 1970년대 박정희 후기 저작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강조한다. 한반도의 맥락에서 평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박정희 후기 저작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평화의 요건이다. 둘째, 박정희의 평화정책이 1970년대 초반 변곡점을 거치는 과정을 검토한다. 군사 쿠데타 후 북한 주민의 봉기를 선동하던 정책이 1964년을 거치면서 ‘두 개의 한국’ 정책과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바뀌었고, 1970년대 초반 자주국방에 기반한 평화유지로 변화하였다. 셋째, 박정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싼 해석 논쟁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추구했던 가치·목적과 실제 사용한 수단 간 불일치로 인하여 박정희 사후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치·목적과 수단 간 시간차를 고려하여 상충하는 해석간 거리를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II. 평화관의 진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박정희의 평화관은 현상적으로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다. 추구하는 목표 또는 가치 측면에서는 평화를 언급하면서도 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박정희가 추구했던 평화의 본질, 평화를 방해하는 원인, 평화를 달성하는 방안을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나누어 비교 검토한다.

1. 국내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 달성

군사 쿠데타 후 박정희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홍보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는 미래상을 홍수처럼 전달했다. 『지도자의 도』(1961),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1962)과 『국가와 혁명과 나 길』(1963)를 통하여

군사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암울한 한국의 상황, 그리고 추구할 목표와 방법을 밝혔다. 박정희 초기 저작은 한국 사회에서 정체의 원인, 특히 국내 경제적 문제에 집중한 반면, 평화에 관한 체계적 사고를 드러내지 않았다. 박정희의 저작에서 평화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어(박정희 1962, 239), 아직 한국 사회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평화가 군사 쿠데타 세력이 추구할 ‘사회재건’의 목표라고 했지만, 한반도에서 이룩해야 할 평화에 관한 체계적 생각이 없었다.

박정희의 초기 저작은 평화를 세계사적 모순과 연관시킨다. 인류는 유사 이래 최고 생산력에 근거하여 최대 부를 축적하였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류간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었지만, 핵무기의 공포 아래서 신음하며 전체주의체제가 자유진영을 위협하는 1960년대 상황이 “현대적 모순”으로 요약된다 (Ibid.). 1960년대 상황을 위기와 기회가 매우 크게 공존하며 평화가 깨어질 위험과 평화를 향한 희망이 동시에 큰 모순으로 비유한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박정희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극복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 인류생활은 보다 더 안락하게 할 수 있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만인을 위한 복지를 창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이 침략적인 전쟁을 증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면서 국제적인 법질서를 강화하여 여러 국민들이 상호간에 가졌던 상호불신을 불식한다면 세계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Ibid., 239-240).

상기 인용문은 평화에 관하여 정리되지 않는 상을 드러내고, 또한 평화에 이르는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침략적 전쟁을 증오하며,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켜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양차대전 사이 ‘이상주의자’로 불렸던 학자들의 해법을 연상시킬 정도다.

박정희의 초기 저작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다. 한반도는 중국, 소련, 일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성장하게 되면 한반도로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Ibid., 135-139). 한반도가 세력 팽창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삼국 내부의 변화가 한반도로 밀려 올 수밖에 없다. 둘째, 공산주의의 침략 본성이다. 공산주의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체제를 수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체제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Ibid., 180-185). 더욱이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러시아의 정책

이 소련으로 그대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소련의 확장 대상이다. 셋째, 한국 내부에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세력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한다. 한국 내부에서 존재하는 공산주의 동조 세력이 “가장 긴박하고 위험한 것”으로 묘사된다 (박정희 1961.11.16). 한국 내부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북한 공산집단의 침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다. 공산주의 동조세력이 한국 내부에 없다면

한반도의 맥락에서 평화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박정희의 해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산세력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에 기반한 균형 유지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다.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공산세력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못을 박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박정희 1962, 186). 공산진영의 무력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한국의 독립과 평화가 진영 간 균형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 우방, 그 중 미국과의 유대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와 참전이 “은혜”로 표현하며 한미관계는 더 발전되어야 한다(박정희 1961, 224). 대내적으로 보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자체 군사력이다. 한국의 군사력은 억지 수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박정희 1962, 186).

둘째,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이다.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유체제가 공산주의에 우위를 보인다는 점을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알면 더 이상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기는 가장 빠른 길은 “피와 땀과 눈물로만 자라는 경제의 재건”(Ibid., 229)이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강은 물론, 민주와 자유가 한국 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한국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초래해 북한이 한국과 비슷하게 된다면 전쟁을 할 여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박정희의 초기 저작에서 평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진영의 무력 행위가 세계 수준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행위가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남하 정책이 향하는 지점으로 위기의 정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상태에서 평화는 공산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 소극적 상태에서 공산 세력으로부터 전쟁 위협을 당하지 않는 넓은 의미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지만, 박정희는 단기적으로 우방의 도움과 자체 군사력에 기반한 세력균형으로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여 공산세력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였다.

2. 체제의 우위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

박정희는 1970년대 정치적 견해를 『민족의 저력』(1971)과 『민족 중흥의 길』(1978)에서 밝히면서, 평화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화된 의견을 제시한다. 박정희의 후기 저작에서 세계 평화는 이념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군비경쟁, 민족 및 인종 감정에 기인한 분쟁, 그리고 차원과 안보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과 연관되어 이해된다 (박정희2005[1978], 344-345). 진영 내부의 결속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각국의 특수한 이해가 갈등의 전면에서 나서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진영간 갈등이 강했을 때에는 진영 안에서 잠재적 갈등이 이념을 대표하는 강대국에 의하여 제어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이념보다는 특수 이익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평화가 깨어지는 위협이 1960년대보다 더 커진다.

한반도의 맥락에서 박정희는 1970년대에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고 평가한다. 남북간 체제대결에서 승리하여 한국이 북한보다 10-15년 앞서 있지만, 군사적으로 남북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Ibid., 342). 하지만 우방의 도움을 확신할 수 없고 북한이 무력남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증강과 도발을 방지할 수 없는 형국으로 본다. 즉,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기 평화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었지만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은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박정희 1971, 190-191). 북한이 세계적 차원에서 양진영간 긴장완화를 역용당하는 위협이 강조된다.

1970년대 박정희는 전쟁의 부재보다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제거된 “적극적인 평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한반도의 맥락에서 박정희는 “적극적 평화”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가 아니다. 6.25 전란 이후 남북 간에 전쟁은 없었지만, 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공산주의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로 인한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준전시와 다름없는 이러한 불안한 현상을 파타하고,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제거된 적극적인 평화를 이룩하자는데 평화정책의 참뜻이 있다(박정희 2005[1978], 339).

통일과 평화의 관계에 관한 박정희의 생각을 1960년대와 비교하면, 평화가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이해된다. 적극적 평화는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길잡이,” “첫 관문,” 첫 걸음 “이며 남북간 이질화를 막는 장치로 묘사된다 (Ibid., 339-340). 먼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수순이다. 구체적으로 북

한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만 남북한이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 평화적 통일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박정희 1971, 226-227).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만들까? 1970년대에도 박정희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체제승리로 인한 북한의 변화가 평화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유지한다.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면,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전면에 드러난다. 동유럽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된 자유화를 향한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북한도 자유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보다 장점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제안한다 (박정희 1971, 225). 확실한 체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에게 승산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군사적 우위가 유지되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박정희2005[1978], 342).

박정희는 체제경쟁이 북한의 내부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우리는 안일하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우리의 번영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여, 민주주의가 공산 독재보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의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함으로써, 김일성과 그 일당의 반성을 촉구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라 우리는 김일성 체제의 도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동족 사잔의 불륜한 방법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1971, 226-227).

단기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 약속이다. 체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첫 관문이 남북한 불가침 약속이다.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이질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체제경쟁을 하자고 제안한다. 박정희의 사고체계에서 체제경쟁 제안은 평화와 통일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만약 북한이 무력침략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압도적 국력이 대안이다. 이 경우, 박정희의 자주국방 개념이 적용된다. 냉전이 완화되어 진영 안에서 결속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국방력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다. 강대국의 냉혹한 국가 이익 계산에 따라 한국과 같은 중소국의 이해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 전통적 우방의 도움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동태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한다 (박정희2005[1978], 345). 이 상황에서는 국제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자주국방만이 소극적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 체제의 우위에 기인한 북한의 자유화가 평화의 필수적 조건이며 한국 내

부의 결속이 도발을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박정희 초기 저작에서 평화 개념과 비슷하지만, 1960년대와 비교하면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는 자신감이 더 강해졌고 자주국방을 통한 소극적 평화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Ⅲ. 정치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평화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은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반영하며 변경된 듯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정희의 평화관이 정치환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검토한다.

1. 1960년대 정치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박정희의 초기 저작에서 발견되는 평화관은 1950-6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정책을 반영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했던 즈음, 한국은 경제성장에 기반한 북한의 평화공세와 상층 통일전선전술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절에는 196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간 조응을 검토한다.

(1) 북한의 전후 복구와 대남공세

북한의 전후 복구는 한국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었다. (1) 북한이 먼저 경제적으로 강한 민주기지로 바뀌면, (2) 남한 주민이 북한을 동경하고 남한에서 혁명기세를 높일 수 있고, (3) 북한의 물질적 토대와 남한의 노동운동이 결합되면 통일에 이른다는 논리에 따라 대남 무력투쟁보다는 전후 복구에 집중하였다 (김일성 1957.8.25). 북한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10억 루블의 경제원조,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 그리고 북한 주민의 동원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전후 복구를 이루어냈다. 1955년에는 6.25 전쟁 이전의 경제생산능력을 회복하였다.¹⁾ 북한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1차 경제계

1) 강인덕 1974(상), 468. 반면, 김일성 정권은 국방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민주기지 건설을 위하여 “인민군대의 강화”를 네 번째로 천명했지만, 1954년 이후 북한의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까지 점차 감소했다 [강인덕 1974(중), 51]. 舊소련이 추진했던 평화공존정책으로 서방과 무력충돌을 겪을 위험성이 감소하였고 1958년 10월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국방 부분에 시급히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국제관계에서 긴장상태가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외적 안보를 걱정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성명” (1966.5.31), 총람 1, 307).

획은 외형상 성공을 거두었다. 공업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은 36.6%였고, 농업부분에서도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식량문제와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표 1. 남북한 국력차이

연도	한국				북한			
	철강	군비	군인수	에너지	철강	군비	군인수	에너지
1948					115	n.a.	20	1204
1949	8	12245	69	1147	144	n.a.	60	2830
1950	4	32000	109	631	38	n.a.	120	170
1951	1	39048	196	874	0	n.a.	100	230
1952	1	47860	335	998	0	na.	211	231
1953	1	82544	504	1417	4	n.a.	260	547
1954	1	58797	630	1534	56	n.a.	280	1735
1955	11	80684	730	1996	137	n.a.	300	2806
1956	12	79738	650	2298	189	n.a.	320	3387
1957	17	111330	650	2523	277	n.a.	340	4281
1958	20	109371	650	2701	365	221054	360	5908
1959	38	111332	650	3346	451	n.a.	380	7529
1960	50	98612	650	3852	641	200000	400	9079

* 철강의 단위는 천 톤; 군비의 단위는 백만 달러; 군인수의 단위는 천명; 화석연료 사용량의 단위는 천 석탄톤(thousands of coal-ton)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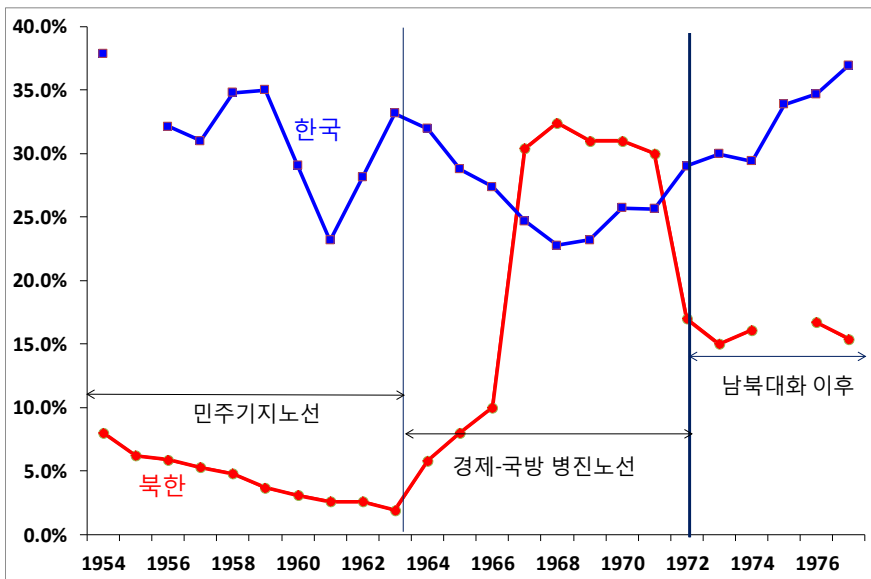
북한은 우세한 경제력에 기반하여 한국을 압박하였다. 북한은 1955년 11월 8일 남한의 기업과 가정용 전기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1956년 내각결정 43호에 따라 절량농민에게 구호품 10만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1957년 한국의 수해이재민에게 24만원의 구호물자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1957년 10월 9일 북한은 한국이 북한산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공동시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1959년 10월 27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대회에서 “황폐화된 남조선 농촌”을 위해 화학비료와 관개공사에 필요한 기재·설비를 공급할 의사를 밝혔고, 남북조선 경제 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제안하였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은 북한의 평화공세로 이어졌다. 1954년 10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회의에서 남북한의 경제 및 문화교류·통상·통행·서신거래 문제를 논의하자는 호소문이 있었고, 1955년 8월 14일 김일성은 8.15 해방 1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

서 남북교류를 제안하였다(김일성 1955.8.14). 1956년 4월 28일 조선노동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1) 미국과 한국의 군사물자 반입 중지, (2) 미국과 한국의 군비확장 중지, (3) 미국과 한국의 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행위 중지, (4) 남북한 간 무력불행사 선포 등을 언급하였다. 심지어, 1956년 북한은 북한군 8만명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였다.

북한은 4.19 혁명 후 유동적인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상층 통일전선구축을 시도하였다. 즉, 북한은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한국을 북한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소극적 민주기지노선에서 벗어나, 제도권으로 진출한 혁신세력, 통일담론을 생산하던 사회세력, 심지어 민주당과 연합하여 북한식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1960년 4월 21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는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면 “과거를 묻지 않고” 협의할 용의를 밝혔다. 1960년 4월 27일 북한은 제 정당·사회단체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남북한 간 장벽을 제거하고, 남북한 간 자유로운 내왕과 서신거래를 허용하고, 한국의 경제를 복구하고, 한국의 민생을 안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촉구하였다. 김일성은 1960년 8.14일 8.15 경축사에서 한국이 적화를 두려워하여 총선거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과도적 대책으로 연방제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였다. 김일성의 8.15 연방제 제의 이후 북한은 남북협상을 연속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1.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재정40년사 편찬위원회 1991, 132-133; 강인덕 1974(중), 51.

북한은 장면 행정부를 남북협상의 상대자로 간주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를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북한은 장면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닐 수 있으며,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한국 내 사회세력의 압박으로 장면 정부가 남북협상으로 이끌려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남북협상이 진행되면, 한국 내 사회단체와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장면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을 탄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였다. 1960년 11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대한민국 민의원, 참의원,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 시민들에게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만약 연방제를 수용할 수 없다면 남북한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를 만들어 한국 경제를 희생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통일을 연결고리로 상층 통일전선구축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상층 통일전선구축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였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만 제거되면, 한국 내 혼란으로 인해 한국 내 혁명역량이 제압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의 무력을 경험했던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민주기지 건설과 한국 내 혁명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북한식 통일의 필수요건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식 통일 경로를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이 더욱 더 강화되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 나설 때에 우리는 미제침략자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 1960.8.14).

(2) 박정희의 평화 3축: 국내 통합, 경제건설, 북한 변화

박정희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주장 아래 한국내 정치지형을 개조하였다. 먼저, 한국내 혁신계열을 용공세력으로 규정한 후 와해시켰다.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는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마련하여 5월 19일까지 18개 혁신정당과 사회단체에 소속된 938명을 “용공 및 혁신을 빙자한 친용공분자”라는 이유로 체포하였다 (육군방첩대 2009[1961], 1-4). 둘째, 기존 정치세력도 무력화시켰다. 1961년 5월 23일 군사혁명위원회는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체한다는 포고령 6호를 발표하였고, 부패 또는 용공 혐의로 일부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했다. 셋째, 군사정부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

합하여 민주공화당을 만들었다. 민주공화당의 등장으로 한국 국내정치의 이념지형은 우경화되었다. 결국 5.16 군사쿠데타 이후 북한이 상층 통일전선을 구축할 상대편 정치세력이 사라졌다.

북한에 대하여 박정희는 공세적 입자를 취했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북한과 대화조차 거부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반공을 제1 국시로 천명했고, 한국 내 공산세력의 척결을 공약했다. 쿠데타 성공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남북협상론과 중립화통일론을 불법화시켰다. 더 나아가 박정희 의장은 1961년 10월 3일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뗏세지’를 발표하면서 북한 동포와 인민군장병이 반김일성·반소·반중공(反金日成·反蘇·反中共)해방투쟁을 전개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박정희 1961.10.3). 1962년 상반기까지 박정희 의장은 북한 주민이 “민족정신에 입각하여 쫓기”하라고 촉구하였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려 하였다.²⁾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신승을 거둠으로써 군사정부가 내세운 선(先)건설·후(後)통일 전략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반공을 제1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군사정부는 아래와 같은 가정에 따라 군사적 반공정책이 아닌 경제적 반공 정책을 전개하였다.

1. 소련 등 공산제국의 세계정복이라는 기본목표에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며, 그 강대한 군비를 계속 유지하고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에 힘쓰는 한편 주로 간접침략의 방법을 통해 자유진영제국의 정복을 꾀할 것이다.
2. 북한괴뢰도 이와 같은 공산전략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의 확보에 힘쓰는 한편 간접적인 수단을 통한 남한의 적화에 광분할 것이다.
3. 미국은 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방위력의 강화를 돕기 위하여 형식과 방법에는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적어도 현재 수준 이상의 경제 및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4. 그 밖의 자유진영 제국도 계속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과의 경제협조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1962, 15).

2) 1962년 군사정부가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하였지만, 1963년 말까지 한국의 국가전략은 안개 속에 있었다.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수입대체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업과 공업 사이에서 성장 동력을 확장하지 못했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외자유치와 국내자본 동원 사이에서 불명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1962, 16-17). 1962년 6월 10일 화폐개혁이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졌고 부정부패를 통하여 축적된 자본과 화고의 자본이 금융시장 밖에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들은 시장 밖에 있는 자본을 화폐개혁으로 강제적으로 시장 안으로 들여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화폐개혁 후 국내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학습을 하면서 수출주도와 외자유치로 선회하였다.

박정희는 북한을 포함한 공산세력이 직접 무력을 사용할 개연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경제성장을 통하여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전후 복구에서 북한보다 뒤쳐진 한국이 북한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경제적 성장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은 민족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을 시도하고, “국방비는 불가피한 자연증액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박정희 1966.1.18). 박정희 행정부는 1964년 수출주도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가용한 재원을 모두 경제성장에 투입하였다.

박정희 행정부는 경제개발을 미래 시점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현재 시점에서 통일 논의를 막았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통일을 최종목표, ‘조국근대화’를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이자 “중간목표,” 경제자립을 “근대화의 길”로 묘사하였다 (박정희 1967.1.17).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자립, 조국근대화, 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국가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점에서 불필요한 통일 논의를 지양하고 자립을 위한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관은 1967년 신년 연두교서기자회견에서 잘 드러난다.

공업입국의 조국근대화가 이루어질 70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이 보다 밝아올 것이다. 이때에 이르르면 우리를 둘러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인 기반과 기회가 마련되어 국제정세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본다. ... 확실하고 꾸준한 통일의 노력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업을 충실하는 데서 소기의 성과를 쟁취할 수 있다. 결국 이 단계에서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이며 민주역량의 배양이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의 길이다 (박정희 1967.1.17).³⁾

정리하면, 1960년대 초기 박정희의 저작과 실제 정책에서 평화가 경제성장, 국내 통합,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변화와 연결된다. 세 요인과 평화간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1960년대 정치 환경에서 세 요인은 평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제적 열세, 북한의 평화공세와 상층 통일전선전술에 대항하여,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통하여 공산세력의 확산을 방지하고 북한 내 무력변화를 충동하여 북한이 자유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공산주의가 평화를 위협한다는 전제 아래서 박정희가 제시한 세 가지 생각과 정책은 평화와 연결될 수 있었다.

3)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론은 1950년대 북한의 ‘민주기지’ 노선과 유사점을 가진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이 상대편 안에 있는 반대 세력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통일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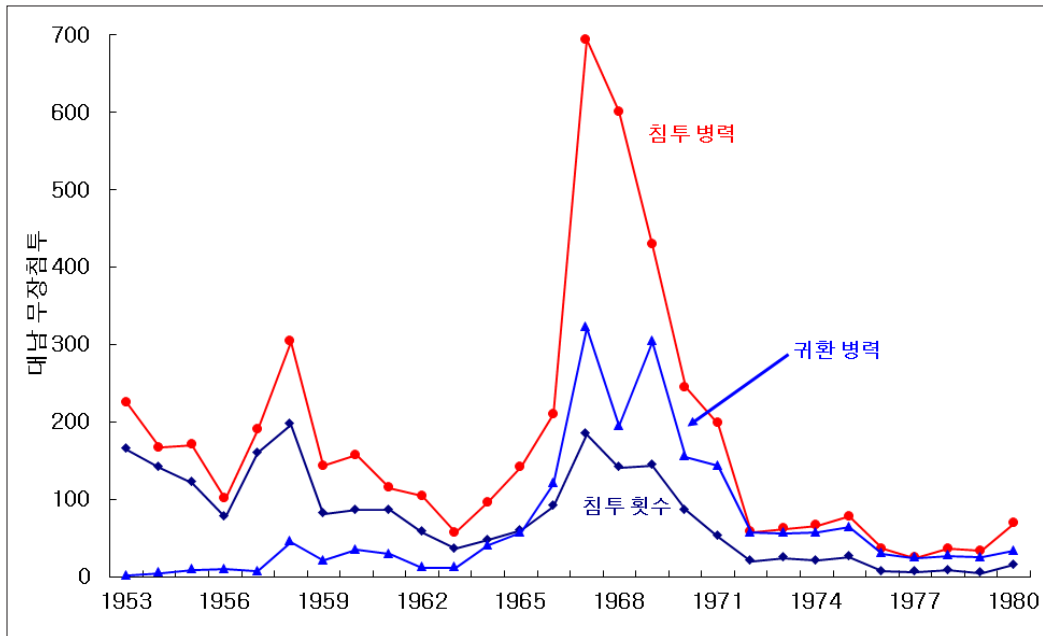
2. 1970년대 정치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박정희의 후기 저작에서 발견되는 평화관은 197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과 국제환경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도발과 1970년대 초반 북한의 평화공세, 미군철수로 인하여 압박을 받은 반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절에는 1970년대 박정희의 평화관과 1970년대 정치환경 간 조응을 검토한다.

(1) 북한의 공세

북한은 1962-1964년 ‘민주기지’ 노선에 기반한 점진적 국가건설 노선에서 군사적, 혁명적 수단을 사용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정책 변화는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국방·경제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통하여 드러났고, 1964년 2월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3대혁명역량강화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림 2: 북한의 대남 도발



자료: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1998, 359-360.

북한의 국가전략 변경은 크게 세 분야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북한은 북한내 혁명역량에서 군사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북한군 군사비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최저 1.9%를 기록한 후, 1964년부터 급증하였다. 1964년에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 1967년에도 전년 대비 2.3배 증가를 기록할 정도로 북한의 군비가 급증하였다 강인덕 1974(중), 51). 1968년 북한 군비가 북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71년까지 30%를 항상 초과하였다 (그림 1 참조). 둘째, 북한은 한국 내 혁명 세력의 강화를 위하여 직접 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부터 북한은 한국 내 혁명 세력을 직접 지원하고, 북한내 혁명세력을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였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조선노동당 4기 8차회의에서 북한이 한국 내 혁명을 대신 수행할 수 없지만, “북한이 한국 내 혁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출신 공산주의자들을 대량 훈련시켜 남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4년 2월 조선노동당 4기 8차회의 이후 북한은 북한으로부터 혁명세력을 한국으로 남파하고, 한국 내 존재하던 지하조직을 당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셋째, 1960년대 중반 북한은 해외 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조하며 제3세계에 있는 반국가 단체, 공산국,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게 지원하고, 체제전복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해외공작은 1966년 우루과이에서 북한 통상대표 요원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⁴⁾ 1966년부터 북한은 해외 공산계열라를 북한에서 훈련하고, 반제국주의 성향의 국가에 군사요원을 파견하였으며, 반식민지 해방투쟁을 벌이는 단체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였다. 1968년에는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에 해외공작반을 설치하여 반식민·반제국주의 성향의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였다 (국토통일원 1984, 62-78).

표 2.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해외혁명단체·국가

		1966-68	1969-71	1972-74	1975-77	1978-80
전북활동	선동	0	3	4	3	0
	직접 참가	1	1	2	3	1
게릴라 훈련	방북 훈련	13	16	4	9	7
	해외 파견	3	3	6	11	6
자금·무기지원	자금 지원	1	4	4	1	2
	무기 지원	0	5	5	9	4
계		18	32	25	36	20

국토통일원 1984, 80.

4) 1960년대 우루과이의 정정이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쿠데타 시도가 종종 있었다. 또한, 반체제 도시 게릴라(Movimiento de Liberación Nacional-Tupamaros)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었다.

(2) 미국으로부터 방기 위협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개연성도 박정희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위협은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데탕트 국면에서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각자의 동맹국을 자제시켜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말자고 합의하였고, 한국으로부터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일본군이 미군을 대체하지 않는 데 합의하였다. 1971년 7월 키신저-주은래 1차회담에서 미국은 닉슨행정부 2기 중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철수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수준, 한국문제 관련 국제연합의 파생 기구의 처리, 한반도 통일 방안 등 세부 항목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약화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미중화해에 앞서 미국은 이미 일방적으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약화시켰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꺾에서 밝힌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한국에서 험난한 미래를 예고했다.⁵⁾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1월 24일 주한미군 50% 감축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1971년 6월까지 주한미군 2만명을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 주한미군 감축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1년 회계연도부터 1975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억달러 상당의 군사원조, 5천달러 상당의 추가 경제원조가 유인책으로 마련되었다. 파월장병의 귀환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이후 주한미군이 추가로 감축될 수 있다는 미래의 위협 요인도 자리를 잡았다.⁶⁾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한미양국의 협상은 미 7사단의 철수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지원을 주고받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한미양국은 1971년 2월 6일 미 7사단을 철수를 포함한 주한미군 1만 8000여명 감축(철수 시한은 1971년 6월), 미 2사단의 후방배치, 15억 달러에 상응하는 군사원조와 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김정렴 1995, 316-319). 한미합의에 따라 미 7사단은 1971년 3월 27일 철수를 시작하였고, 1965년부터 판문점을 포함한 문산 일대의 방어를 담당하는 2사단은 의정부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미 2사단이 담당했던 방어선은 28.8Km 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 2사단의 후방 배치는 더 이상 주한미군이 미국의 자동개입으로 이어지는 인계철선이 아니라는 상징성을 가졌다. 후방 지역으로 이동한 미 2사단도 한국에 계속 남아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한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철수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5)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게 약속한 [동맹]조약을 준수하겠지만, 내부 안보 문제와 군사적 방어 문제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직접 개입은 강대국의 핵위협에 제한될 것이며,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겠다고 하였다. 즉,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 국가에 병력을 주둔하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Nixon 1969.7.25).

6)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1970.3.20), Lawler, Mahan, and Keefer, eds., 201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14, Part 1, Korea 1969-1972* [이하 "Lawler, Mahan, and Keefer (2010)].

(3) 박정희의 위협 인식과 대응

데탕트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인식은 1969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⁷⁾ 1969년 8월 17일 U.S. News & World Report는 북한이 남침준비를 끝내고 남침 기회를 노린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까지 무력통일을 원한다는 김일성의 발언, 아시아에 주둔하던 영국군 철수, 미일안보조약의 갱신을 둘러싼 불투명성, 오키나와 반환과 주일미군 기지 폐쇄 등이 북한의 남침 위협설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동아일보 1969.8.18.). 북한의 도발을 “70년대 초반에 무력남침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동”이며, (남침) “여건 조성을 위한 준비공작”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1969.10.1). 더 나아가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위협을 북한의 남침 준비 완료, 남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 오산에 의한 전면 남침의 가능성으로 인식하였다.(박정희 1970.1.9).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한·미 간 물밑대치가 진행되던 1971년 초반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오판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닉슨 대통령의 불개입 정책으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는데, 북한이 이러한 정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남침의사가 상수라면, 북한의 도발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던 국제연합군과 미군의 철수는 북한에 유리한 변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닉슨 대통령의 불개입 정책으로 “힘의 공백”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한국에 “허점”이 생겼다고 오판할 가능성을 더하면, 북한이 전쟁을 감행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았다 (박정희 1971.1.11). 박정희 대통령의 인식 세계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이 이제 개연성이 높은 예상 경로가 되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박정희의 위협인식에서 최고점이다. 국제연합에서 중국과 대만의 자리바꿈, 월남과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 북한의 남침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발 위협이 임박한 듯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1971.12.6). 1972년 초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전쟁 도발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위협의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래 1972년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 인식을 잘 드러낸다.

7) 1968년 청와대 근처까지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하고 울진과 삼척에 대규모 무장공작소소가 침투했지만, 소련과 중국의 갈등에 소련이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북한이 등거리외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일성이 배 속을 들어가 보기 전에는 김일성이 꼭 쳐내려올는지 안 내려올는지 아무도 모르니다. 그러나 쳐내려 올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안 올지도 모른다? 안 오면 다행입니다.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도 이제 와서는 새로운 결심을 할 단계와 왔다고 봅니다. 북한 괴뢰가 끝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무력 적화통일 야욕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현 체제 하에서 가능한 우리의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는데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1972.1.11).

남북한 비밀접촉이 본격적 남북대화로 진전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기감은 완화된 듯 보인다. 1972년 5월 중순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인식이 변화한다는 조짐이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와 6.25 전쟁에 맞추어 발표하던 담화문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을 과장하곤 하였는데, 1972년 5월 16일 북한발 위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갓가지 도전”으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착실한 접근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박정희 1972.5.16). 1972년 6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만일”로 표현하였다. 또한, 도발의 양상도 전면전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무도한 무력도발”로 표현하였다 (박정희 1972.6.25). 남북한 밀사가 오가고 남북공동성명의 문구를 협의하는 정도까지 남북대화가 진행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급한 불을 잠시 껐다는 안도감을 표현했다.

1973년 8월 28일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선언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위기감은 소폭 악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과 한국에 대한 비방과 선전 공세를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표현하였다 (박정희 1973.10.1). 6.25 전쟁에 대한 묘사도 “북한 공산 집단의 무력 남침”에서 “불의의 기습 공격” 또는 “기습적인 무력 남침”으로 바뀌었다 (박정희 1974.4.3). 1950년 평화공세 이후 북한이 남침을 했던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기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초 당시 상황을 “전쟁을 하다가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일시 전쟁이 중단 상태에 있는 그러한 휴전상태,” 즉 “시련과 도전의 연속”인 “준전시체제”라고 규정하였다 (박정희 1974.1.1). 북한의 위협은 전면 남침의 행태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군사적 도발과 간접 침략,” 특히 통일전선 구축으로 진행된다고 파악하였다 (박정희 1974.8.23).

197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인식체계에서 국방에 대한 자신감은 위기의식을 일부 상쇄하였다.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강화된 국군, 추가로 철군하지 않고 있는 미

군, 270만 향토예비군으로 충분히 북한의 도발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박정희 1975.4.29), 북한도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고를 하였다.

만일, 정세를 오판하여 무모하게도 또 다시 남침을 해 온다면, 그들 스스로 묘혈을 파고 자멸의 길을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레의 발전과 변영의 터전을 파괴한 반민족적 범죄에 대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정희 1975.6.25).

1975년 8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한국군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30일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국군현대화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국은 1977년까지 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1975년 8월 한국 스스로 방위세를 신설하여 40억 달러가 소요되는 5개년 국군개선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계획에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군 방위 능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남북한 관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솔직히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허황된 망상은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망상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이제 깨끗이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무모한 모험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갔다. 때는 이니 늦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1976.1.15).

박정희의 위기감은 크게 두 정책으로 발현되었다. 첫째, 자주국방의 추진이다. 1970년대 박정희 행정부는 국방을 경제건설과 최소한 동급으로 표현되거나 경제건설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목표로 묘사하였다.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며 싸우자”라는 구호로 표현된 국방과 경제성장을 병진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하여 전개되었던 유화국면에서도 자주국방은 여전히 경제건설과 동급의 정책목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 국면에서 국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다시 한 번 재강조할 것은 우리가 남북대화를 열어놓고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는 것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대결이라는 것과 이때야말로 우리가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대공태세

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경제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력배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1973.1.24).

박정희 행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통상전력의 강화로 이어졌다. 1970년 8월6일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기 국산화를 담당하였고, ‘전력증강 8개년 계획’(암호명 울곡계획)으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모색하였고,⁸⁾ 주한미군이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제3야전군을 창설하는 등 신규 부대를 창설하였고,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였다. 1970년대 자주국방노력으로 북한과의 누적 전략차이가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게 되어 한국이 더 많은 자원을 국방에 투자함에 따라 남북한 통상전력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다.

박정희 행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였다. 정황 증거로 보면, 박정희 행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시점은 1971년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맡은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에게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중앙일보특별취재팀 1998, 261-262), 오원철 경제수석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무기개발위원회에게 무기국산화 사업(‘번개사업’)을 맡기면서 동시에 핵무기 개발을 탐색하는 임무도 맡겼다. 오원철 수석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1972년 9월 8일 ‘보고번호 제48호’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오동룡 2003, 190-192). 이후 박정희 행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해외 핵과학자의 귀국을 기획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행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미국의 정보망에 포착되었고, 1974-75년 미국의 경제지원 철회 압박과 핵우산 제공 약속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Sung Gul Hong 2011, 506-510).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으로 1976년 핵무기 개발안이 다시 부상했지만,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 따른 제약으로 한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은 답보 상태였다.

둘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1960년대 말 박정희 행정부에서는 경제기획원은 국가 주도 수출지향 경제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핵심 사항으로 기획하였다.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재, 자본재, 생산재의 국산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철강과 기계 산업을 육성하여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와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하였다.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조선 산업을 육성하여 중

8)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4월 19일 함동참모본부에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함참은 1973년 7월 27일 ‘함동기 본군사전략’을 마련한 후, 육·해·공군의 제안을 수렴하여 ‘군장비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3월 15일 함참의 전력증강안을 재가하였고, 1차 울곡사업은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되었다. 1차 울곡사업에는 3조 1,402억원이 소요되었는데(전체 국방비의 31.2%), 노후장비 교체, 전방지역 철책선과 진지구축, 고속정 건조, 항공기(F-4) 구매에 사용되었다 (국방부 2008, 160-163).

화학공업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1972, 106-107;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1979, 153-154). 이 과정에서 국가주도 수출지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이 중화학 공업을 주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병기생산과 관련된 중화학공업 육성안을 마련하였다. 1969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중공업 건설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해리 최(Harry Choi)가 실시한 중공업건설 타당성 조사 결과, 기계소재, 중기계, 조선, 자동차, 농업기계, 전기기계가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기계공업 육성방안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70년 7월 군수공업 발전을 위하여 4대핵심공장 건설계획이 만들어졌다 (박영구 2007).⁹⁾ 박정희 행정부의 4대핵심공장 건설계획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내부적 한계의 자금조달 문제로 인하여 1971년 11월까지 진척되지 않았다. 병기 생산을 위한 중공업건설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박정희 행정부는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두 안을 융합시켰다. 1971년 11월 9일 박정희 대통령, 김정렴 비서실장,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는 심야 회동을 통해 중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화학공업을 통하여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비경제성을 극복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수용으로 전환가능한 민수용 중화학공업, 민수용으로 전환가능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안이었다. 즉, 철강산업은 경제 성장의 기본 요소인 동시에 방위산업의 기본 소재로, 기계공업은 생산재 제작을 위한 기초인 동시에 정밀무기제작으로, 전자공업은 전자무기 생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결합하였다 (김정렴 1995, 321-322;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1979, 322; 조인원 1996, 176-177).

1973년 6월 박정희 행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을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정하고, 남동연해 지역에 대규모 중화학공업지대를 건설하는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화학공업은 처음부터 수입대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6개 산업간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1973, 3-31). 경제기획원이 구상했던 민간주도형 점진적 중공업육성책이 관민협조형 급진적 중화학공업으로 변경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을 청와대 경제제2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여 중화학공업육성을 직접 관리하였다 (오원철 1994; 김광모 1988, 212).

정리하면, 박정희 후기 저작에서 발견되는 평화관은 데탕트 국면에서 미국으로부터 방

9) ‘4대핵심’은 주물철(강원산업에 지정), 특수강(대한중기에 지정), 중기계(한국기계에 지정), 조선(현대건설에 지정)이었다.

기 위협,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도발, 1970년대 초반 북한의 평화공세,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1960년대말 북한의 도발과 1970년대 초반 급작스런 북한의 평화공세가 박정희의 의식세계에서 남침의 징후로 이해되었다. 이에 맞서기 위하여 전통적 우방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자주국방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불가침을 제안하게 되었다.¹⁰⁾

IV. 나가며

박정희의 평화관에서 통시적 일관성과 가변성이 공존한다. 통시적 가변성은 한국의 최고 정치인으로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평화관은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관계의 변화, 한국과 북한 내부의 변화를 반영한다. 반면, 그의 평화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부분이 확인된다. 공산세력의 무력침략 개연성, 자유민주체제의 규범적 우월성, 힘에 기반한 억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통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입증, 단기적으로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국내 통합,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화 등이 통시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통시적으로 일관된 요인 가운데, 힘에 기반한 억제와 국내 통합을 제외한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치이다.

박정희의 평화관이 긍정적 가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구비하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과 중첩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가 추구한 목적·가치와 그가 사용한 수단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을 가치로서 대부분 국민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조치와 같이 인권 보호에 미흡한 상태에서 강제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영웅적 투쟁”을 북한주민과 인민군장병에게 직접 언급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박정희 1961.10.3.).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경로로써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에 공감하지만,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의 과도한 편중과 강압적 퇴출에는 동의하

10) 1960년대 초반 북한과의 남북불가침 조약은 정치적 금기였다. 북한과의 접촉과 남북불가침 조약을 언급했던 황영주(당시 문화방송 사장, 박정희의 오랜 지인)가 옥고를 치러야 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반면, 1970년대 북한의 전면 남침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오식한 박정희는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남북불가침 약속을 북한에게 제의하였다.

기 어렵다. 이처럼 그가 추구한 목표·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사후 상층적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둘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순이 과연 경험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박정희의 평화로 가는 길은 한국의 경제개발과 정치발전이 선행되는 첫 단계,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자유화가 추동하는 두 번째 단계, 남북한간 전쟁을 할 원인이 사라져 전쟁 위협이 제거된 세 번째 단계, 통일이 이루어져 함께 번영을 함께 누리른 네 번째 단계로 구성된다. 남북간 체제경쟁에서 승패가 오래 전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생존하며 북한발 위협이 더 강해졌다. 박정희의 정책제안이 궁극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평화를 향한 그의 생각이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박정희식 평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해 보인다.

평화와 관련하여 박정희를 둘러싼 상층적 평가와 해석은 결국 박정희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음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결과, 목표, 지향한 가치 등을 보면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인다. 반면, 그가 사용한 수단을 보면,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조국 근대화를 못시키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박정희의 언명은 현재 박정희를 둘러싼 상층적 해석을 예고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박정희 저작

박정희. 1962.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동아출판사.

_____. 2005[1962]a.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 『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동서출판사, 11-46.

_____. 1971. 『민족의 저력』. 광명출판사.

_____.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_____. 2005[1962]b.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동서출판사, 47-82.

_____. 2005[1978]. “민족 중흥의 길.” 『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동서출판사, 225-364.

연설과 발표문

박정희. 미전국기자구락부 연설 (1961.11.16.)

_____.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1961.10.3).

_____. “1966년 연두교서”(1966.1.18).

_____. “1967년 연두교서”(1967.1.17).

_____. “제21회 국군의 날 유시” (1969.10.1).

_____. “신년 기자회견”(1970.1.9).

_____. “신년 기자회견”(1971.1.11).

_____.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6).

_____. “신년 기자회견”(1972.1.11).

_____. “5.16 혁명 제11주년 및 제7회 5.16 민족상 시상식 치사” (1972.5.16).

_____. “6.25 동란 22주년에 즈음한 담화문” (1972.6.25).

_____. “1973년도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중앙 회의 유시” (1973.1.24).

_____. “제25주년 국군의 날 유시”(1973.10.1).

_____. “긴급조치 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 담화” (1974.4.3).

_____.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중앙 회의 유시” (1974.1.1).

_____. “국가 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문” (1975.4.29).

_____. “6.25 동란 제25주년에 즈음한 특별 담화” (1975.6.25).

_____. “1976년 연두 기자회견” (1976.1.15.).

김일성. “송도정치경제대학 제1회 졸업식 연설”(1957.8.25).

_____. “8.15 해방 10주년 기념대회 연설”(1955.8.14).

_____. “8.15 해방 15주년 기념대회 연설”(1960.8.14).

Richard Nixon, "Informal Remarks, Guam With Newsmen" (1969.7.25.).

북한 정부.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성명" (1956.5.31).

2차 문헌

315-316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6.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5.0). <http://www.correlatesofwar.org>.

Hong, Sung Gul. 2011. "The Search for Deterrence: Park's Nuclear Option.",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awler, Daniel J., Erin R. Mahan and Edward C. Keefer. eds. 201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 - 1976 Vol.14 Part 1, Korea, 1969-1972*.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

강상중-현무암. 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책과 함께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193-217.

강인덕 편. 1974. *북한전서 상, 중, 하*. 극동문제연구소.

강정인-하상복.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5(1):181-2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대비정규전사 3 (1961-1980)*. 서울: 신오성기회인쇄사.

국방부. 2008. *국군 50년사*. 국방부.

국토통일원. 1984. *38선에서 아웅산묘소까지: 북한의 폭력혁명수출과 대남도발사례*. 서울: 국토통일원.

김광모. 1988.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문화사.

김광모. 2015. *중화학공업에 박정희의 혼이 살아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 엮은 역사의 기록*. 기파랑.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갈무리.

김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연구.

김인규. 2014. *박정희 압축 민주화로 이끌다*. 기파랑.

김재홍. 2012. *박정희 유전자: 우리는 왜 죽은 박정희와 싸워야 하는가? 개마고원*.

김정렬. 1995.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김정렬. 1997. *아 박정희*. 중앙 M&B

김지형. 2013. 1960~1970년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용과 지속. *민주주의와 인권* 13(2):169-199.

대한민국 정부. 196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197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부.

박상훈. "최장집, '박정희 패러다임 붕괴 이후가 중요하다.'" *시사IN* 496(2017.3.24).

박영규. 2007. "4대핵심공장 건설계획(1970)." 국가기록원.

- 송창달. 2012. 박정희 왜 위대한 대통령인가. 서울: 그린비전코리아.
- 오원철. “오원철 회고록: 제1편 방위산업의 건설.” 조선일보 1994년 6월.
- 오원철. 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 육군방첩대. 2009[1961]. “위험인물예비검속계획.” 진실화대위원회. 5.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위원회.
- 이건혜. 2013. 박정희는 왜 그들을 죽였을까 : 인혁당사건과 암흑의 시대. 책보세.
- 이상우. 2012. 박정희 시대: 5.16은 구데타다. 중원문화.
- 조인원. 1996. 국가와 선택. 경희대학교 출판부.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실록 박정희. 서울: 중앙 M&B.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1973. 중화학공업육성계획.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1979. 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3: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 최희훈. 2003. 한국의 특수적 상황과 인권문제. 서강교육 1:314-320.
- 한국재정 40년사 편찬위원회. 1991a. 한국재정 40년사 (제4권) : 재정통계 (1). 한국개발연구원.
- 홍성률. 2004. 박정희 독재 정권기의 인권침해. 내일을 여는 역사 18:54-67.
- 홍성태. 2006. 고도성장의 한계와 생태적 전환. 경제와 사회 69:105-127.
- 홍성태. 2006.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262-283.

〈토론〉

조동준. 박정희의 평화관. 2017.10.12. 토론문

전재호 (서강대)

박정희의 평화사상 -> 불가능/ 박정희의 평화관 -> 가능

- 필자의 주장: 박정희에 대한 상충된 평가의 원인: 정신세계에서 목적과 수단 간 불일치에서 유래 -> 민주, 평화, 자유 등의 핵심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이것들과 불일치하는 수단을 선택 -> 이 가치들을 훼손하는 수단 사용함으로써 가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닐까? 과연 그는 진짜 민주, 평화, 자유 등의 가치에 동의했는가? 민주나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 장기집권으로 인해 그의 발언, 연설문, 저작 등이 아주 많음. 저작보다 현실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연설문을 통해 사과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적절 -> 연설문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시기구분: 1960년대와 1970년대 -> 1968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발견됨 - 담론과 정책, 국제환경, 국내정세 등

1) 첫째, 평화관

- 개념: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와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
- 서론에서 “초기저작에서는 평화에 대한 체계적 생각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발견된다.” 반면 1970년대 “후기저작에서 전쟁의 위협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강조”
- II. “평화관의 진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 1절 제목: “국내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 달성” - 1960년대
- “초기 저작은 … 평화에 관한 체계적 사고를 드러내지 않았다”
- 한국의 평화 위협 요인: 지정학적 위치, 공산주의의 침략 본성, 한국 내부의 친공세력
- 평화 달성에 대한 박정희의 2가지 해법: 첫째, 군사력에 기반한 균형 유지, 자유우방, 특히 미국과의 유대 강화/ 둘째, 공산주의 침투 원천 차단 방벽으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 2절 제목. “체제의 우위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 - 1970년대
- (4쪽) “1970년대 박정희는 … ‘적극적 평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 적극적 평화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만 남북한이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 평화적 통일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 ->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이 사라진 상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평화 위협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적극적 평화 만드는 방법: 체제 승리로 인한 북한의 변화가 평화의 조건 -> 체제우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압도적 군사적 우위가 유지되면 전쟁 통하지 않고도 승리 가능
- 북한이 무력침략 의사 포기하지 않는다면, 압도적 국력이 대안 - 자주국방 개념에 적용 - “자주국방만이 소극적 평화를 지킬 수 있다.”
- (5쪽 2절 마지막 단락) “정리하면 체제 우위에 기인한 북한 자유화가 평화의 필수 조건, 내부 결속이 도발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초기 평화 개념과 비슷, 그러나 1960년대와 비교하면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자신감이 더 강해졌고 자주국방을 통한 소극적 평화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 1960년대와 비교하여 1970년대의 평화관의 변화 정리 -> 적극적 평화를 언급한 2절의 제목과는 사뭇 다른 결론. 적극적 평화 개념이 1970년대 박정희의 평화관을 대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Ⅱ장 제목(“평화관의 진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과 부합하는가?

Ⅲ장. 정치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 평화정책이 아닌가?

- 박정희의 평화관은 변화하는 정치환경 반영
- ‘들어가는 말’에서 둘째, 평화정책을 다룬다고 기술
- 1960년대 쿠데타 직후 북한 주민의 봉기를 선동 -> 1964년 ‘두 개의 한국’ 정책과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바뀜 -> 군정시기부터 경제개발에 우선 - 장면 정권의 ‘경제 제일주의’, 자주경제재건 구호, 1962년 제1차경제개발계획 진행, 농어촌고리채정리사

업 등 실시

- 1970년대 초반 자주국방에 기반한 평화유지로 바뀜 -> 자주국방 구호는 1968년부터

1. 1960년대 정치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1) 북한의 전후 복구와 대남공세

(2) 박정희의 평화 3축: 국내 통합, 경제건설,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변화

- 국내통합: 좌익과 반대세력 제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공세적 입장 전개: 반공 국시, 대화 거부, 북한 주민의 쫓겨 촉구
- 경제적 반공정책 실시: 경제성장을 통한 공산주의 확산 방지
-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변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재: '들어가는 말'에서 1960년대 쿠데타 직후 북한 주민의 봉기를 선동 -> 구체적 정책이나 실천이 존재했는가?
- 실제 정책에서 평화와 국내 통합, 경제건설,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변화가 연결 -> 북한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박정희 정권의 평화를 위한 것

2. 1970년대 정치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

(1) 북한의 공세

- 남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음. 1967년 6월 운수봉 지구와 7월 정읍 내장산 지역 무장계렬라 파견, 주7)의 내용, 곧 1968년 1.21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11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69년 2월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 5월 60여 명의 간첩단 사건, 또한 간첩 침투 현황(1966년 50건, 1967년 543건, 1968년 1,247건) 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 -> 북한의 대외 군사적 진출은 베트남 전쟁과 함께 불거진 냉전 심화라는 당시 국제정세와 밀접히 관련됨, 또한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도 관련

(2) 미국으로부터의 방기 위협

(3) 박정희의 위협 인식과 대응

자주국방 추진: 1970년대 국방과 경제성장 병진 정책 결정 -> 1968년 신년기자회견, “앞으로 정부가 특별히 힘을 들여서 밀고 나가야 할 두 가지 문제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건설” 제시 -> ‘자주국방’, ‘일면 국방, 일면 건설’ ‘국방 그 자체가 경제 건설’ -> 실력배양을 통한 대북우위에 군사적 우위를 통한 대북 우위라는 내용이 첨가됨

정리에서 박정희 후기 저작의 평화관: 미국 방기 위협, 1960년대 후반 북한 도발, 1970년대 초 북한의 평화공세, 경제성장을 반영한다고 추정 -> 너무 평면적, 박정권 정책 모두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

* 구성과 관련하여 II 장 “평화관의 진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다음에 III 장.

“정치 환경과 박정희의 평화관”이 등장 -> 평화관 진화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적 환경을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 기존 연구 부재: 새로운 노력 중요

- 평화와 관련된 상충된 평가와 해석은 박정희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데서 기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익환의 평화사상

: 그의 '발바닥 언어'가 지상에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

김형수 (『문익환 평전』 저자)

20세기에 대한 기억

한나 아렌트는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라고 부른다. 제국주의는 침략하기 위해서, 식민지는 해방과 혁명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20세기의 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反)생명의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수십 년에 걸친 식민지 체험과 민족분단, 정치적 소요, 무참한 전쟁, 수백만 인구의 죽음과 이동 그리고 절망적인 분단과 가난... . 한국인의 내면은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범벅이 되었다. 문제는 거듭되는 수난과 시련 속에서 형성된 배타적 감정이 인간을 한사코 수동태로 만들어 간다는 점이다.¹⁾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꿈과 사랑을 보여준 생명의 서사는 없을까? 만약 있다면 한반도에서 21세기를 맞는 사람들이 계승할 길은 그곳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전하기 위해 『문익환 평전』을 썼다. 그리고 결말을 이렇게 맺었다.

한반도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인간성을 위협해온 '냉전 감정'이라는 위험한 심리는 누구보다도 그를 통해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수치심 없이 저 아득한 20세기의 나날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분단·전쟁·국가폭력 같은 두려운 단어들에 아닌 따뜻한 언어로도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다.²⁾

1) 전성태의 소설 『국경을 넘는 일』은 한국인이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적 감정 상태를 그린다. “박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으리라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런 심리의 변화는 아주 순식간이었다. 착각이라는 사실을 그 자신도 잘 알았지만 박은 뒤를 돌아볼 염이 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등에 총알이 날아와 박힐 것 같은 공포감에 그는 움짱달싹할 수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박은 저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다. (137쪽) 한국인의 내면에 감추어진 이 '특수 감정'은 극단적 반공지대에서 신원미상의 상대를 언제나 불편한 타자로 만들고 울타리 너머를 적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왔다. 간첩 경계, 탈주 불안증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인들은 지금 격렬한 글로벌리즘과 배타적 로컬리즘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2)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인용 단락은 모두 『문익환 평전』에서 따온 것임.

바로 이 사람을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한 시인 고은은 “아무도 문익환을 표절할 수 없다.”고 회고한다.³⁾ 이 글은 그 점을 해명하고자 구상된 것이다.

1. 언어의 달인

한 인간의 사상을 추적하는 일은 흔히 그가 남긴 언어를 근거로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익환의 언어처럼 형용 모순이 많은 경우는 없다. 남들이 “과거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고 말할 때 그는 “역사는 꿈을 통해 부활한다.”고 했고, 분단의 상식을 절대화할 때 “역사를 산다는 것은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1993년 76세의 나이로 가석방되어 외친 제일성도 “통일은 됐어.” 였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도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 앞에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난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토록 무지막지한 비(非)논리가 가능했을까? 그와 관련해 문익환의 연보는 놀라운 사실을 제공한다. 당대 구약학의 대가, 신학자, 시인,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목사였다.

목사란 원칙적으로 ‘말씀에의 봉직’을 숙명으로 하는 자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표현은 종교적 언술이기 이전에 하나의 철학적 명제에 속한다. 인간은 천변만화하는 우주에 가득 찬 사물과 현상을 명명(命名)과 언술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직조해낸다. 하이데거는 말을 ‘존재의 집’이라 했다. 문익환은 ‘말씀’의 귀재였다. 조선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중국어로 된 사회와 일본어를 쓰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영어로 학문의 길에 들어 히브리어 전공자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사회의 언어들을 당대 최고급 수준에서 구사했다는 평이 자자하다.⁴⁾ 생애를 통틀어 섬광처럼 빛나는 일화들도 대부분 언어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역시 그럴 만한 내력이 없지 않았다. 소싯적에 그를 가르친 북간도 명동학교 교사들 중 장지영은 한글학자였고, 박태환은 주시경 <우리말본>의 서문을 썼던 바, 둘 다 문익환 집안과 각별한 사이였다. 훗날 성서번역을 함께 한 전택부는 용정 유학시절에 만난 학우들 중에서 문익환, 운동주의 언어관이 남달랐다고 술회한다.⁵⁾ 한국전쟁 때는 유엔극동사령부에

3) 문익환 10주기에 제작된 회고 영상, 2004년 온북TV 자료.

4) 일본어 수준에 대해서는 6월항쟁 때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인터뷰한 일본 NHK 기자의 소감, 또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문동환의 아내 페이문 여사의 소감 등이 유명하다.

5)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에는 그들의 어투 안에 세종조 어간의 발음이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증언이 소개돼 있다.

서 한글학교를 세워 교장을 지냈고, 판문점 통역자로서 ‘분단 회담’(후전협정이 분단을 확정지었다)에 부역하는 중에도 우리말을 베푼다는 사실만큼은 숨김없이 기쁨을 누렸다고 정경모도 증언한다.⁶⁾ 목회자, 신학자로 나선 뒤 공동성서의 번역책임자로, 또 시인으로 거듭 약진했던 까닭도 본질이 우리말 사랑에 있었다. 그는 밥상머리에서도 성서의 첫 마디 “태초에”를 “한 처음에”로 고쳐 번역한 사실에 긍지를 피력하곤 했다. 학문의 길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민중을 위한 운동, 통일운동에 투신하면서도 우리말 사랑을 놓지 않았으며, 징역을 살 때도 우리말 표기의 진화를 꿈꾸고 고민하며 혼자서 연구, 실습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심지어 문익환 사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뒤에도 단절되지 않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도 그의 후광으로 지속되는 셈이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신학교에 유학한 한국학생 2호 문익환이 개념적 수사학(修辭學)을 얼마나 능란하게 발휘했는지를 증명할 논문은 차고도 넘친다. 어쩌면 1956년 한신대 개학강연에서 설파한 <예언자와 역사>는 언어의 달인 문익환이 맞춤법에 입각한 교과서적 문장론을 박차고 나오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예언자들의 역사관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현재에 배태되어 있는 미래를 보았던 것이다. 현재에는 불원에 드러날 미래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선견자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가 불가피하게 초래할 미래를 과거의 일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문장에 완료형(마침법)을 썼다. 이것이 소위 ‘예언적 완료형’이다.

문익환이 ‘예언적 완료형’의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이 미세한 변화를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 주목할 필요도 없었다.

2. 장애물 넘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익환의 사상에 접근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는 일이다. 그는 말씀 하나하나를 하층민의 귀에 닿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했지만, 그

6) 정경모는 문익환과 함께 판문점 통역을 전담했다. 1989년 두 사람의 방북이 여기에서 연원한다.

뜻은 맞춤법적으로 신뢰하면 오류가 나기 십상이다. 가령, 문익환은 중국 길림성 화룡현 지신진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지를 밝힐 때 언제나 중국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북간도 명동 출신이라 표기한다. 문익환을 설명할 때 단골로 언급되는 운동주 콤플렉스, 장준하 콤플렉스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민중적 암호(?)’에 속한다. 운동주는 1917년생 문익환은 1918년생인데, 운동주의 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십자가’가 있는 ‘교회’(문익환의 아버지가 장로, 운동주의 아버지가 소사 일을 보았다)를 떠난 뒤 상급학교 진학에서 운동주가 두 번이나 낙방하여 2년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문익환의 운동주 콤플렉스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좌절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한 고독한 존재’에 대한 진정한 섬김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장준하에 대한 콤플렉스도 문익환의 독창적인 가치관이 발견해낸 ‘희귀한 결여 의식’의 발로이다.

장준하 선생은 저보다 나이로 말하면 몇 달 늦고 학교로 말하면 제 동생과 한 반이어서 3년 후배지요. 늘 동생처럼 생각해 왔고 그러다가 해방 후 서울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내 눈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대선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논법으로 운동주, 장준하보다 훨씬 먼저 언급해야 할 대상은 그들보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생 문동환이어야 했다. 이 같은 언어를 가장 빈번히 접한 아내 박용길도 옥중서신을 읽다가 오독하는 경험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당신은 어제 내가 스님이 되는 거 싫다고 했지요. 목사가 스님이 된대거나 스님이 목사가 된다는 문제가 아니지요. 종교적인 경험을 말로, 논리로 표현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는 말로 다 해버릴 수라도 있는 듯이 ‘말씀’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거든요.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탁월해 보인다.

말이란 본래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거 아니겠소?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에 대한, 그 한 번 있는 일에만 적용이 되고 그 일에만 타당한 판단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언제나 그 일의 어느 한 면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이 그대로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어 버리는데 기독교 신학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던 차에 불교가 강조하는 ‘마음’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언어는 거대 현실의 복잡하고 다기한 측면들을 한 뭉치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고 예리한 매체에 속한다. 인간의 말이 미치지 못하는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영역을 문익환은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 그래서 장준하의 『돌베개』 표4에 남긴 말에서도 평면적 접근을 단번에 차단시켜 버린다.

온몸으로 민족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간 그의 뜨거운 가슴, 고요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몸가짐에 비해보면 그의 사상의 평가 같은 건 검불과도 같은 것이다.

심지어 허병섭 목사의 〈녕마 공동체〉를 읽었을 때도 옥중서신을 통해 거듭 상찬해마지 않고서는 놀라운 한 마디로 혀를 찌른다.

그래봐야 허목사도 아류밖에 더 되겠어요? 예수님의 아류, 나처럼.

‘지식’이나 ‘발언’으로 표출된 가치, 즉, 어떤 해설이나 주석을 ‘아류’라 하고, 그것의 실제인 삶 자체를 ‘원본’이라 한다면, 예수의 아류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김 목사님(김재준)과 단둘이 마주앉아 담소할 기회를 얻었다. 나는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 “교인들이 문 밖에 나서기 전에 잊어버리는 설교를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김 목사님은 지나가는 소리처럼, “콩나물에 물 주기니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신이 와짝 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언어의 표현적 자질에 대한 한없는 기대와 무지막지한 회의를 놓치지 않고 평생 성찰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터득한 언술형식의 본령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함석헌을 논하는 자리에서이다.

함선생님의 저서를 읽어보면 초기에는 소위 학문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든지 『뜻으로 본 세계역사』라든지(...) 그러나 차츰 연륜이 드시면서 함선생님은 그런 학문적인 관심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달리 말을 하면 거대한 체계를 갖춘 사고를 형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민족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적어놓으신 것뿐입니다.

학자가 글의 함정을 경계하고 현학보다 구어체를 선호하며 자신의 언어를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 담아두려는 ‘비우기’를 익힌 후 닿을 곳은 어디일까? 문익환은 바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3. 예언자의 시

문익환이 자칭 ‘아류’의 처지를 극복하는 것은 1972년의 어느 날 꿈과 부활에 관한 의지를 시로 쓰면서부터가 아닌가 한다. (이 대목에서 문익환 생애 후반의 동반자가 시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다양한 신분에서 시인이라는 직함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나는 『문익환 평전』에서 그의 호 늦봄이 탄생되는 지점을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로 추정한다. 4.19를 겪고 슬한 절망의 시간들을 거친 뒤 ‘말씀의 수용자’에서 일거에 ‘말씀의 창조자’로 전환하는 반전의 수단이 시집 출간이었다.⁷⁾ 고은도 시를 통해 그가 “히브리인이 아니고 한국인임을 깨달았다”고 쓴다. 실로 예리한 통찰이다.

그것은 잔디 씨 속에 이는 봄바람이다.//그것은 눈먼 아이 가슴에서 자라는 태양이다.//그것은 언 땅속에서 부릅뜬 개구리의 눈망울이다.//그것은 시인의 말 속에서 태동하는 애기 숨소리다.// 그것은, //그것은 오늘을 내일처럼 바라는 마음이요, 오늘을 내일처럼 믿는 마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서의 구절을 빌어, 그 날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주제는 ‘믿음’이다.

우리는 흔히 믿음과 행위는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고데라는 주석가는 “믿음은 최고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이거든요. (...) 물을 믿고 배는 뜨고, 공기를 믿고 비행기는 나는 것입니다.

문익환이 앞의 시를 쓴 의도는 성서의 뜻풀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해에 있었던

7) 문익환 시집 『새삼스런 하루』는 자신이 스스로 말씀이 되는 순간의 새삼스러움을 반영한 제목이다.

전태일의 ‘죽음’이 ‘바라던 것의 실상’, 즉 전태일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말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잔디 씨’에서 봄바람을 읽고, ‘눈먼 아이’에서 ‘태양’을 읽는 여섯 줄의 시에 담긴 사상적 실체를 통상적인 문학비평의 눈으로 해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언제나 마술과 곡예의 불꽃을 뿜는 감각적인 시인들의 도취된 산문과 비교해보면 문익환의 글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아무 색채가 없다. 누구도 선동하지 않고 구애(求愛)하지 않으며, 시적인 밑그림도 음악적인 울동도 포기한 문체! 이는 오늘날 문예창작학과에서 연마하는 화려한 언어조각 능력의 정반대편을 질주하는 것이다.

까닭에 문익환 시집의 발문에서 백낙청은 그의 시를 한용운의 경우에 비유한다. 소위 문단 바깥의 성취라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문익환의 시를 애송하는 독자는 문예주의자들이 아니었다. 한국 문단이 매해 이어오고 있는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그를 선정할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없다. 문단은 문단의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화려한 언어 성찬의 경연장에서 읽기에 그의 시는 유행 사조(思潮)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꿈을 비는 마음> <오월의 양심>⁸⁾ <잠꼬대 아닌 잠꼬대>처럼 동시대적 감수성의 지평을 바꿔버리는 엄청난 성취를 후배 문청(文靑)들이 학습하거나 계승할 엄두를 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어문구조가 갖는 파격적인 ‘체제 전복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편들은 한 사람의 언술 체계에 내포된 사상 구조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신학사상』 1994년 여름호에 발표된 김기석의 글 <생명의 바다에 통일배 띄우고-문익환의 시세계>는 문익환 사상의 열쇠어라 할 ‘꿈’을 지목하여, “꿈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무한정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체제의 논리를 해체하는 힘을 갖고 있음”(74쪽)을 밝히면서 “길은 염원만으로, 기다림만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문익환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기다림의 내용을 선취(先取)’하는 삶이다”(73쪽)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을 “(문익환) 시인은 ‘길’ 위에서 생각하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이 된 사람”으로서 문익환의 통일 이야기가 결국은 정치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에 이르는 것이라고 아귀 짓는다.

내 생각에 문익환의 시에서 확인되는 독창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시적

8) 가장 쉬운 말로 쓰였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념’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문익환이 쓴 명시 중 하나에 속하지만 문단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 했다. 나는 『문익환 평전』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여기서 문익환이 말하는 ‘그들’, 곧 히브리인이자 한국 민중이요 또 광주시민이었던 그들의 이름을 80년대는 내내 ‘오월’이라고 불렀다. 그렇다. 오월! 김대중, 문익환 등의 구속과 함께 태어난 그 ‘오월’은 한국 시간으로 1980년 5월 27일 오후 2시 경 광주 도청 옥상에서 최후 사살되었지만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끝까지 절명해 버리지 않았다. 부상한 채로, 그 ‘부서진 오월’은 목사의 언어들을 발설하며 다시 술한 젊은이들을 몽롱하고 달콤한 ‘비(非) 정치의 지대’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새로 태어나는 오월의 자식들은 다시는, 릴케의 시에 나오는 저 아름다운 은빛의 계절들 속에 파묻히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성장에 의해 반도 곳곳에서, 삶을 오직 개인의 안락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던 모든 ‘사적(私的) 인간’들의 권리는 점점 박탈되었다. 그 전까지 맹위를 떨치던 세속적 출세자들의 영광은 이내 한국사의 변두리로 떠밀려갔다. 오월의 양심이 개인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로부터 다시 역사에게로 크고 동그런 파장을 그리며 멀리멀리 퍼져갔던 것이다.”

화자가 보여주는 섬김의 태도이다. 그의 언술 속에서 자화상은 언제나 폄하되어 있다. 문익환의 겸손이 세계를 가공하는 솜씨는 그와 반대 되는 캐릭터와 정확히 대칭된다. 예컨대 히틀러는 평생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다.⁹⁾ 히틀러가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미화시키려 했다면 문익환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미화시키려 했다.

또 하나는 시적 어조가 발산하는 예언자적 확신이다. 세계를 사건들의 인과적 연속으로 축소시키는 것에 맞서서 시는 정신의 자유로움과 탈선을 부추기는 불온한 것이다. 문익환이 시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의 불온성이 예언자 정신의 본질이라 본 까닭이었다. 그는 예언자에 대해 《히브리 민중사》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점쳐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물론 예언자가 하는 일 가운데 이 일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이 ‘입에 거품을 문다’는 말에서 왔다고 하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을 뒹구는 사람, 이를테면 접신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문익환의 시에서 맞춤법 파괴의 마술을 빚는 생명 충동의 발산이다. 박정철의 논문 〈문익환의 시세계에 나타난 생명사상〉은 그것을 문익환 사상의 단초로 본다.

삶은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生)은 명(命)이다.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마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 따라서 생명은 불가피하게 자라려고 하는 힘을 갖는다. 생명의 마음, 생명의 본능은 내일을 지향한다. 생명은 ‘지금 있는 것’이면서 ‘장차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꿈’을 내포하고 있다. 전태일이 받아 든 ‘생’의 ‘명’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죽임’을 파괴하는 부활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요지)

4. 문익환의 ‘발바닥론’

이제까지의 관찰을 통해 명백해진 사실의 하나는 문익환이 언어를 독자적인 텍스트의 성

9) 요하임 C. 페스트가 쓴 『히틀러 평전』(푸른숲 간)의 관점이 여기에 있다.

채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발바닥이 땅에 남긴 것을 보충하는 주석(註釋)에 다름 아니다. 이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국민윤리적 덕목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일 것이다. 말년의 대표작이라 할 『히브리 민중사』에는 그가 ‘발바닥’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렇게 펼쳐진다.

모든 기쁨,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말없이 땅을 밟을 뿐인 발바닥!

인류가 이룬 모든 생존과 문화의 밑거름이요 원동력인 이 발바닥의 노고가 제도화된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묻히고 소멸된다. 왜? 역사는 기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달하는 일종의 가공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발바닥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사상 같은 것도 신뢰하지 않았다. 권력을 쟁취한 자들만이 역사를 문자로 보관한다. 더욱이 문자는 현실을 재편집해 버린다. 그래서 『성서』까지도 히브리 민중사였던 것이 끝내 이스라엘 왕궁사로 둔갑되고 말았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점 한 가지가 권력이 지탱하고 있는 ‘제도’와 생명이 처해 있는 ‘현실’이 동일하지 않음을 그가 직시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5.18의 주역들에 대한 다음의 논평에서도 그 같은 태도가 드러난다.

그들은 결코 나라를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최고도 아니요, 나라에 대한 충성이 우리의 마지막 충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명령이면, 누구나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라고 하는 무인격적인 힘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구분하자면 ‘존재’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둘이 충돌하는 현상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문익점이가 누구 허락 받고 목화씨를 붓두껍에 넣어 왔더냐? 그 목화가 이 백성을 얼마나 따스하게 했는데, 그 자손이라 할 수 없구먼.”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있죠. (...) 문익점 할아버지, 국제 밀수꾼 제1호지만, 이 불쌍한 겨레는 솜옷을 입을 때마다 그냥그냥 고맙기만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가 노년에 쓴 편지에서 일말의 이기심이 숨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억측일까? 흔히 준법정신이라 하는 말에 담긴 질서 존중의 가치를 임의로 경시하는 것은 단견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익환의 자리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다. 역시 『히브리 민중사』에 나오는 단락이다.

헌법을 공동체의 기틀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겉 기틀과 속 기틀 둘이 있습니다. 겉 기틀을 권력구조라 한다면 속 기틀은 민초의 인권보장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본말을 뒤엎어서는 안 됩니다. 겉 기틀은 속 기틀을 위한 것이거든요. 속 기틀이 목적이라면 겉 기틀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속 기틀이 절대적이라면 겉 기틀은 상대적이라는 말도 되구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하느님의 것)가 선차적인 것이고, ‘관계’의 문제(인간의 것)가 후차적인 것이므로, 그는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도 ‘존재’에 관한 것을 중심에 세우고 ‘관계’에 관한 것들을 정돈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같은 인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가 <예수와 묵자>를 이야기하면서 촉발된 기세춘과의 논쟁이 아닌가 한다.

흔히 ‘예수’와 ‘묵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다고 얘기되는 이 논쟁의 본질은 사실은 유목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빚어진 평화운동에 대한 논쟁이다. 본디 기세춘의 연구에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 주고받던 편지에서 문익환이 불가피하게 반론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은 기세춘이 유목민적 생존형식의 본질을 미리 ‘침략문명’으로 단정함으로써 생산적인 논란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점에 있다.

유목이란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가 아니며, 사회적 기능에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내적 법칙을 갖는 체계가 아니며, 발전단계로 보아도 특정 단계의 독특한 사회정치적 체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예수와 묵자』 260쪽)

기세춘은 스탈린의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사실상 소비에트 과학아카데미의 입장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¹⁰⁾ 정주사회에서 유포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유물사관의 논거에서 파생된 것이다.

어쨌든 종속적 의존이거나 복속과 약탈이거나 유목사회와 정주사회 사이는 숙명적으로 강압적 관계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265쪽)

저는 평등사상은 고사하고 더구나 평화사상은 유목전통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확신에 가까운 믿음

10) 소비에트 연구자들의 이 같은 견해를 극복한 기념지적인 저술이 블라디미르초프가 쓴 『몽골사회제도사』(주재혁 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이다.

을 갖고 있습니다.(266쪽)

그 때문에 유목문명을 토대로 전개된 성서의 언어들 모두가 보편성을 결여한 것으로 희화화 되는 것을 기독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문익환은 “목자들이 바라는 것은 평등이요 평화였”음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해간다.

목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의(義)에도 양(羊)이 있거든요. 양 같은 ‘나(我)’가 의(義)이군요. 그동안 짧은 운동경험에서 양 같이 약한 듯한데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 정의감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정의감은 양 같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은 스텝 지역 생태계의 생명줄인 초지의 제1차 소비자에 속한다. 포유류이면서도 초원계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놓이는 생명체로서 양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따르며 의탁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대하는 마음은 신실하기 그지없어서 심지어는 목자가 도살하려고 심장 부위를 칼로 찔 때조차도 눈물을 흘릴 뿐 저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목자는 ‘한가로이 피리나 부는 낭만적인 목동의 상’에 안주할 여지가 없다. 자신에게 목숨을 내맡긴 양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그에 마땅한 ‘일용할 양식’ 즉 풀포기 앞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도리에 쫓기게 된다. 적어도 초원에서 목자의 헌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의 순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성서가 은유의 기초로 사용하는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언술은 이곳에서 나왔다. 문익환의 설명에는 바로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양(羊)에게서 의(義)만 본 것이 아니라 선(善)도 보았고 미(美)도 보았던 것 아닙니까? 양을 의와 선과 미의 실체로 보았다면 양을 치는 목자들도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목민에 대한 기선생의 생리적인 거부감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172~173쪽)

실로 놀라운 진술이 아닌가 한다. 스텝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앙 ‘조드’는 여름철의 기후 건조로 인한 가뭄 끝에 가을과 겨울에 한파가 몰려옴으로써 광야에 산재된 몇 천만 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숨지는 사태를 말한다. 목자는 봄부터 여기에 대비하여 ‘조드’로 동사(凍死)할 가축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없는 허약한 개체를 희생시켜 초지를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어린 양이 자신의 안내를 받아들여

극심한 한파에도 끄떡없을 만큼 살이 올랐을 때 뒤통거리는 엉덩이만큼 예쁜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한다.¹¹⁾ 이것이 문익환이 말하는 양(羊)이 살찌서 커(大) 보이는 형상, 곧 미(美)이다.

다시 문익환의 발바닥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가 말하는 ‘발바닥’의 반대말은 ‘손’이나 ‘머리’가 아니라 ‘제도’가 되는 셈이다. 또한 문익환 발바닥 언어론의 즉자적인 해석은 누가 무엇을 말로 주장했는지 아니면 실천으로 보였는지를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문익환 사상의 본론에 들어가면 그것은 신과 인간의 것을 구분 짓는 종교적 차원의 사유, 우주의 움직임과 사람의 움직임을 가려가면서 논하는 과학적 사유의 것으로 폭넓게 확장된다. 문익환에게서 평화사상이 흘러나오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는 한반도적 불행의 근원인 분단의 문제를 지목해 이렇게 평한다.

전쟁을 막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6.25전쟁 이후 우리는 근 3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왔습니다. (...)

시인 김정환도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노래한다.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다. 문익환의 실천이 사회운동을 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브란트가 주재한 위원회(명칭?)가 제3세계를 조사한 『남북』이라는 책을 보면 평화의 적은 전쟁과 빈곤 두 가지라 하거든요. 빈곤 자체가 평화의 부재인 거죠. 빈곤은 사회적인 온갖 모순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인 거죠. 전쟁과 전쟁준비가 빈곤의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지만 한 원인, 한 결과이지 모든 원인, 모든 결과인 것은 아니지요. 전쟁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폭력 아니겠습니까? 불평등사회를 유지하려고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힘은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구조적인 힘이 더 큰 거죠.(184쪽)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자리에서 김대중도 “굶주림보다 큰 인권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구조적인 힘을 제거하는 일, 이를 ‘제도정치’라고 말한다면 평화란 근본적으로 제도정치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문익환이 말하는 ‘민의 통일운동’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1) 나는 중세의 유목생활사를 다룬 소설 『조드』를 쓰기 위해 초원에서 1년 넘게 현지 취재를 한 적이 있다.

평화의 평(平)은 높낮음이 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화(和)는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 고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평등이라는 말에는 없는 기쁨이 평화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184쪽)

생명의 환희, 존재의 기쁨이 온전히 표출되는 삶을 문익환은 평화적인 상태로 생각했다. 여기서 그가 운동주를 설명하는 논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주는 일제 강점 아래 있는 조국을 ‘감옥’이라고 보지 않고 ‘병원’이라고 보았다. 깊은 내면적인 침전 끝에 얻은 새로운 안목이다. 강점자의 손아귀에서 풀려나는 해방만으로 새아침이 오리라는 소박한 신념이 부서지고 조국을 병리학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겠다. 문제는 강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점령자, 피억압자 자신에게도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문익환전집』 6권 360쪽)

문익환이 사회운동의 본령을 생명 치유 활동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서 주어진다. 평등이 사회적 약속을 재조정해야 되는 일이라면 평화는 신의 축복을 보장해야 되는 일에 속한다.

1992년 12월18일자 편지의 말미에 “예수가 병을 고치는 일에 신명을 바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특이한 평화운동이었다는 점을 다음 편지에 쓰기로 하겠습니다.”(185쪽)

돌이켜보면 19세기를 살았던 강증산이 구릿골에서 만국의원 ‘광제국’을 거점으로 천지공사를 하고 다녔던 모습도 문익환이 말하는 종류의 평화운동이었다. 1992년 시점에서 후천개벽사상을 계승한 김지하와 구약의 예언자들 연구한 문익환이 ‘생명사상’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는 장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문익환이 발바닥 치료를 할 수 있는 ‘파스 요법’을 터득하고, 숨져가는 김남주를 살리겠다고 병실을 찾아다닌 일도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¹²⁾ 역시 『예수와 목자』에 나오는 말이다.

12) 만성 병약자 문익환이 질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첫 번째 감옥에서였다. 이후 징역살이를 하는 민주투사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독학을 하여 의료 행위의 깊은 영역까지 접근해 갔다. 실험대상은 자신의 몸이었고, 실험도구는 대나무 침이었다. 이 방면의 소양은 나중에 시술하기 까다로운 침 대신에 독창적으로 파스요법을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팔과 다리에 물려 있는 경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단 5분 만에 종합건강진단을 끝내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아픈 부위와 연관된 경락 위에 파스를 붙이면 감쪽같이 병을 낫게 하는 대증요법인데, 그는 이 방법으로 옥중에서 술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와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보다도 ‘파스’를 주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면 천륜과 인륜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생명에서 만난다.(190쪽)

이렇게 존재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통일해서 인식할 때 ‘살림’의 길과 ‘죽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살림’의 길을 목숨이 취해야 할 자연(평화)의 상태로 유지시키자는 것이 문익환의 평화사상이요, 제도적 폭력으로 ‘죽임’의 위기에 처한 존재의 서사를 반전시키려는 운동형식이 ‘꿈’을 통해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그 어떤 문자 행위도 문익환의 발바닥이 지상에 기록한 족적에는 미치지 못한다.

5.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을 위하여

문익환이라는 존재가 한반도적 평화의 한 상징기호로서 저자거리에 등장한 것은 1976년이었다. 이후 18년 동안 여섯 차례 투옥되어 12년을 옥중에서 지낸다. 그 불타는 생의 전개를 일컬어 재야운동권에서는 흔히 통일운동의 대부로 칭한다. 그러나 그 같은 범주화는, 절박한 통일운동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거대한 정신적 실체 하나를 매우 좁은 굴레에 가두는 격이 된다. 문익환과 김일성의 회담이 6.15정신을 낳았다는 사실도 국가적 의미는 클지언정 사상의 본체가 되지는 못한다.

문익환은 사랑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에 이르는 생명의 서사를 충과 효와 같은 체제 이데올로기에 뒤섞지 않고, 또한 공과 사와 같은 국가나 사회제도의 부속품으로도 인식하지 않았다. 한 생명체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은 문명이나 사상, 체제나 제도 따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려준 질서이자 생명 고유의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이 같은 경향이 문익환의 삶에서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낸 정신적 요체로서 그 실천의지가 한국현대사를 통해 눈부시게 발현되고 증명된 ‘살아있는 종교성’의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문익환의 위대성이 ‘정치사적 순간’이 아니라 ‘지난한 생의 과정’ 속에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문익환의 일본 유학 시절 대동아전쟁이 목을 죄어올 때 온 젊은이가 역사의 물음 앞에 선 적이 있었다.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네 친구는 모두 다른 방향을 보게 된다. 일제에 맞서, ① 싸울 것인가(송몽규의 선택), ② 탈출할 것인가(장준하의 선택), ③ 견딜 것인가(운동주의 선택)? 문익환은 ④ 회피하는 길을 택했다. 역사, 체제, 구조 안에서 개인의 힘이란 얼마나 실낱같은 것인지, 절벽 같은 세상에 맞선다는 것은 또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 덧없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한국전쟁 때는 공

교롭게도 판문점에서 분단 상태를 지속시키는 휴전협정을 통역해야 했다. 1980년대가 일반적으로 경도된 사회운동의 유물사관적 전망도 그는 공유하지 않았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는 확고했다.

우리 인간이 세계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반대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도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려던 모든 독재자들은 인류 역사의 패배자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가체제에게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일이 하느님 앞에서는 적절한 일이 되는 예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 같은 실천은 때때로 둘도 없는 이웃과도 충돌하게 한다. 문익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용틀임을 할 때마다 재야운동에 일찍 나섰던 동료들은 문익환의 ‘순진무구함’을 염려하고는 했다.

아무려면 재야운동에도 문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문익환이 뛰어들어서 ‘야기한’ 세 차례의 ‘돌발’은 모두 당대의 비체제적 권력집단(재야)의 호흡에는 안 맞는 일종의 ‘사고’에 속했다. 1976년 3.1구국선언 사건 때도 선배 활동가들이 경계하는 눈길을 보냈고, 김대중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와 민통련 의장을 맡을 때도 동세대 활동가들이 급진성을 경고했으며, 1989년 방북을 감행할 때도 후배 활동가들이 공안정국을 부른다 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화의 소지를 제거한 것은 합리적 논의가 아니라 문익환의 탁월한 ‘콤플렉스론’이 보여준 겸손의 힘이였다. 그러나 세 차례의 거사가 모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지평을 바꾼 기념비적 비약의 기회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방북 사건은 남, 북, 해외의 민심을 동시에 흔들어버린, 민간인이 도모한 해방후 최대 사건이었다 해도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한반도에서 20세기에 펼쳐진 평화사상의 한 절정이었다고 본다. 왜냐?

우리의 남북관계는 언제나 정치, 경제, 군사적 소모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누구나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들 때문에 ‘분단 극복’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듯이 오직 이 문제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것만이 문제라면 ‘통일’과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가, 개인의 삶에서 ‘국가’랄까 ‘국경’이랄까 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젊은 층이나 청소년 세대에서는 남북이 굳이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가,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72년 묵은 갈등과 그 극복의 어려움, 복잡함, 지난함이 아무리 피곤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삶은 국토 위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안에서도 존속된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1948년 UN 한국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단장으로 들어온 인도의 크리슈나 메논이,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국가적 단일체’가 남북으로 이념을 달리하는 2개의 제도적 대립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신이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제3자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누가 어떻게 설명해도 남과 북은 먼 과거부터 몇 천 년에 이르는 삶의 문화를 함께 누렸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위적으로 단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령 서로가 죽도록 밉고 싫을지라도 매번 자신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른 한쪽을 포기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 앞에 이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전개되는 생명의 서사를 정상가동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강압적 근대’가 우리에게 가한 폭력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삶의 근거지를 파괴한 점이었다. 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외압을 받았을 때 항일 투사는 싸우기 위해 마을을 뜨고, 출세한 친일 부역자는 이웃의 눈총을 피해서 동네를 빠져나가며, 말없는 일손들은 제국의 부름에 하나하나 징발되어, 나중에는 노동력을 갖지 못한 아녀자들만이 뒤에 남아 아버지와 삼촌, 오빠들을 기다리는 임시의 삶을 지탱했다. 그리고 그 ‘임시’가 2대째, 3대째 흘러서 이내 엮어진 성냥통의 성냥개비마냥 다시는 본디 자리를 찾을 수 없게 형클어지는 것이다. 민족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남, 북, 해외로 뿔뿔이 갈라지면서 내면에 새겼던 ‘나그네 설움’의 정신은 두고두고 우리의 정신적 운명이 되었다.

일제가 물러간 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극복되지 않았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로 상징되는 남쪽 사회의 ‘압축적 근대’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뿌리 뽑힌 사람들의 슬픈 여로(旅路)였다. 그 길에서 지친 나그네들이 아무리 ‘고향이 있었던 자리’를 찾으려 해도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삼포 가는 길>¹³⁾에 불과했다. 존재의 근원적 안식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의 ‘눈물바다’와도 같은 그 어떤 일시적 감격도 이 민중이 미래를 향해할 수 있도록 놓아주지 않는다. 근거지 상실, 분단의 상처, 복구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와도 우리에게 여전히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익환의 통일운동은 이 같은 과정이 민족을 ‘죽임’의 상태로 내몰기 때문에 거행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과거의 통일운동이 ‘존재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근원적 전략을 채택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적 한계였다고 본다. 모든 꿈이 1차적으로 독재 정부의 ‘반(反)민

13) 황석영의 단편 <삼포 가는 길>은 객지에서 떠도는 하층민들이 기를 쓰고 찾아가지만 고향은 이미 어디에도 없게 되는, 근거지를 박탈당한 자들의 슬픈 현실을 그리고 있다.

족성'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의 전부를 '전술적 과제'에 쏟아야 했으니, 국가보안법을 해체하고, 대립과 긴장을 재생산하는 세력들을 견제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그 실체였다. 그러나 통일은 “갈라지기 이전의 자리가 있는 과거의 어느 지점을 찾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고향’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¹⁴⁾ 여기서 문익환의 통일운동은, 지상의 어떤 민족도 외세 때문에, 또한 지상의 어떤 민중도 위정자들 때문에 ‘존재의 온전성’ ‘세계의 온전성’을 잃고 살 수는 없다는 점을 최종 전략으로 삼았다. 당연히 그의 노선은 민중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대지를 분할해 버리지 않는 ‘통이(通二) · 통삼(通三) · 통다중(通多衆)으로서의 통일’이었지 딱히 어떤 정치체제를 구현해보려는 형식의 통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라는 준열한 외침이 나온다.

6. 다시 신 앞에 선 인간들에게

역사에서 단일하고 연속적인 진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외친 문익환의 통일운동 방식은 사회운동 경험의 과학적 축적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확립된 문익환 사상의 생명운동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통일은 뻤어.”도 기독교적 상상력의 표출이다. 흔히 김대중의 노선과 변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통일론 자체도 문익환의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론’이라 하는 남과 북의 국가체제만이 아니라 민중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마지막까지 자치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뚜렷이 사상적 독자성을 보여준다.

문익환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이론 정립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정작 그가 남긴 발자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음이 틀림없다. - 인간 삶의 영역 중에는 역사단계에 따라 출현하는 특정한 사회제도나 체제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지상의 목숨들이 모여 사는 영토와 생태 공동체, 언어공동체, 문화공동체는 하느님의 것이지 정권이나 통치자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어떤 권력도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하느님의 것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민중의 삶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분할하고 단절시키는 분단 통치도 체제가 하느님의 것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속한다.

14)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당대.

한반도에서 통일문제를 논할 때마다 문익환이 남북 양 체제 앞에서 애오라지 민(民)의 입장으로 서있고자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가 말한 민의 통일운동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운동이요, 과학적으로 논해서 우주의 명(命)이라 할 생태질서의 단위를 복구하자는 운동이다. 따라서 그것은 군사작전처럼 삼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평화로운 것이어야 옳다. 정반대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핵과 전쟁의 모험 앞에 내몰려 있는 분단체제의 관리자들에게 민중이 엄중히 전해야 할 언어가 이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움이 틀 때에 한 번 놀란다. 잎이 날 때 또 한 번 놀란다. 꽃이 필 때 또 다시 한 번 놀란다. 열매가 열릴 때 진정 놀란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놀라움으로 진정 알게 되는 것이다.

문익환의 평화사상이 한반도의 미래에 주는 함의가 여기에 있다.

〈토론〉

“문익환의 평화사상 : 그의 ‘발바닥 언어’가 지상에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를 읽고

최형묵 (한신대)

1.

문익환은 한국 현대사의 거목이다. 어느 한 이름으로 그의 삶을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최대한 간결하게 그 이름을 집약한다면 목사, 신학자, 시인, 실천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웬지 그 이름들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그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발제자는 과연 〈평전〉의 저자답게 그의 삶을 통째로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다. 무엇보다 목사로서 언어의 달인이었던 문익환이 그 언어를 비워버리고 발바닥으로 기록해낸 삶을 전모를 포착하고자 한다. 덕분에, 우리는 저마다 관심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하나의 이름으로 주목한 문익환의 어떤 면모를 그려내는 한계를 벗어나 그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발표는 주어진 주제에 집중하여 문익환의 평화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 때 많은 경우, 특히 학자들은 지면에 기록된 언어를 주목하고 관심하는 바 주제에 집중하여 논리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발제자는 지면에 기록된 언어를 넘어 발바닥으로 지상에 기록한 것들을 주목함으로써 문익환이 온 몸으로 이루고자 했던 꿈을 포착해내고자 한다.

2.

발바닥으로 자신의 삶을 기록해나간 문익환에게서 전환점이 되는 계기는 그가 시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즈음부터이다. “4.19를 겪고 술한 절망의 시간들을 거친 뒤 ‘말씀의 수용자’에서 일거에 ‘말씀의 창조자’로 전환하는 반전의 수단이 시집 출간이었다.” 시 역시 또 하나의 언어 형식임에는 틀림없지만, 문익환의 시는 ‘화려한 언어조탁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수단이요 그 삶을 이끌어가는 꿈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었다. 문예비평가들이 별로 주목할거리가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색채가 없’는 글로써 표현된 그의 시 세계는 파격적인 ‘체제 전복성’을 지니고 있었다.

계속 이어진 일련의 시집들에 나타난 문익환 시세계의 열쇠는 ‘꿈’이었다. “꿈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무한정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체제의 논리를 해체하는 힘을 갖고 있”다. 문익환은 그 꿈을 선취하는 삶의 길을 헤쳐 나감으로써 스스로 길이 되어 마침내 ‘생명’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발제자가 인용하고 있는 김기석의 글 참조). 생명은 그저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서, 그것은 일체의 죽임을 넘어선 살림을 뜻한다.

문익환이 계속해서 시집을 내고 시인으로 불리게 된 삶의 후반부는 이른바 실천가로서 삶의 여정과 일치한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평화 통일운동에 헌신한 삶의 여정이다. 1976년 3.1구국선언 사건 이래 여섯 차례 무려 12년을 옥중에서 살아야 했던 삶의 여정이다. 폭력의 세기, 그 폭력의 구조가 응축된 한반도에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꿈과 사랑을 보여준 생명의 서사”를 보여주는 발걸음이요 몸짓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그 생명의 바다에 이른 발걸음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발바닥이 땅에 남긴 것을 보충하는 일종의 주석으로서 문익환은 <히브리민중사>와 더불어 공동의 서신 논쟁록 <예수와 묵자> 저작을 남긴다. 발바닥으로 기록한 삶의 여정을 일일이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비록 삶 그 자체 원본은 아니지만 도리없이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사본을 통해 후대인들은 그 원본의 진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민중사>는 제목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시피 성서의 일관된 맥을 히브리 민중들의 해방 역사로 꿰뚫고 있다. 그것은 문익환이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온 예언자들의 해방 전통을 성서의 본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그 예언자들의 선포가 민중들의 마땅한 삶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데 있다는 통찰을 기초로 한 것이다. 본래 구약성서 신학자요 성서 번역가였던 문익환이 삶의 반전을 통해 체득한 통찰로 성서를 재해석한 빛나는 저작이다. 여기서 문익환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되돌리고 있다. 그의 평화사상의 중요한 기초가 여기에서 확인된다.

<예수와 묵자>에서 문익환의 평화사상의 윤곽은 더욱 뚜렷해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것은 유목문화가 평화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익환이 평화를 역설할 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익환은 평등을 평화의 핵심으로 역설하고 있다.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평등이 구현된 삶의 기쁨의 차원을 뜻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익환이 성서의 역사를 히브리 민중사로 조명하고, 또한 그렇게 혼신을 다해 헌신하였던 통일운동에서 민중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던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4.

앞서 말했듯이 논평자는 발제자의 접근방식에 깊이 공감하며, 또 그 접근방식에 따라 도달한 문익환의 평화사상의 핵심에 역시 깊이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에 놓인 덧과 같이 걸리는 대목이 있어, 논평자로서 굳이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논평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려 한다.

발제자가 권력이 지탱하고 있는 ‘제도’와 생명이 처해 있는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며, 이를 ‘존재’와 ‘관계’라는 편의적 구분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물론 발제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생명의 충일함을 향유하여야 할 민중의 삶을 가로막는 지배체제를 타파하는 데 문익환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존재와 관계의 문제로 해명하는 것이 적절할까? 인간은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논평자의 입장에서는 순간 혼선과 더불어 오독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개념이라도 사용하는 문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해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한국 현대사의 과제를 ‘존재의 근원적 안식처’를 회복하는 것이라 보고, 문익환의 생명사상과 평화사상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 보는 것은, 보기에 따라 상당한 의혹을 자아낼 수도 있다. 그것이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 ‘국가적 단일체’ 또는 ‘민족 공동체’로 동일시된다면 상당한 위험 요소를 동반하는 것은 아닐까? 발제자는 서두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문익환을 주목하였다. 그런데 만일 ‘존재의 근원적 안식처’가 ‘국가적 단일체’ 또는 ‘민족 공동체’로 귀결된다면 문익환이 타파하려 했던 어떤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베네딕트 앤더슨)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 있거니와, 그것은 가변적인 역사적 실체일 뿐 항구적 실체는 아니다. 발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이 “과거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고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민족’의 범

위 안에 있다면 의혹이 불식되기는 어렵다. 민중의 편에서 정의를 선포한 예언자를 주목하고, “사랑의 사회적 실천은 (정)의”라 역설하고, 성서를 히브리 민중사로 조명하고, 심지어 “예수는 계급해방론자”로서 ‘NL’이 아니라 ‘PD’라고까지 한 문익환은 과연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문익환이 “평등이 평화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민중들이 일상적 삶의 평화를 만끽하는 것이야말로 생명 본연의 모습이라 본 것은 무엇보다 갈등하는 현실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중들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익환을 포함한 민중신학의 선구자들이 한국의 현대사 한복판에서 이른 통찰로서, 세계적 지평에서 보편적 공감을 얻게 된 통찰이다.

물론 민중운동과 민중신학의 선구자들에게서 ‘민족’과 ‘민중’은 별개로 인식되지 않은 면이 있다. 그것은 식민지 피지배라는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민중신학에서 널리 통용된 ‘민중적 민족’라는 개념은 그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특정한 체제(그것이 민족이라 하더라도)에의 귀속을 지향하는 경향이 그 안에 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어떤 기존체제의 귀속성을 벗어난 민중의 시좌를 강조함으로써 그 혼돈으로 인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또한 확보하고 있다.

문익환에게서 조명되어야 할 초점은 무엇일까? 혹 발제자의 문제의식이 문익환에게서 재조명되어야 할 초점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논평자의 기우에서 비롯되는 쓸데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격화된 한반도의 갈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또한 한반도(적어도 남쪽에 한정하더라도) 안에 다양한 출신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삼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리영희의 평화사상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I. 들어가는 말

고 리영희(1929.12.2-2010.12.5) 선생은 언론인이자 국제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면모를 띠며 한국 현대사를 증언해왔다. 그 과정에서 선생은 시대의 요구와 씨름하며 풍부한 지적 탐구를 전개하는 한편, 민족과 민중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날카로움도 보여주었다. 이 글은 선생의 일생을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반추하여 그의 평화사상을 발견하고 오늘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리영희 선생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고 ‘실천적 지성’으로서 남긴 유산이 방대하므로 그에 대한 평가를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간 선생의 저작을 묶어 2006년 한길사가 ‘리영희 저작집’ 시리즈로 출간해 오늘날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일대기를 통해 교훈을 얻는 작업이 이루어져왔고,¹⁾ 선생의 다양하고 풍부한 지적 자산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해석하고 시사점을 찾으려는 공동작업도 이어지고 있다.²⁾ 이런 다양한 해석과 재생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사유와 실천을 하나로 묶는다면 언론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서 평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선생의 평화사상을 찾아보는 것은 단순한 지적 흥미가 아니라 절실한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출간물에서 선생의 평화 관련 저작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미흡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리영희 선생이 냉전기와 데탕트, 그리고 탈냉전기를 망라하며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

1) 김삼웅, 『리영희 평전』 (서울: 책보세, 2010); 강준만 편저, 『리영희: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서울: 개마고원, 2004).

2) 고병권·구갑우 외, 『리영희를 함께 읽다』 (파주: 창비, 2017); 홍세화·고병권 외, 『리영희 프리즘』 (파주: 사계절, 2010).

동)아시아를 넘나들며 한반도 안팎의 전쟁과 평화 관련 정세를 평론하고 대안을 궁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의 평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평가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문에서는 선생의 평화사상을 먼저 시대적 배경이 준 영향을 더듬어 보고(Ⅱ장), 평화사상과 통일사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평화사상(Ⅲ장)은 반핵 평화주의론,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론으로 소절을 만들어 살펴보고, 통일사상(Ⅳ장)은 통일의 조건, 방안, 방향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맺음말에서는 그의 평화사상이 오늘 한국인들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시대적 배경

리영희 선생의 일생은 그의 생애 시간과 행적, 두 측면에서 한국현대사를 잘 드러내준다.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기,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냉전 해체와 세계화 등등. 여기서는 지면 제약상 선생의 사상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성세대를 30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는 30대를 ‘이립(而立)’이라고 해서 마음이 확고해져 움직이지 않다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30대에 들어선 1960년대 초까지 리영희의 경험은 이후 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정치·역사의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권 상실기에 태어난 리영희는 고향 평안북도 삭주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살다가 1942년 경성공립공업학교에 진학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이 집안의 경제 사정으로 제약을 받은 터였다. 당시 모든 학생들은 학도병이 아니면 근로동원을 나갔다. 리영희도 근로동원에 나섰는데 1945년 초, 선생은 학도근로단 통솔 반장인 경성전기 전기공 최○남으로부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전과 종전의 임박함을 들었다. 최 반장은 “조선이 해방되는 날이 머지않았어. 미국·영국·소련이 그렇게 공약했으니까.” 하며 알타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으며 리영희는 민족의식을 싹틔었다고 회고하였다.³⁾

해방의 기쁨은 겨레 모두에게 한가지였지만 민족 분단의 서막이 올랐다. 청년 리영희는 학업성적이 좋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일반대학에 가지 못하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에 입학한다. 3학년이 된 1948년 3월 승선 실습이 시작되어 그해 가을 상해행 준비지시가 전달

3) 리영희, 『역장: 나의 청년시대』(파주: 한길사, 2006), pp. 105-109.

되었지만 중국 내전이 격화되어 취소되었다. 그 후 10월 말경 부산항에서 소금 1천 톤을 싣고 인천으로 갈 배를 타고 거제도를 지날 때 긴급 회항 무선지시를 받았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리영희는 여수항을 입항하려던 천안호 “갑판 위에 반란군의 사격의 사각을 이루는 철제 돌출물들 뒤에 숨어 철모를 쓰고 구경을 했다.” 그리고 진압군 지휘관의 명령대로 선장과 1등 항해사를 도우면서 선내와 갑판 위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선생은 이 사건을 “동쪽끼리의 총질”이라고 하면서 전투가 끝난 뒤 “인생 처음으로, 뜻하지 않은 와중에 내던져진 동족상잔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⁴⁾

분단이 짙어갈 무렵 민족지도자들의 죽음은 겨레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1949년 6월 어느 날 김구 선생의 사망은 리영희에게 충격으로 다가갔다. 40년이 지나서도 당시 추도가 가사와 곡을 잊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면 백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컸다고 스스로 말한다. 이북에서 월남한 입장의 그 나이의 자신으로서는 김구 선생의 민족애와 애국심 그리고 정의감이 그의 사상과 염원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대학 시절 그의 친교의 기준은 개인적이었고 지역감정을 분열적인 것으로 싫어하고 멸시했다고 말한다. 선생은 그것을 김구 선생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현실적 사회생활에서의 손해를 자위하며 감수했다고 말한다.⁵⁾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3월 리영희 선생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안동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전쟁이 나서는 육군 유엔군 연락장교단 후보생 교육을 받고 통역장교 일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에 통역장교로 뛰어들어 농민들과 대화하는 모험심과 정의감에 불타기도 했지만 죽음 가까이 가보기도 했다. 그에 앞서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말살 행위”로 당신이 부른 ‘국민방위군’ 사건을 직접 목도하면서 “단테의 연옥도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는 없었다.”고 소름 끼쳐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선생은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혀 이웃과 겨레를 죽이는 야만과 비이성을 멀리 하게 되었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국가, 지도자, 직업군인, 일제 강점기의 ‘지원병’ 출신 국군장교, 화려한 ‘애국·반공’ 구호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와 부정, 전쟁 속에서 치부하고 영달하는 자들과 입장성이만 골고(一將成而萬骨枯)로 죽어야 하는 많은 힘없는 백성들의 처지”였다.⁶⁾

국민방위군 사건에 이어 1951년 2월 10-11일에 리영희가 소속된 연대의 3대대가 관여한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피해 규모가 축소되었고 학살 사유가 은폐·거짓 보

4) 위의 책, pp. 139-147.

5) 위의 책, pp. 151-153.

6) 위의 책, pp. 168-202.

고되었다. 리영희 자신은 1982년까지 학살 규모(719명)를 187명으로 알고 있었다고 부끄러워 했고, ‘빨갱이’라는 이유로 젓먹이, 어린이, 노인 등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잔인성에 괴로워했다.⁷⁾ 그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은 다음과 같은 성찰과 결단을 거쳐 평화주의로 승화해나간다.

이 나라에서는 인간 말살의 범죄가 ‘공비’나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이처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 후부터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이데올로기의 광신 사상과 휴머니즘에 대한 멸시를 깨쳐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⁸⁾

전화 속에서 리영희의 군대 생활은 7년 동안 흘러갔다. 선생은 대한민국 군대가 인간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 ‘근원적으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회였다고 회고하면서 군사주의를 경계했다. 또 전쟁 기간의 군대사회는 일본 군대식의 야만적인 폭력이 어디서나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쟁이 빚어낸 군사주의 문화를 폭로하기도 했다.⁹⁾ 전쟁이 끝났지만 부패와 우상화로 물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선생은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회의하고… 진실된 가치를 밝혀내어, 진실 이외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충성을 거부하는 종교 같은 신념”을 만들어갔다.¹⁰⁾

한편, 리영희에게 미국은 양가적인 것처럼 보인다. 영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가 통역장교를 하고 훗날 언론인으로서, 특히 외신 보도에 전념한 것에는 미국에 대한 관심도 작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처음 언론에 발을 들인 <연합통신>에서 외신을 담당하고, 기회가 생겨 미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실감한 동시에 미국식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백인우월주의에는 실망했다. 선생은 또 5.16 쿠데타 등 한국정치 개입과 분단에 관한 미국의 책임을 언론활동과 연구를 하며 깨달아갔다.¹¹⁾

그런 가운데 리영희 선생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등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각에서 보도하면서 미국 대표 언론의 하나와 ‘접속’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미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 특히, 5.16 쿠데타 직후 워싱턴에서 가진 박정희-케네디 회담에 대한 특종기사는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정권안보 외교가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알린 쾌거인 동시에 ‘자유인’ 리영희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한

7) 위의 책, pp. 217-223.

8) 위의 책, p. 225.

9) 위의 책, p. 279.

10) 리영희, 『분단을 넘어서』 (서울: 한길사, 1984), p. 312; 강준만 편저, 『리영희』, p. 46에서 재인용.

11) 리영희, 대담 임헌영,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파주: 한길사, 2005), pp. 260-263.

사건이기도 했다.¹²⁾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일당은 미국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여론을 조작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국민을 통제·동원하고자 했다. 1964년 10월 <조선일보>로 옮긴 리영희는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취재하며 ‘남북한 가입 제안 준비’(11.21)라는 제하의 기사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그의 첫 필화사건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외상 회의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 기사였는데, 이것이 미국이 유엔 총회에 남한만을 초청해 ‘코리안 문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온 관행을 이용해 체제우월의식을 주입한 박정권의 통치방식에 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풀려난 리영희가 박정권의 베트남 파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1966년 가을 중앙정보부는 리영희에게 후한 조건으로 정부 입장에 맞는 현지 취재기사를 요청했다. 야당 대표가 베트남 파병에 찬사를 보내는 시절에 선생은 그 유혹을 물리쳤다.¹³⁾ 진실과 자유를 향한 그의 투쟁이 본격화 된 것이다.

Ⅲ. 평화사상

1. 반핵 평화주의론

1977년 11월 11일 새벽에 이리역 대폭발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요원의 작동 실수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공업용 화약 60톤이 촛불에서 나는 감지할까말까 할 열기에 감응하는 순간 이리시의 70%가 하늘과 땅으로 사라져버렸다. 리영희 선생은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리시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는 TNT는 60톤이 필요했는데, 핵폭탄이었다면 3그램짜리면 충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리시의 TNT 폭발과 핵무기 폭발 사이에 인간적 과오, 실수라는 끔찍한 유사성이 있다고 선생은 갈파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¹⁴⁾

이어 선생은 핵으로 인한 불행이 소련에서만 발생할 까닭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핵원료 누출사고를 언급한 뒤 한국에서 ‘사무삼과(四無三過)’에 빠진 국민의식

12) 리영희, 『역정』, pp. 341-434. 기자 리영희가 케네디-박정희 회담을 기획·추진한 국무성 고위관리를 만나 취재한 결과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에 조속한 만장이양, 그에 앞선 군의 정치관여 금지 및 원대복귀, 경제원조 집행 연기, 군사원조 잠정 동결 등을 언급하며 박 의장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리영희 기자는 이를 워싱턴발 1961년 11월 15일자 기사로 타전했다. 그 파장으로 리영희는 박의장 일행 인사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본사로부터 긴급귀국 통지를 받았다. 리영희, 임헌영 대담, 『대화』, pp. 275-280; 리영희, 『역정』, pp. 435-443.

13) 강준만, 『리영희』, pp. 76-81.

14) 리영희,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리영희·임재경 편,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서울: 창작과비평사, 1988), pp. 265-266.

을 질타하였다. 사무는 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민족적이란 뜻이고, 삼과는 핵에 대해서 인간이성을 과신하고, 기계의 정밀성을 과신하고 또 군사력을 과신한다는 말이다.

선생은 그 중 무민족성과 관련해서 체르노빌 핵유출 사고를 다룬 서울의 유명 신문의 네컷 만화가 그 핵유출이 북한에 일어나도록 기원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동포애도 없고 민족적 감정도 없다고 말한다. 그것을 광신적 반공주의 교육과 선전의 탓으로 린 선생은 우리에게겐 미국만 있고 민족은 없다고 개탄한다. 또 인간이성,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성과 호의에 대한 과신과 관련해서는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한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선생은 “군사력 과신병이 반도의 남북간의 가능한 평화를 얼마나 방해했고 또 지연시켜왔는가!”고 한탄한다.

“남한에 있는 미국군대의 각급 사령관들은 남한을 세계에서 제일 이상적인 군사훈련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무제한 사격지역’, 휴전선 북쪽에 있는 사격목표로 가장 이상적인 살아있는 인간표적. 그뿐이 아니다. 남한은 지구상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땅을 쓰는 임대료조차 달라고 하지 않는 유일한 국민이다.”¹⁵⁾

리영희 선생은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맹목적 신앙심’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핵에 관해 무지한 태도와 상관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선생은 한국인들이 핵에 무지하게 된 원인을 민족 내부문제의 군사적 해결정책,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 핵무기의 위험성과 핵전쟁의 종말성에 대한 무지, 군대와 군사력 숭배사상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 성격상 반평화적, 미국 국익 위주의 선전 결과, 외국의 핵기지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착오 등 5가지를 꼽았다.¹⁶⁾

이상과 같이 리영희 선생은 핵문제에 관한 기본 시각을 표명하고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과 같은 핵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가 핵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선생은 1960-70년대는 미소간 ‘공포의 균형’이 핵전쟁 발발을 억제해왔다면, 1980년대 들어서는 레이건 정부의 핵우위전략, 동시다발전쟁론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미 국방장관 와인버거의 ‘83년 국방보고서’와 한미 ‘팁스피리트83’ 작전 등으로 지적하고, 그것이 미국의 자의적·독단적 핵무기 발사를 견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핵자문위원회나 서독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그로미코 소련

15) 위의 글, p. 272.

16) 리영희, “핵은 확실히 ‘죽음’을 보장한다.” 『역설의 변증』 (파주: 한길사, 2006), pp. 132-135.

외상과 오르가코프 소련 육군참모총장의 발언, 그리고 소련 관영 <타스통신> 보도 등을 예로 들면서 미소 대결이 아닌 제3의 경우, 곧 일본과 소련의 군사분쟁으로 한반도가 핵전쟁화 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¹⁷⁾ 또 미 군사평론가 잭 앤더슨이 레이건이 중성자탄 생산을 명령한 1981년에 미 국방성은 남한을 그 저장소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1983년 방한한 마이어 미 육군 참모총장은 “레이건 정부의 기본적 전략개념은 재래식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 개념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1987년 현재 남한에 4만 명의 미국군대와 약 200여기로 추정되는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다는 9개의 미 고위관리 발언과 언론보도를 인용한 선생의 분석으로 뒷받침된다.¹⁸⁾

실제 냉전 해체 상황에서도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군사위기’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핵개발 계획, 미국의 위기의식 조성, 한국 군부 책임자의 선제공습공격 의사 표명 등으로 인해 절정에 달했다. 그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 위험보다는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 더 컸다는 것이 리영희 선생의 판단이다. 선생은 1945년 미국의 일본 핵폭탄 투하 이후 35년 사이 미국 군부가 핵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구상·협박 또는 준비한 일이 26회 있었는데 그 중 한반도가 핵폭탄 사용 목표로 정해졌던 것이 5회나 된다고 고발했다.¹⁹⁾ 이어 선생은 1991년 4월 12일, 이종구 국방장관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습 공격구상 공개발언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미 군부가 의회에 제출한 <1991년 종합 합동군사정세 평가> 보고서, 체니 국방장관, 솔로몬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리스카시 주한미군 사령관, 칼 포드 국방부 제1부차관보, 파월 합동참모부장 등의 발언을 소개 분석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의 위험성을 평가한 바 있다.²⁰⁾

이런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한겨레의 대응책으로 선생은 첫째, 새로운 정황에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 즉 화해와 평화가 요구되고, 둘째, 분단민족을 뒷받침하는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지향성에 맞서 남·북 단위의 반(半)민족주의가 아니라 대민족주의가 요구되고, 셋째, 언론의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는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²¹⁾ 특히, 선생은 한반도에서 반전반핵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균형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한 후 “복안적 원근법 속에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놓고 보자.”고 제안한다.²²⁾

17) 리영희, “한반도 주변정세의 질적 변화,”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파주: 2006, 한길사), pp. 286, 288-289, 290.

18) 리영희,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동북아의 평화,” 『역설의 변증』, p. 116-117; 105.

19) 리영희, “한반도 핵 위험의 구조: 그 해부와 대안(1991),”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파주: 한길사, 2006), pp. 26-27, 31.

20) 위의 글, pp. 28-30.

21) 리영희, “한반도 주변정세의 질적 변화,” pp. 292-293.

22) 리영희, “한반도의 비핵화·군축 그리고 통일(1993),”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 90.

2.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리영희 선생이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 용어는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면서, 한반도 분단체제가 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분열구조(혹은 냉전구조)의 하위 구성 부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분석틀이다.²³⁾ 다시 말해 세계 안보질서와 달리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안보질서는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리영희 선생의 한반도 분단·휴전체제와 동아시아 냉전구조는 동아시아/한반도 분단체제론과 다를 바 없고, 이후 명명된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의 지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리영희 선생은 서슬 퍼런 반공독재체제 하에서 한반도 분단·휴전체제를 동아시아 비평화의 맥락, 즉 동아시아 분단체제 담론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낸 최초의 학자이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체제의 특이성은 남한 군대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직접 지휘권 하에 있는 독립적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밝힌 지 오래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군 작전지휘권이 미국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권리가 이양된 지 오래다. 주한 미공군은 일본 요코다에 사령부를 둔 미 제5공군에 속한다. 제5공군은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일본 영토와 주변 공군을 통솔하고 있다. 제5공군이 주축이 된 동북아 공군 지휘체제는 일본군 공군과 한국 공군을 사실상 통합된 지휘체통에 편입하고 있다는 규명은 종합적인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둔 그의 평화론의 일부에 불과하다.²⁴⁾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군의 형태를 띠고 위계적인 지휘편제를 형성한 것을 공론화 한 것도 리영희 선생이다.²⁵⁾

선생은 닉슨독트린이 미국의 베트남전 지속에 대한 부담,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림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한국이 종속적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조치임을 미국과 일본의 각종 외교 문서와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종합 검토해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바탕을 두고 선생은 남북한 쌍방이 그 배후의 강대국들과 더불어 형성하는 군사 공동체제 때문에 남북한 민족

23) 이상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2호 (2006), pp. 5-50; 이상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파주: 한길사, 2009); 정영신, “동아시아 분단체제와 안보분업구조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94권 (2012), pp. 5-48; 백원담,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24) 리영희,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동북아의 평화,” pp. 112-113.

25) 한국과 미국은 1972년 닉슨독트린의 발동으로 수도 북방 중서부전선에 배치된 한국군 1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을 그 전역에 배치된 미국군과 합쳐서 제군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978년 카터 대통령 재임시 전체 한국 군사력을 주한미군 제8군사령관의 지휘권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개편·창설했다. 위의 글, pp. 113-114.

이 스스로 긴장을 완화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70년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²⁶⁾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형성과 남북한 긴장의 상관관계를 적확하게 드러낸 분석이다.

리영희 선생은 동아시아 분단체제, 곧 두 블록 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하나의 사례분석이나 특정 이론의 규명 차원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후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분석한 후 1970년대 한미일 안보관계를 1960년대부터 확립되어 온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맥락에서 분석한 것은 그 대표적인 연구사례이다.

197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것이다. 리 선생의 분석에 따르면, 닉슨의 아시아 정책은 ① 월남전쟁 종결을 위해 종래의 월남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② 아시아 국가들의 자주국방 강화로 미국의 부담을 축소하고, ③ 아시아 우방국가들의 집단협력체제 강화에 일본의 지도적 공헌을 증대하고, ④ 중공과의 접촉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기으로 미중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 중 두번째와 세번째 의미는 미국의 한국 안보 책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것을 말하고, 이는 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과 거기에 한국이 편입됨을 의미한다. 선생은 1970년의 현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한 1964년 길 패트릭 미 국방차관의 구상대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²⁷⁾ 5년 후 닉슨-사토오 미일 공동성명(1969.11.17) 발표 직후 가진 사토오 일본 수상의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은 패트릭 구상이 구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군대가 일본 국내의 시설·지역을 전쟁 작전행동의 발진기지로 이용해야 할 사태가 생기면 일본정부는 (미국의) 사전협의를 긍정적이고도 재빠른 태도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²⁸⁾

1980년대 동아시아 분단체제는 무한 군비경쟁으로 그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이 리영희의 분석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경쟁이 가속화 되어 미소는 동맹국가들의 영토를 기지로 삼는 중거리핵미사일 경쟁을 전개하고, 특히 미 레이건 정부는 우주공간으로 핵군비경

26) 리영희, “한미 안보체제의 역사와 전망(1971),” 『전환시대의 논리』 (파주: 한길사, 2006), pp. 504-545.

27) 패트릭 구상은 한일국교정상화로 한반도 분쟁시 일본의 개입이 가능해져 미 지상군 증강 없이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발상이다. 패트릭의 발언은 『세계週報』, 1964년 5월 7일자; 리영희, “미군 감축과 한·일 안보관계의 전망,” 『전환시대의 논리(1974)』 (파주: 한길사, 2006), p. 249에서 재인용.

28) 리영희, “미군 감축과 한·일 안보관계의 전망(1970),” 『전환시대의 논리』, pp. 265.

쟁 확대시켜 소련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약화시키려 하였다. 일본 군사대국화²⁹⁾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지향성도 뚜렷해진다. 선생은 이러한 군비경쟁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동맹국가들에게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한다. 아래 화살표로 이어진 서술은 리영희 선생이 만든, 두 핵강대국의 군비경쟁이 동맹국들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들이다. 소련 군사력 우위(설)→전쟁 분위기 고조→동맹국들의 군사력 증강 경쟁→소련의 무제한 군비강화 대응→전 세계적 규모의 군비경쟁 가열화→모든 국가 사회의 군대식 사고방식·가치관 지배→군부 지배적 국가이념화→평화·인권·민주주의 애호 정신의 질식→무력·전쟁 숭상 기풍→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무장·이해관계 해결 유희→국지적 핵전쟁→전면 핵전쟁→인류 말살!³⁰⁾

1980년대 들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1983년 1월 22일 서울을 방문한 미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 대장의 발언을 그 근거로 꼽는다. 마이어 대장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군사협력체제가 동북아시아의 방위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3국 간의 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 부담을 줄이며 군사적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한일관계는 50년대 백지상태에서 60년대의 정치관계, 70년대의 경제관계, 80년대의 군사관계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90년대 입법화 단계, 즉 법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리 선생의 진단이다.³¹⁾ 실제 1990년대 냉전 해체의 순풍이 동북아에서도 부는 것 같았지만 대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소련 해체로 미중 협력관계가 약화되고 대신 미일 안보협력이 증대되었다. 한반도는 일시 대화 후 북핵위기를 거쳐 긴장상태가 가시지 않았다. 선생은 이를 “제로섬’적 대결 구조”라고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전환과 비생산적인 군사통치체제의 청산을 위해서 군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³²⁾

3. 한반도 평화체제론

동아시아 분단체제에 관한 리영희 선생의 분석은 한반도 분단·휴전체제로 이어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토대가 된다. 분단·휴전체제는 논리적으로는 통일·평화체제의 대립항이고 현실적으로는 통일·평화체제의 기원이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평화체

29) 일본은 자위대 창설 3년 후인 1957년부터 5개년 군비증강 계획 5차례 거듭하고, 1983년도 군사 예산을 국민총생산(GNP) 1% 이하 제한선을 깨고 1.19%로 증대한다. 리영희, “한반도 주변정세의 질적 변화,” p. 275.

30) 위의 글, p. 273.

31) 위의 글, pp. 279, 281-281.

32) 리영희, “제로섬’적 대결 구조에서 경제 경쟁으로: 전환기 동북아 정세의 성격과 남북관계(1993),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270-275.

제를 나누어 통일문제는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평화체제를 다루고자 한다.

평화체제에 있어서 평화는 평화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평화의 보호는 평화유지와 평화회복으로 이루어진다. 평화유지와 관련한 조치로는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 구소련 및 중국과 안보조약을 맺었다. 물론 오늘날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맺은 안보조약의 효용성은 의문을 받고 있다. 또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불가침을 공약하였고 이후 불가침 부속합의서도 채택했지만(1992. 9. 17.), 법적 구속력은 물론 실질적인 의미도 갖지 못했다. 한편, 평화회복과 관련해서는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등이 있다. 유엔 헌장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평화보호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 관련 당사자들이 맺은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을 일시 중단시켰지만 평화조약(혹은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상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반도 평화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³³⁾ 그렇다면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상하였는가?

리영희 선생의 평화체제론은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양자관계의 조합, 즉 한미, 북미, 남북관계의 틀에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실제 선생의 논의에서 휴전체제의 근간은 한미 동맹관계와 북미 적대관계이다.

먼저, 선생은 한미동맹관계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발상때(1952.3)부터 1990년대 초까지를 5단계로 나누어 다루면서도 불평등 기초 위에서 운영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1953년 11월 비준된 상호방위조약은 무력 북진통일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보증을 추구하는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할 ‘연루의 동맹 딜레마(Alliance dilemma of entrapment)’를 한국 영토 사용권으로 상쇄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타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생은 그 결과 대한민국의 대미 예측구조가 법제화 되었다고 결론 내린다.³⁴⁾

중속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 작전통제권은 말할 것도 없고 무기도입 협상,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범죄 처리 등에서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한국의 저자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에 대한 성역화 된 한국인의 인식으로 인해 항상 한국에 불리하게 결정되어 왔다. 이에 관해 선생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한국(국민)의 생존보호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는 착각과 주둔비 분담률에서 이미 1982년에 미국 동맹국 가운데 최고의 영예를 수여받고 있는 현실 사이의 상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라는 미 하원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

33) 서보혁, “한반도 평화체제,” 『안보현안분석』, 2017년 10월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p. 5.

34) 리영희,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1992),”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173-192.

했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선생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미 국방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³⁵⁾

다음으로 북미관계를 논하면서 선생은 정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의학용어를 원용한 바 있다.³⁶⁾ 선생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미군의 매력적인 전쟁 훈련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미국 군대가 평시에도 전시를 상정한 전쟁훈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미 군부는 매년 한국에 35억 달러어치의 무기판매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남한에는 41개의 미국기지(1989.11.2. 현재)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나서 선생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사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태도를 바꿀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선생은 미군의 군사전략과 미군 장성들의 발언을 분석한 뒤 부정적인 답을 내린다. 북한에 대한 미국 군부의 공격의지는 북한의 핵시설 유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어 선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풀지 못한 원한’을 6·25전쟁에 승리 없이 비긴 것을 비롯해 9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P.T.S.D. 증후군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북한측 역시 ‘조국 통일전쟁’을 승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으로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역 P.T.S.D 증후군’ 환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선생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하고 양국간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조약 체결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선생은 좀 더 과감하게 한반도 위기의 주요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위 논문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1999년 논문에서 선생은 북미 미사일 대결 구도를 분석하고 이어 한반도에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역사적 전개를 논의한 뒤에 미국의 책임을 부각시킨다. 휴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장화 및 대북 핵·미사일 공격 계획 지속, 핵 불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독트린 채택 등을 지적한다. 그 논리의 연장으로 한반도 군사 위기의 해법도 미국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는다.³⁷⁾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리영희의 평화체제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광주민중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씨가 1982년 1월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이하 잠정협정안)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남북 통일의지 결집> 통일헌법 제정> 통일국가 수립을 골격으로 하는데, 거기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 휴전체제 유지 및 군비경쟁 지양, 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등 몇 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선생은 잠정협정안을 동서독 기본조약(1972.11.8. 조인)과 비교

35) 리영희, “‘한국인 똥 까무러치기’ 증상(1989),” 『자유인』 (파주: 2006, 한길사), pp. 213, 215-216.

36) 이하 리영희, “미국-북한 핵문제 P.T.S.D적 특성(1992),”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58-80.

37) 리영희, “북한-미국 핵과 미사일 위기의 군사정치학,” 『반세기의 신화』 (파주: 한길사, 2006), pp. 141-184.

검토한다. 선생은 잠정협정안이 독일방식을 토대로 하거나 모방하려 할 때 거기에는 적지 않는 모순이 수반된다고 지적하면서 잠정협정안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분단 고착화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사실 휴전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사항이 담긴 것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또 선생은 남북 간에 평화조약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제5항(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을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남한의 의사가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³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군비축소와 평화조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생의 지론이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씨는 남북관계 개선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교차승인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 대해 리영희 선생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대담(1988.7.12)에서 7.7선언 그 자체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분단의 합법화를 위한 선언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한다. 선생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남북의 군사대결임을 전제하고, 현 휴전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선언이 효과를 갖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선언에 새 항목을 하나 추가해 7개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 군사대결 체제를 없애는 “40년 묵은 한국전쟁의 현 휴전협정을 협정 조인 당사자들에 의해 평화협정으로 바꾼 것을 제안한다. 선생은 평화조약의 내용으로 남북한 군대와 군사비의 축소, 한반도에 있는 외국 기지와 핵무기의 철폐 등을 제안한다.³⁹⁾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제거하고 잠정적인 정전협정을 확고하고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것만이 한반도가 다시 동북아시아의 핵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유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⁴⁰⁾ 그가 보기에 독일과 달리, 반도의 남북 사이에는 베를린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제3국과 관련된 국경선 분쟁도 없는 훨씬 단순한 조건이다. 선생은 소련도 중국도 북한에 군대와 군사기지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평화조약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없는데, 단지 평화조약 체제가 될 때 불이익을 보게 되는 관계국은 미합중국이다.⁴¹⁾ 선생은

38) 리영희, “‘독일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판,” 『역설의 변증』, pp. 55-103.

39) 리영희, “군사적 측면이 제외된 노 대통령 선언,” 『자유인』, pp. 58-60.

40) 리영희,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동북아의 평화,” p. 131.

41) 리영희, “‘독일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판,” pp. 93-94.

미국이 평화조약에 응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제시해왔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주요 당사자인 남북미 사이 세 양자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조약 등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주류 연구자들과 달리 선생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군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군축과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과 같은 법제도적 합의는 허약하고 기만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리영희 선생은 광적인 반공·반북의식과 숭미사대의식과 같은 마음의 우상을 타파하고 평화주의 의식으로 전환할 것도 평화체제 수립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점을 덧붙여야 하겠다.

IV. 통일사상

1. 통일의 조건

평생을 평화·군축연구에 헌신해온 리영희 선생은 통일문제 역시 평화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접근하였다. 무엇보다 통일이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등을 통한 신뢰구축과 전쟁가능성 축소의 조건 속에서 평화적으로 추진할 것을 누차 강조하였다.

선생은 국가이익 중심의 국제관계가 활기를 띠던 1970년대에도 무력으로는 국익은 물론 통일도 어렵다는 점을 1,2차 세계대전시 프랑스의 구주 최강육군이나 마지노선도 프랑스를 구할 수 없었다는 교훈에서 도출해냈다. 그러면서 국방이나 안보 개념의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생존형식을 상호간에 모색하고 정립하지 않는 한 같은 민족의 군비경쟁은 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대국에 대한 경제·군사·정치적 의존상태를 영속화 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혈 없는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민족적 목표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⁴²⁾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인데, 선생은 그 주요 방안으로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시한다. 선생은 “평화조약

42) 리영희, “미군 감축과 한·일 안보관계의 전망(1970),” pp. 285-286.

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하지 않는 한 남북은 언제까지나 ‘전쟁 당사자’적 관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역설한다. 물론 전쟁 당사자 사이에 평화조약의 체결 없이 ‘공동선언’ 채택의 방식 등으로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있지만, 선생은 그런 방법은 평화조약 체결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과도적·잠정적 합의로 그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또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본격화하려면 그 각 분야와 문제의 활동을 규정하는 많은 조약·협정·각서 등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수반되는데, 그것도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생은 강조하며 미일, 중일, 일소 등 양자간 선례를 예시하기도 했다.⁴³⁾

선생은 또 주체적인 태도 역시 통일의 조건으로 거론했다. 궁극 목표인 통일에 앞서 우리 자신과 반도 내외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성을 갖고 초강대국들의 핵폭탄의 불세례를 불러들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은 군사우위사상과 군비경쟁열은 한 국가 사회의 체질적 군사화를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하면서 질적으로 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화해와 평화, 민족 차원에서는 대민족주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촉구했다.⁴⁴⁾

리영희 선생은 1994년 군을 대표해서 통일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의 유력인사와 토론회를 가졌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때 무엇보다 반가웠던 일은 그 연구기관이 그리는 이상적인 ‘통일된 국가의 상’이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힘 있고 건강한 국가”라고 회고하며, 그것이 당신이 그리는 통일국가상과 일치한다고 기뻐했다. 다만, 선생은 ‘건강한’ 또는 ‘건전한’ 국가란 무엇보다도 평등·반예속·자주·자존·독립국가로 정의하면서, 그쪽의 해석은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에도 그 ‘통일국가’는 현재와 다름없이 미국 군대의 기지여야 하고 미국군대가 그대로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생은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회수한다는 것이 ‘작지만 건강한 통일국가’ 수립의 한 선행적 충족조건으로 꼽았다.⁴⁵⁾

선생은 또 민족정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도 통일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언급해왔다. 베를린 장벽 붕괴 10여일 후에 노태우 대통령과 폰 바이체커 대통령이 가진 한독 정상회담에서 생긴 일화를 소개하면서 통일의 조건을 제시했다. 베를린 장벽 후 한국인들에게도 ‘낯은 관념’, 특히 군사주의와 냉전사상에 변화를 기대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바이체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에는 정치범이 한 사

43) 리영희, “‘독일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판,” pp. 96-98.

44) 리영희, “한반도 주변정세의 질적 변화,”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pp. 292-293.

45) 리영희, “작지만 건강한 통일국가란?(199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 208.

람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바이체커 대통령은 “국민의 북한 왕래를 범죄 취급하지 마시오”라고 충고했다. 동독의 변화를 부러워한 노 대통령은 서독 지도자들에게 “북한이 동독 같았으면 남북한 문제가 잘 풀릴 텐데…”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생은 ‘동감’을 표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같은 논리로 “남한이 서독 같았으면 남북한 문제가 잘 풀릴 텐데…”라는 개탄 역시 진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비판에 허심탄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독과 한국의 차이를 6가지로 열거하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반성과 독일의 교훈을 배울 것을 지적했다.

그것은 첫째, 동서독과 달리, 남한은 친일 민족반역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해 국가의 덕성과 인격이 쌓지 못했고, 둘째, 서독은 남한과 달리, 동독을 ‘괴뢰’나 ‘반란집단’ 등으로 대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남한과 달리 서독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 있다. 셋째, 서독에서는 정부에 의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없다. 무슨 사상이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 정부가 주도하는 반공주의 교육이 팽배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넷째, 서독에는 군대는 있지만 군사사회가 아니라 평화·반전·반핵 지향적 사회다. 다섯째, 서독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근로대중들에게 고루 부를 분배하고 있다. 여섯째, 서독의 군사 주권은 어느 외국에 양도돼 있지 않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도 큰 발언권을 갖는다.⁴⁶⁾

2. 통일 방안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 통일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민족공동체의 재현, 동북아 평화에 공헌, 제국주의 유산 청산, 2차 대전의 실질적 종결, 냉전체제의 실질적 종식, 비자주적 내적 역사 청산, 인류사회 공헌 및 민족 번영의 국가이념 설정 등 다각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알타협정 등 전후 14가지 분쟁처리방식을 비교 검토하면서 각각 통합과 분할,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 등 단일한 형태를 띠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어 선생은 남북한 모두 극단적 대결만 일삼아온 데 대한 자기비판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체제구조 결정론 및 광적 반공주의 비판,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인과관계의 구조 안에서 생각할 것, 남북한 이질화에 대한 균형적 이해 등을 촉구했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이 미국과 남한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는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런 논

46) 리영희, “남한이 서독 같았으면야...(1989)”, 『자유인』, pp. 224-226.

리의 연장선상에서 선생은 통일방안으로 일종의 수렴형 통일론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변화하는 것만큼 남한도 인간다운 삶의 사회로 탈바꿈해야만 사람이 살 만한 가치 있는 통일국가를 기대할 수 있다.”⁴⁷⁾

리영희 선생의 수렴형 통일론은 장기간의 분단과 지속·강화된 군사적 대결을 배경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선생은 냉전 해체가 ‘제로섬’적인 대결구도에 기반을 둔 냉전적 흡수통일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초 한소, 한중 수교가 남한에게 유리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지 도발을 준비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구소련과 중국은 독일 통일 경험을 목도하면서 흡수통일 혹은 북한체제 붕괴가 초래할 역내 혼란을 우려해 흡수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의 판단이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 패권주의, 중국과 소련의 시장경제화를 통한 대변혁과 북한의 내외적 불안요소 증대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소들도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여기에 남한의 성공, 북한의 실패로 요약되는 남북한 동시 교차승인 구도의 미완성은 북한의 위협의식을 고조시켜 북한체제의 대내 결속과 주변 긴장고조를 초래할 가능성도 흡수통일의 비현실성과 평화정착을 우선한 점진적인 통일의 당위성을 말해주었다.

리영희 선생은 위와 같이 냉전 해체 이후 동북아 정세를 둘러본 뒤 통일 가능성과 통일 방안을 다음 두 단계로 전망한 바 있다. 통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 일정한 남북 연합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보았는데, 일방적 점령·흡수가 아닌 바에야 정치적으로 무슨 용어를 쓰건 두 개의 국가가 연립하는 단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였다. 그렇지만 양측의 체제가 완전히 단일화 되는 완전한 통일은 그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남북한의 공동 변화 없이는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기서 선생은 다시 수렴형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남한이 서독으로 수준으로 민주화되고 북한도 동독 정도로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동서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⁴⁹⁾

흡수통일론과 함께 남한에서는 분단고착화를 방조하는 주의주장도 지속되어 왔다. 냉전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통일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전두환씨가 1982년 발표한 잠정협정안도 일종의 흡수통일 방안이라는 게 리영희 선생의 결론이다.⁵⁰⁾ 선생

47) 리영희, “민족통일의 세계사적 인식(1997.4.5.)”, 『스핑크스의 코』(따주: 한길사, 2006), pp. 250-276.

48) 리영희, “제로섬적 대결 구조에서 경제 경쟁으로: 전환기 동북아 정세의 성격과 남북관계(1993.)”,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270-272.

49) 리영희, “현 상태로 통일되면 불행한 사태 초래(1993.)”,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 116.

50) 이하 리영희, “독일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판”, pp. 62-103.

은 잠정협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본조약은 통일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독일 분단을 합법화 하고, 통일은 상호합의에 의해서 거론될 필요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생은 잠정협정안이 기본적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의 틀을 원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동서독이 통일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른 길을 제시한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한반도 민족이 통일된 단일 정치단위로서 내정을 관리하고 밖으로 자주 독립의 실체와 노선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주변 열강은 반드시 통일적 국기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자주독립·완충적 기능을 견지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분할의 발상이 생긴다. 셋째, 자주독립·완충 기능을 국제화 하는 중립화 통일 방안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선생은 이 세 측면을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논증하고 있다.

리영희는 이어 잠정협정안의 7개항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흡수통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제2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지만, 6.23선언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과 휴전협정 언급 없이 이 조항을 제의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제4항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대목이다. 선생은 제4항이 잠정협정안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자 잠정협정안의 동기에서 목표까지 이 1개 항목에 압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휴전체제가 존속되는 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당연한 상황논리로서 지속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제4항은 실제 상황과 그 상황의 논리를 거꾸로 결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생은 또 제5항 ‘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가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가 빠진 것은 군사과학 지식의 유출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제6항 ‘쌍방의 기존 국제조약의 존중’은 통일 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조약들은 서로가 수정하거나 폐기·소멸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도리에 맞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소상호원조조약, 조중상호원조약, 그리고 남한의 작전지휘권 문제 등을 거론한다.

3. 통일 방향

리영희 선생이 밝힌 통일의 방향은 크게 두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의 방향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선생은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1987년에 출판한 『역설의 변증』의 한 논문에서 40년 만에 해빙하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에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통일의 논리를 탐색한다.⁵¹⁾

선생은 위 논문에서 긴장완화 징후를 북한과 역내 안보정세에서 찾아내는데, 북한 내 징후로 1984년 1월 11일 3자회담 제안을 거론한다. 선생은 3자회담안이 랭군사태로 초래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책략이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향한 서방국가들과의 교류 및 투자 유도를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신정책, '화해의 신호'로 해석한다. 선생은 또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외교의 피곤,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과 그에 유리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중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 등과 같은 주변 요인들도 긴장완화의 징후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선생의 눈에는 그런 징후들로는 평화통일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위기구조를 평화구조로 대치할 제도와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치하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과 주한 외국군대 주둔 문제 해결이 포함된다. 선생은 이 두 문제와 관련한 전후 제네바 고위급회담의 실패와 1970년대 유엔 총회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폐지 및 유엔사령부 해체 결의 통과 등을 평가하며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선생은 특히 6.25 이후 얼마 동안 통용되었던 주한미군의 전쟁역지 역할론은 북한의 공격가능성과 능력, 그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동조 가능성 등으로 볼 때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선생은 이어 평화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통일의 형식과 형태, 분단국가 정부의 유일 합법성 문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주체, 상호승인·교차승인·유엔동시가입 등을 다루고 있다. 거기서 선생은 1982년 1월 남한정부의 잠정협정안을 휴전체제, 곧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고, 1984년 1월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은 북미 평화조약 체결 >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 남북 통일회담 등 단계적인 접근인데 남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생은 평화통일 논의에서 남한이 북한과 대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한미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남한은 평화체제 수립에 입장이 북한에 비해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민족 차원의 평화통일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은 분단과 적대를 정당화 해온 일련의 허구적식 타파와 균형된 감각을 강조한다.⁵²⁾ 리영희 선생이 평생을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 문제를 궁구하면서 일관되게 견지한 자세가 '실사구시'였다. 선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상에 도전하는 고통을 무릅써야 인간의 행복과 사회

51) 이하 리영희,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 논리," 『역설의 변증』, pp. 19-54.

52) 이하 리영희, "학생들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1998)," 『반세기의 신화』, pp. 306-344.

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선생이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며 광적인 극우·반공주의⁵³⁾의 허구의식에 도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선생은 또 맹목적·감정적 애국심도 대표적인 허구의식으로 지목하고, 베트남 전쟁 관련 미국 행정부의 잇달은 거짓에 대한 〈뉴욕타임스〉, 〈와싱턴포스트〉의 비판 기사를 언급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지식인의 책무를 이렇게 강조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집단이 국민을 속이고 전쟁을 계속하는 배신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지식으로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반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애국이다. ... 소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밖에 아닌 것을 국가이익이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파렴치하고 잘못된 관념은 전부 반애국적인 것이다.”⁵⁴⁾

리영희 선생은 또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통일의 대상인 북한(문제)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가령, 베트남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인 1970년대 초 닉슨독트린으로 미국이 한국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자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자 북한도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균형된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선생이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한 것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선생은 위 사례를 통해 남북한이 상대방을 쥐구멍으로 몰아넣는 식의 군사적 압박이나 안전에 대한 공포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선생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반공·반북시각에 물들어 있는 주의 주장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은폐된 사실을 발굴하거나, 편향된 주장을 균형 있게 교정하거나, 일반화의 오류를 새로운 사실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생은 미국이 소련과 동구국가들, 즉 백인종 국가들에게는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그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1990년대 초에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핵사찰도 거부하는 국가가 28개국이나 되었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를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 북

53) 선생은 광적인 극우·반공주의를 “남북한 관련됐거나 남북한이 당사자일 경우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인과관계로 일어난 것인가 따위의 지성적인 사실 인식의 노력이 접어두고, 무조건 처음부터 조건반사적으로 북한측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려버리는 정신적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글, p. 306.

54) 위의 글, p. 314. 리영희 선생의 지식인론에 대해서는 이대근, “다시, 지식인의 책무를 묻다.” 홍세화, 고병권 외, 『리영희 프리즘』, pp. 126-145 참조.

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대규모 고강도 훈련이 냉전시기 유럽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쟁광 북한’의 핵개발론을 회의하였고 북한의 남침위협론을 남북한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했던 것이다.

선생은 위와 같은 비판적 독해와 실증을 통한 각종 허위의식 폭로에 그치지 않고, 평화 통일론에 적합한 시각으로 이중잣대를 거두고 역지사지하는 자세, 역사에서 배우는 자세, 상생하는 균형적인 접근 등을 제안한다. 가령, 핵무기를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동서독에 집중해있었기 때문에 (핵)전쟁의 위협도 동서독에 더 많이 있었는데도 서독 정부의 사회복지비는 대체로 군사비의 2배였고, 우리는 군사비가 평균 4배, 상대적으로 말하면 남한의 복지예산은 군사예산의 1/8였던 사실에 앞에서 성찰하고 변화할 것을 제안하는 식이다.

V. 맺는말

리영희 선생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부터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시대의 요구를 대변해온 실천적인 지식인이자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선생은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식민주의, 국가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등을 배격하고 대신 진실, 자유, 이성, 인권, 진실을 추구하며 사회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평화구축에 진력해왔다. 리영희 선생은 진정 평화주의자였던 것이다.

선생의 평화사상은 사변과 거리가 먼 대신 언제나 민족과 민중의 고난 속에서 그려진 것이었다. 좁은 의미에서 선생의 평화사상은 반핵 평화주의론,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생의 반핵 평화주의론은 군수용·민수용을 막론하고 핵 일반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휴전체제와 동아시아 분단체제 하에서 핵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비핵국가(특히 북한)에 대한 핵공격 독트린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선생은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의 핵개발 과정도 그런 구도 하에서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핵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평화를 국제적 차원(국가안보)은 물론 사회적 차원(국민안전)에서 볼 때 선생의 반핵 평화주의론은 더욱 주목을 받을 가치가 크다 하겠다. 또 선생의 반핵 평화주의론은 핵전쟁 위험까지 거론되는 목하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핵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목표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미국의 구

속력 있는 대북 안전보장의 동시이행 구도 만들기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언론의 분발이 요청되는데 선생의 ‘사무삼과(四無三過)’론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한편,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은 선생의 논지로는 동아시아 냉전구조에 다름 아니다. 이 개념은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가 공산진영의 대륙권과 자유진영의 해양권으로 대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휴전·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선생은 냉전시기(데탕트 포함)의 동아시아 역내 갈등이 냉전 해체 이후 약화되기는커녕 강화되고 있는 점을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특히 위계적인 한미일 안보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찾고 있다. 선생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와 숭미사대의식을 주입해 국가안보를 미명으로 정권안보를 추구해왔다고 비판한다. 선생의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은 한미일 3국을 위시한 국제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는 동시에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이 역내 평화구축에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이상 두 차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탐색하고 있는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군축을 제안하고 있다. 선생은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한국에게는 종속적인 한미동맹관계의 개혁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이 난망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선생의 지론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은 기득권 구조로 굳어진 기존 휴전·분단체제와 갈등을 수반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할 것이다. 가령, 국내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해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선후 혹은 선택의 문제로 파악하는 자세는 평화체제 구축과는 멀어 보인다. 또 한미동맹관계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설정해놓고 평화체제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반도 문제의 원심력이 커진 오늘날 평화와 통일 모두에 있어 구심력, 곧 남북한 협력을 복원할 필요성이 선생의 지론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

둘째, 선생의 통일사상은 (좁은 의미의) 평화사상에 비해서는 그 내용과 체계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생은 통일의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 자주적 태도, 민주주의 공고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통일 방안으로는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평화공존 하에 남북연합을 거친 후 점진적인 수렴형 통일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방향으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민족(남북) 차원에서는 군축을 비롯해 적대와 분열을 조장하는 각종 허위의식 타파, 성찰 및 상호존중의 자세를 촉구한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선생의 통일사상은 평화사상과 일부 중첩되면서 통일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말해주는지도 모른

다.

리영희 선생의 통일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존중과 공존의 자세로써 서로 닮아가는 통일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북한을 악마시 하고 그를 통해 한국사회의 치부와 약점을 은폐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군사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온존시키는 자세에 다름 아니다. 대북 적대의식에 기반한 대북 강경정책이 낳은 결과는 오늘날 북핵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남북대결 상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리영희 선생이 당신의 평화사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체론적인 시각을 취하고 거시와 미시의 연구방법을 결합한 점이 눈의 띄는데, 이는 선생이 추구한 진실을 찾아가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이는 평화가 절실한 때에 평화를 궁구하는 지식인들이 본받을 연구자세이기도 하다.

〈토론〉 한반도 위기 국면에 빛나는 리영희의 평화사상

이대근 (경향신문)

냉전의 금기를 깨고 평화의 가치를 발굴한 리영희

언론인일 때나 국제정치학자일 때나 변함없이 냉전의 금기와 고정관념을 깨고 냉전의 얼음장 밑에 버려졌던 평화의 가치를 끄집어낸 평화의 전도사였다. 평화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언론인과 학자의 차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일생은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평화 추구라는 점에서 일관됐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활동이 오늘 날에도 빛날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냉전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라는 영원한 가치, 그리고 평화라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가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요즘 한반도 상황에서 리영희 평화사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실한 70년

한미동맹의 맹주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평화의 확장을 제약하는 역할도 했고, 오늘 날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원인을 미국이라고 했던 리영희 선생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보수 정권의 차이 없이 한미동맹을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그 결과, 남한을 북한 및 중국 위협에 맞서는 전진기지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율권을 획득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득할 수 밖에 없다.

북핵 미사일 위기의 씨앗은 누군가의 불안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10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의 핵무기가 장기간에 걸친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피어린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억제력으로,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을 들씌우려는 폭제의 핵구름을 몰아내고 인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북한이 핵무기에 평화 이상의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관점에서 분단 70년은 불안의 시기였고 따라서 불안을 해소해줄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세월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는 외면했고, 그 결과 북한은 체제 안전을 담보해줄 평화의 대체재인 핵을 선택했고 그런 북한에게 핵은 절대 가치가 아닐 수 없다.

70년만에 부각되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

리영희 선생도 강조했듯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군사 문제이다. 남북간 교류 및 협력도 해봤지만, 군사 문제에 진전이 없는 조건에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리영희 선생이 7.7 선언의 한계를 휴전체제 유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핵심을 짚은 것이며 이는 오늘 날의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다가간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시도 정전체제의 불안과 불편함을 잊은 적이 없다. 남한은 정전체제의 수혜자였지만 북한은 정전체제의 피해자였다. 남한은 막강한 한미연합전력, 미군의 전술핵으로 북한을 압도했고, 북한은 열악한 재래식 군비로 버텼다. 그런 대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적 번영을 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남한은 군사적 우위가 보장되는 정전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고 북한은 그걸 깨려 했다. 당연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에 남한은 소극적이었고, 북한은 적극적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깰 수 있는 현상변경을 준비했다. 물론 그 역량을 다 갖추기 전까지는 남북 대화, 다자회담하며 핵협상을

통해 핵동결도 하며 시간을 벌었다. 결국 수소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보답을 받은 북한은 이제 곧 고삐가 풀릴 것이다. 이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 기성 질서, 기존 관계를 존중하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해졌다. 요즘처럼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 군사문제임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준 준 시기는 없었다.

앞으로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높은 비용을 치르며 정전체제를 고수할 것인지,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리영희 선생이 평생 강조해온 평화 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요즘 만큼 체감하는 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체제 전환을 사고하지 않는 한미는 군비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는 리영희 선생이 우려하던 바 그대로이다. 군사적 대결상태가 평화의 부재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화 만들기 논의는 실종되고 군비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은 사드 조기 배치, 미사일 탄두 중량해제, 핵잠수함 도입으로 대응했고 전술핵 재도입론도 한동안 방치했다. 평화가 사라지고 무기 숭배 혹은 물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더욱 미국에 정치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0년간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았는가

리영희 선생이 지적한 대로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만이 아니라 남북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미국책임론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당장 미국을 위협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무시해왔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지위, 성격,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동맹의 틀도 재조정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유엔사령부 폐기는 말할 것도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책임론

평화체제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적인 상태를 탈피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북한이 적의 지위를 상실하면 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한국의 정치사회 구조가 무너진다. 군비증강에 의존한 세력이 힘을 잃고, 한미동맹의 존폐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기성 체제의 물적, 정신적 토대도 무너질 수 있다. 정전체제 위에 구축된 한국의 정치사회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평화 체제 전환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북한 책임론

북한은 평화의 부재로 인해 초래되는 위협과 불안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노력을 한 적은 없다.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불안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만이 아니다. 평화도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 그래서 북한은 결정적인 때에 적대 관계의 해소 보다 평화의 부재 상태를 선호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보다 평화가 북한 체제를 더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북한은 평화를 감당할 수 없고, 평화를 포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의사도 없다. 북한에게 평화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다. 내부 평화는 김정은 정권의 변화, 즉 정권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가 오지 않은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세 당사자가 평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화를 진정 원했다면 왜 전쟁 이후 64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지속했겠는가?